

월간

재정포럼

2023. April
Vol.322

04



권두칼럼

네 가지 파도를 넘기 위한
R&D 투자
| 안준모

현안분석

복권(로또 6/45) 가격의 결정
| 정다운

전국 주택가격 격차를 통한
지역 불균형 추이 분석
| 박정흠

정책연구

근로자 소득지원정책의 발전방향
: 근로장려세제의 확장 외

정책토론포트

2023년도 PEMNA 예산분과 회의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2024회계연도
대통령예산안 발표 외

Kipf

재정포럼

2023.04 Vol.322

월간 재정포럼 2023년 4월호 통권 제322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044) 414-2132 홈페이지 www.kipf.re.kr

CONTENTS

권두칼럼

02 네 가지 파도를 넘기 위한 R&D 투자 | 안준모

현안분석

08 복권(로또 6/45) 가격의 결정 | 정다운

32 전국 주택가격 격차를 통한 지역 불균형 추이 분석 | 박정흠

정책연구

60 근로자 소득지원정책의 발전방향: 근로장려세제의 확장
| 전병목·전영준

64 탄소가격 체계 개편의 수용성 제고방안
| 배진수·고지현·정재현

68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 변화 추이 연구
| 정재호·정다운

74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 정다운·정재호

78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이 근로빈곤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 연구
| 김빛마로·김문정

정책토론포트

90 2023년도 PEMNA 예산분과 회의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102 미국 - 2024회계연도 대통령예산안 발표 외

『재정포럼』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포럼』은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재활용 종이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ESG경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가지 파도를 넘기 위한 R&D 투자



안준모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발하고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래 과학기술혁신은 경제성장을 이끌고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가 네 가지 큰 파도와 마주하게 되면서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여기서 네 가지 큰 파도는 코로나19 이후에도 반복될 수 있는 팬데믹 위기, ChatGPT 등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 관세보다 강력한 장벽으로 활용되고 있는 탄소중립,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시작된 기정학(技政學, Tech-politics) 이슈이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배운 교훈 중 하나는 위기 상황을 이끌 수 있는 나라는 인구나 수출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백신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나라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세계 각국이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로 나뉘는 현상을 목도했고, 이러한 구분은 탄소중립에서도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서도 유효하며, 국가의 기술력과 외교 이슈가 결합하는 기정학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만약 우리가 네 가지 파도를 피할 수 없다면 이 험난한 파도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이는 우리가 First Mover가 되기 위한 미래 투자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정부 R&D 예산 30조원 시대의 도래

우리나라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경제 10위권 국가로 발돋움한 거의 유일한 국가이며,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은 과학기술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블룸버그가

매년 발표하는 혁신지수(Innovation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년째 1, 2위를 놓치지 않고 있으며 OECD나 EU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은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R&D 투자에 주목하고 있다.

<표 1> 연도별 정부 R&D 예산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 1980 | 1990 | 2010 | 2013 | 2015 | 2017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정부 R&D 예산 | 1,837 | 9,213 | 137,014 | 171,471 | 189,361 | 195,018 | 208,532 | 242,558 | 275,072 | 297,770 | 310,764 |

출처: NTIS, 「과학기술통계」(www.ntis.go.kr/rndsts)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R&D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이러한 공격적 투자는 다른 경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왔다. 2002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EU는 회원국에 R&D 투자 비율을 GDP 대비 3%까지 높이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2008년에 우리나라가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을 5%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하자 핀란드 등 일부 국가는 4%로 목표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정부 R&D 투자를 줄이지 않았는데, 미국, OECD·EU 회원국 등 세계 각국이 정부 R&D 투자를 줄이는 상황에서도 증가세를 꾸준히 유지해 왔다. 하지만 2023년 정부 R&D 예산이 31.1조원에 육박하면서 일각에서는 과도한 투자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말로 과도한 투자인지, 아니면 네 가지 파도를 넘기에 부족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30조원, 충분한 투자인가?

우리나라의 국가 전체 R&D 규모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정부 R&D 투자가 항상 증가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먼저 [그림 1]에 나타나 있듯이 정부가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고 하는 최초의 범부처 R&D 사업을 추진한 이래 정부 R&D가 국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해 왔지만, 2014년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다. 이는 정부 R&D 예산이 증가해왔지만 정부 예산 자체도 함께 증가해왔기 때문인데, 2014년 이후로는 오히려 정부 R&D가 국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정부 R&D 투자를 줄이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정부 R&D 투자를 줄이지 않고 증가세를 꾸준히 유지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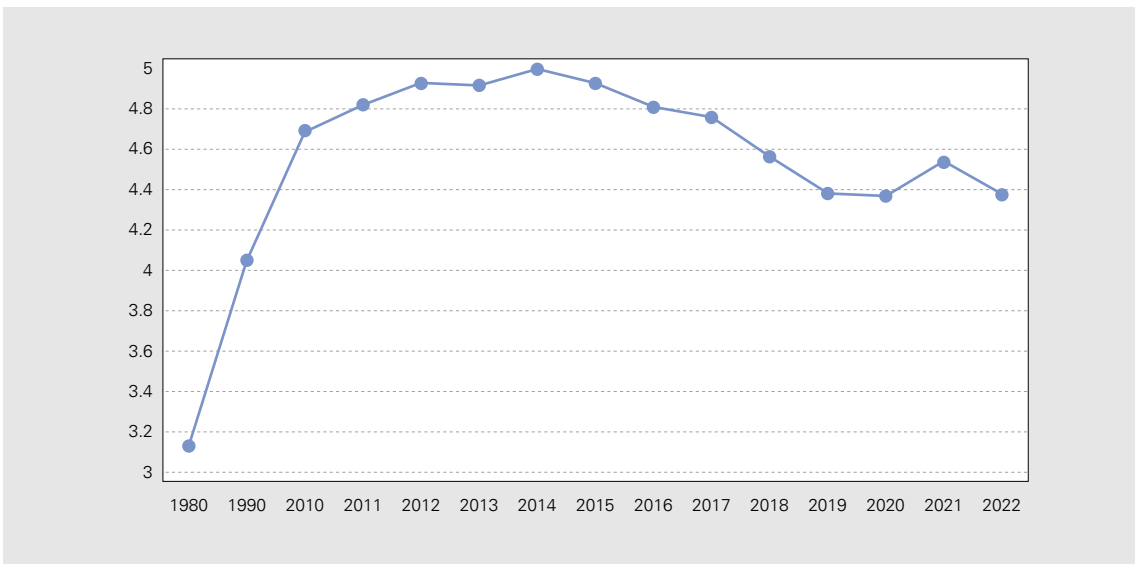
우리나라 R&D 투자규모에서
 정부재원 비중이
 약 23%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앞서 언급한 네 가지 파도를
 민간의 재원만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감소하는 상황이다. 사실 2019년에는 일본의 불화수소 수출 제한으로 인한 소재·부품·장비 사태가 발생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 2021~2022년에는 반도체 공급망 위기 등 정부 R&D 예산이 증가할 수 있는 외부 환경적 요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체예산 대비 정부 R&D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의외인 부분이다. 더욱이, 네 가지 파도와 같은 새로운 외부 위협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부 R&D 투자는 이러한 위협에 대한 대비책으로 부족할 수 있다.

우리나라 R&D 투자규모에서 정부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3%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앞서 언급한 네 가지 파도를 민간의 재원만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재·부품·장비 사태와 반도체 공급망 이슈를 통해 경험했듯이 핵심기술이 전략적 무기가 되는 현 기정학 시대에서 주요 핵심기술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민간기업들이 적극적으로 R&D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양자나 합성생물학처럼 기초 기술과 상업적 기술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과학경제(Science Economy)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전략적 기초 기술에 대한 투자를 민간기업 혼자 해나가는 역부족이다.

[그림 1] 정부 예산(총지출) 대비 정부 R&D 투자 비율


(단위: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www.nabostats.go.kr); NTIS, 「과학기술통계」(www.ntis.go.kr/rndsts)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R&D 투자와 함께 정책혁신이 수반되어야

물론 정부 R&D 투자의 증가만이 능사는 아니다. 충분한 정부 R&D 투자가 네 가지 과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동력원이라면, 투자와 관련된 정책적 혁신은 과도를 잘 뛰어넘도록 해주는 요령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환부에 잘 전달되어야 효과가 나듯 정부 R&D 투자도 좋은 전달체계를 확보해야 소기의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정책혁신이 필요하다. 첫째, 임무중심의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31개 부·처·청이 경쟁적으로 R&D 투자를 늘려오면서 개별 부처 중심의 독립적인 R&D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다. 부처별로 개별법을 만들고 칸막이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투자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처 단위가 아닌 임무중심의 R&D 투자와 이에 대한 평가 및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여러 가지 재정투자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많은 정부 R&D 투자가 출연금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R&D 세액공제는 주로 민간기업의 내부 R&D 투자에 연동되는 구시대적 접근을 하고 있다. 특허박스(Patent Box), 개방형 혁신 세액공제, 혁신 바우처, 혁신조달, 투자형 R&D, 후불형 R&D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민관의 R&D 투자를 하나로 모아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빠른 기술변화, 융복합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해 정부가 R&D 투자 어젠다를 설정하고 민간이 따라 투자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그릇 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유연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과거 G7 프로젝트에서도 시도했던 R&D PPP(Private Public Partnership: 민관협력)가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네 가지 높은 과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30조원이라는 숫자에 얽매어 소극적으로 R&D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First Mover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마중물이 필요하며 그 동력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제 다른 나라를 벤치마킹하기보다 우리 스스로 이에 대한 해법을 찾을 때다. 

정부 R&D 투자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임무중심의 정책추진,
다양한 재정투자
방법에 대한 고민,
민관의 R&D 투자를
하나로 모으는 등의
정책혁신이 필요하다.



현안분석

+ 복권(로또 6/45) 가격의 결정

정다운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전국 주택가격 격차를 통한 지역 불균형 추이 분석

박정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01 복권(로또 6/45) 가격의 결정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dwjung@kipf.re.kr

1.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권은 로또 6/45(이하 로또)이다. ‘로또’는 단순한 복권의 명칭이 아니라 행운의 대명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로또 맞았다’, ‘인생 로또’ 등 행운을 의미하는 구절로 사용되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 지난해 복권 판매액이 약 6조 4,29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2023). 이 가운데 로또 판매액이 약 5조 4,468억원으로 약 85%를 차지하니 복권, 특히 로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1월 11일에 발표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2022년도 복권 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1,020명 중 최근 1년간 복권 구매 경험이 있는 사람은 56.5%이며, 약 24.4%는 매주 복권을 구매한다고 응답하였다.

로또에 대한 높은 관심과 더불어 일각에서는 로또 복권의 ‘인생 로또’로서의 가치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한다. 로또 1등 당첨금액의 평균 수준인 약 20억원이 ‘인생 로또’에 준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아쉬움이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및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부터 대부분의 재화 및 서비스 가격 상승 속도도 매우 빨라졌다. 비록 2022년 하반기부터 주식 및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으나, 대부분의 자산 및 재화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로또 1등 당첨금액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로또 복권의 한 게임당 가격은 1,000원으로 18년째 동결이다. 이러다 보니 복권 한 게임 판매금액과 연관된 1등 당첨금액의 규모도 크게 변동이 없다.

단순 비교를 하자면, 약 10년 전인 2012년 12월 로또 1등 당첨금액은 약 22억 8,000만원이었으며,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약 5억원 수준이었다. 반면 2022년 12월 로또 1등 당첨금액은 약 20억 1,000만원이었으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약 12억 6,000만원(KB부동산, 「2022년 12월 아파트 매매 평균가격」)이었다. 로또 1등 당첨금액의 절대적인 수치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 로또 복권 소비자들의 1등 당첨금액에 대한 아쉬움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인생 로또’를 꿈꾸는 사람들의 기대가 현재의 1등 당첨금액 수준과 괴리된다면, 로또 복권의 1등 당첨금액 인상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복권의 한 게임당 가격 인상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로또 복권 도입 초기 한 게임당 가격은 2,000원이었으며, 당시 1등 평균 당첨금액은 약 56억원이었다. 반면, 한 게임당 가격이 1,000원으로 인하된 이후 1등 평균 당첨금액은 약 24억원으로 감소하였다. 미국의 대표적인 복권인 파워볼(Powerball) 복권과 메가밀리언(Mega Millions) 복권의 한 게임당 가격이 1달러에서 2달러로 각각 2012년과 2017년에 인상되었는데,¹⁾ 그 배경 중 하나는 기대 당첨금액 인상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수요에 반응하기 위함이었다. 2023년 1월에 메가밀리언 복권 1등 당첨금은 3개월 동안 이월된 후에야 당첨자가 나타나 약 13억 5,000만달러(약 1조 6,000억원)를 기록하였다. 가격 인상 이후 소비자들의 ‘인생 로또’에 대한 기대에 부응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비자 수요 및 기대만을 고려하여 복권 가격 및 당첨금액을 인상할 수는 없다. 복권 가격 인상을 결정할 때 고민해야 할 여러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우리나라의 로또 복권 가격 결정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복권 가격은 복권이 갖는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모든 것이 동일한 상황에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간다. 역대 최대 판매를 기록한 작년의 복권 판매 상황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올해 복권 가격 인상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으나, 복권이 갖는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가격 인상 결정에는 다른 여러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로또 복권 가격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결정한다. 로또 복권 가격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찾기는 어렵지만,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

복권 가격은 복권이 갖는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1) 가격 인상과 더불어 게임 방식에 일부 변화가 동반되었다.

복권의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납부하는
명시적인 세금 없는 반면,
복권의 당첨금은
비교적 높은 세율로
과세된다.

음과 같은 요인들이 고려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 복권기금 운용을 통한 공익사업의 효과를 고려하였을 것이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복권기금의 65%는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 사업, 장애인, 불우청소년 등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에 사용되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따라서 복권 판매 수익을 통한 소외 계층에 대한 재원 확보는 정부 입장에서 복권 가격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인이었을 것이다. 더 많은 복지 지출 소요를 감당하기 위해 복권 가격 인상에 대한 유인이 존재할 수 있다. 둘째, 복권 사업은 사행산업으로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대표적인 사행산업은 카지노업, 경마 등이 있으며, 복권도 같은 항목으로 분류된다. 우연에 의해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복권을 정부가 장려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의 거래를 일정 수준에서 통제하기 위해 정부가 가격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다. 가격 결정 과정에서 고려될 만한 두 가지 요인은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 서로 상반된다. 첫 번째 고려 요인은 복권 판매를 장려하여 복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두 번째 고려 요인은 복권 수요를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 둘을 고려하여 복권의 적정 거래 규모, 결과적으로는 적정 가격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복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로또 복권의 적정 가격 수준을 산출해보고자 한다. 가구당 복권 구입금액 정보가 있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고, Lockwood et al.(2022)의 모형을 참고하여 검토한다.

II. 복권의 특성

복권 가격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격 결정 요인들과 관련된 복권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복권의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납부하는 명시적인 세금은 없다. 대부분의 재화 및 서비스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개별소비세 형태의 소비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복권의 당첨금은 비교적 높은 세율로 과세된다.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기타소득세로 과세되며, 복권 당첨금액 3억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20%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 30%로 과

<표 1> 주요국의 복권 당첨액 과세 현황

| 과세 구분 | 국가 | 과세정보 |
|-------|---|---|
| 과세 | 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권을 통해 얻은 소득은 other income으로 신고 5,000달러 초과 당첨금의 경우 24% 원천징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 |
| | 스페인 | 4만유로 초과 당첨금에 대해 20% 세율로 원천징수 |
| | 이탈리아 | 500유로 초과 당첨금에 대해 20% 세율로 원천징수 |
| | 대만 | 5,000대만달러 초과 당첨금에 20% 세율로 원천징수 및 0.4%의 인지세 부과 |
| 비과세 | 영국,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일본, 싱가포르, 스웨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 |

출처: 각국의 복권 자료(참고문헌 참조); Online Gambling Websites, "Lottery Takes Around the World: Which Countries Take a Slice of the Jackpot?," 2021. 10. 12., <https://www.onlinegamblingwebsites.com/blog/lottery-taxes-around-the-world-which-countries-take-a-slice-of-the-jackpot/>, 검색일자: 2023. 1. 28.

세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각각 총 22%, 33%로 과세된다. 단, 4등(5만원) 및 5등(5,000원)의 소액 당첨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 금액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통상 200만원 미만을 수령하는 3등 당첨금액 역시 과세하지 않는다. 복권 가격 자체가 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복권 판매액이 세입과 유사하게 재정 사업에 투입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복권 소비 단계에도 암묵적으로 과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복권의 재화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암묵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세금에 노출된다. 참고로 복권 당첨금액은 국가마다 과세/비과세 적용 기준이 다르다(<표 1> 참조). 미국의 경우 거주자에 대해서는 5,000달러를 초과한 당첨금액에 24%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종합소득세율로 합산 과세한다. 1등의 경우 당첨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보통 연방 소득세 최고세율인 37%가 적용되고, 주별 세금이 있는 경우 별도로 부과된다. 스페인, 이탈리아, 대만 등의 경우에도 20%의 세율로 당첨금액에 과세한다. 당첨금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한계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대비된다. 복권 당첨금에 전혀 과세하지 않는 국가들도 많은데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이 그 예다.

둘째, 복권의 수요는 수요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이질적으로 관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주로 저소득층에서 복권 수요가 높아, 복권 구매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복권 가격 결정 과정에서 형평 혹은 분배 관점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최필선·민인식(2017)의 연구에서 복권 지출의 소득탄력성이 0.2 수준이며, 복권 지출에 역진성이 존재함을 밝혔다.

복권 가격 자체가 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복권 판매액이 세입과 유사하게 재정 사업에 투입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복권 구매 소비자들은 암묵적·명시적으로 세금에 노출된다.

복권 수요는 복권에 대한 기대 수익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수요자, 혹은 자기 절제가 부족한 수요자에 의한 과소비가 문제될 수 있다.

셋째, 복권 수요는 복권에 대한 기대 수익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수요자, 혹은 자기 절제(self-control)가 부족한 수요자에 의한 과소비가 문제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복권 구매자의 개별적인 특성이 복권 수요에 이질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복권의 특징은 담배, 주류 등의 수요와 유사성이 존재하고, 정부의 가격 설정 과정도 일부 유사성이 있다. 정부가 담배 가격 설정 및 가격 이외의 제세부담금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담배가 유발하는 외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담배 수요자의 지나친 소비로 인해 야기될 부정적인 건강 효과 등을 예방하여 지나친 소비를 교정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담배 수요자가 담배 소비를 통해 얻는 개인적인 효용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사회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의 가격을 제시한다. 복권 역시 지나친 소비가 사회의 사행심 조장, 근로의욕 감퇴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반면, 소비자들이 복권 구매를 통해 ‘인생 로또’에 대한 기대로 얻는 효용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복권의 적정 가격 수준에 관한 기존 논의는 많지 않다. 정부가 결정하는 복권 가격의 근거 자료 역시 찾기 어렵다. 저자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나라의 복권 가격과 관련한 기존 연구는 김상현·김한창(2005)이 유일하다. 김상현·김한창(2005)은 앞서 논의된 두 가지 상반된 정책 방향, 즉 복권 구매를 통해 소비자들의 효용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복권의 지나친 소비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모형화하여, 로또 복권의 한 게임당 가격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향 조정된 배경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다만 적정 가격 수준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및 정량적인 분석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으며, 개념적으로 복권과 관련된 정부의 로또 복권 가격 인하 입장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앞서 논의된 주요 내용들과 복권 수요의 특성을 반영하여 복권 가격의 수준을 산출해보고자 한다.

Ⅲ. 배경 및 기초 통계

로또는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가 지정한 복권수탁사업자가 발행하며, 과거 나눔로또 컨소시엄이 수탁사업자였다가 2018년 동행복권 컨소시엄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동일하다. 로또는 2002년 12월 2일에 도입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온라인 구매가 가능해졌다. 2021년도의 로또 판매액은 약 5조 1,371억원이었으며, 2022년도에는 이보다 약 6% 증가한 약 5조 4,468억원으로 최근 2년간 로또 판매 기록을 연거푸 경신하고 있다.

로또는 2002년 12월 2일 도입되었으며, 2022년도 로또 판매액은 전년도보다 약 6% 증가한 약 5조 4,468억원으로 최근 2년간 로또 판매 기록을 연거푸 경신하고 있다.

<표 2> 2022년도 및 2021년도 복권 판매액 및 당첨금

(단위: 백만원)

| 복권 종류 | 판매액 | | 당첨금 | 수익금 |
|---------|-----------|-----------|-----------|-----------|
| | 2022 | 2021 | 2021 | 2021 |
| 총계 | 6,429,200 | 5,975,339 | 3,093,134 | 2,441,643 |
| 로또 6/45 | 5,446,800 | 5,137,139 | 2,568,570 | 2,234,023 |

출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2022; 2023)

로또의 게임 방식은 다음과 같다. 1부터 45까지 총 45개의 숫자 가운데 6개의 숫자를 선택하여 동행복권 추첨방송에서 추첨한 6개의 숫자와 순서에 상관없이 일치하는 경우 1등에 당첨된다. 6개의 숫자 이외에 한 개의 행운(보너스) 숫자를 추가 추첨하는데, 이는 2등을 선별하기 위함이다. 2등 당첨은 1등 번호 6개 가운데 5개가 일치하고 행운 숫자가 일치할 때 당첨된다. 3등 당첨은 1등 번호 6개 가운데 5개가 일치하고 행운 숫자는 불일치한 경우이다. 4등 당첨은 1등 번호 6개 가운데 4개가 일치하는 경우이며, 5등 당첨은 3개가 일치하는 경우이다. 1등 당첨 확률은 1/8,145,060이며, 2등 당첨 확률은 1/1,357,510이다.

로또 한 게임당 가격이 1,000원으로 인하된 이후 1등 당첨금액의 평균은 약 24억 4,000만원, 2등은 약 5,700만원, 3등은 약 145만원, 4등은 약 5만 3,000원

<표 3> 로또 복권 당첨 확률 및 기대 수익

(단위: 천원)

| 등수 | 당첨확률 (A) | 평균 당첨금 (게임당 가격=1,000원) (B) | 기대 가치 (C=A×B) | 평균 당첨금 (게임당 가격=2,000원) (D) |
|-------|-------------|----------------------------------|------------------|----------------------------------|
| 1등 | 1/8,145,060 | 2,444,569 | 0.030 | 5,665,724 |
| 2등 | 1/1,357,510 | 57,164 | 0.042 | 140,255 |
| 3등 | 1/35,741 | 1,450 | 0.041 | 3,251 |
| 4등 | 1/733 | 52.57 | 0.072 | 118.87 |
| 5등 | 1/45 | 5 | 0.147 | 10 |
| 총기대수익 | | | 0.332 | |

주: 4등 당첨금액의 경우 2010년 8월부터 5만원으로 고정된 금액이 지급됨
출처: 동행복권 홈페이지(dhlottory.co.kr)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검색일자. 2023. 1.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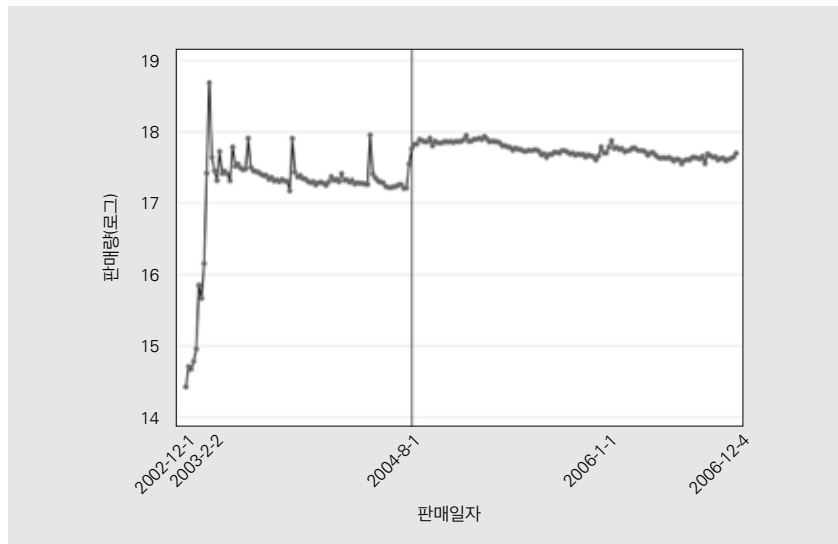
로또 한 게임당 가격은 2004년 8월 1일에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향되었다. 우리나라 복권 가격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로또 복권 판매액이 발매 직후 당초 예상보다 10배 이상 급증(약 3조 8,000억원)하여 판매 총액의 조절 필요성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이다. 2010년 8월부터 4등 당첨금액이 5만원 정액으로 고정되었다.

로또의 가격은 로또 도입 초기 한 게임당 2,000원이었다. 로또 한 장에 총 다섯 게임까지 구매할 수 있어, 한 장의 게임을 구매하면 10,000원이었다. 이후 2004년 8월 1일에 로또 한 게임당 가격을 1,000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2004년 당시 로또 복권과 유사한 주요국의 복권 가격(당시 환율 기준)이 영국의 경우 1,900원, 미국은 1,200원, 호주는 700원 등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을 고려할 때 복권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가격 조정의 배경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로또 복권 판매액이 발매 직후 당초 예상 판매액(약 3,800억원)보다 10배 이상 급증(약 3조 8,000억원)하여 판매 총액의 조절 필요성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또한 복권의 과도한 사행심 조장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가격을 낮춤으로써 최고 당첨금액을 줄이려는 의도였다. 가격 인하 전에는 사행심 조장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2003년 2월에 이월 횟수를 5회에서 2회로 조정하기도 했다. 1등 당첨금의 이월 횟수가 5회로 허용되었던 초창기 로또 19회차 2003년 4월 12일의 1등 당첨금이 약 407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 이후에도 이월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1등 당첨금이 100억원대를 넘기는 사례가 종종 관찰되었다.

정부는 로또 가격을 1,000원으로 인하한 2004년 8월 첫째 주 이후 가격을 조정할 적이 한 번도 없다. 로또 가격은 물가 인상과 관계없이 줄곧 동일 수준을

[그림 1] 로또 복권의 판매량 변화



주: 판매일자는 연도-월-주차를 의미함
출처: 동행복권 홈페이지(dhlottery.co.kr)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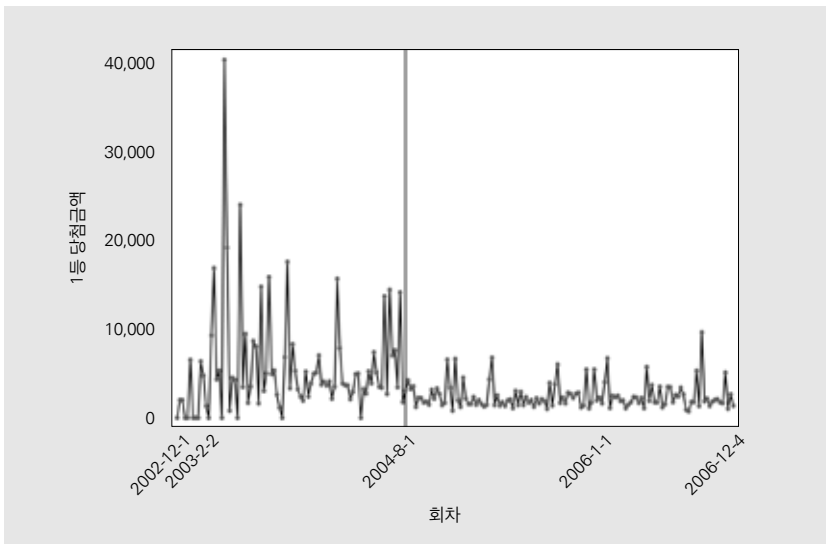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로또 복권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물론 이것이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1등 당첨자 수도 자연스럽게 많아지면서, 1등 당첨금의 평균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실제로 가격 인하가 있었던 2004년 8월 첫째 주 이후 로또 복권 판매량은 크게 증가하였고(그림 1 참조), 가격 인하 전에는 로또 복권 1등 당첨금의 평균이 약 50억원 수준이었으나, 가격 인하 후에는 평균 20억원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그림 2 참조).

광복 이후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한 복권은 1947년 서울에서만 판매된 ‘올림픽후원권’으로, 1948년 런던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경비 지원 명목으로 도입되었다.²⁾ 액면금액은 100원이었으며, 1등 상금액은 100만원이었다. 1949년에는 재해민 구제를 위해 ‘후생복표’를 발행하여 1950년까지 이어졌다. 그 이후 산업부흥 자금과 사회복지 자금 마련을 위한 애국복권이 1956년에 도입되었고, 산업복표·무역박람회 복표·서울국제무역박람회 기념복권 등 특수 목적의 단기 복권이 도입되었다 종료되곤 했다. 정기적인 복권의 역사는 1969년 한국주택은행이 발행한 주택복권이 시작이다. 주택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1969년 9월 15일에 처음 판매되었으며, 1등 상금은

로또 가격은 물가 인상과 관계없이 줄곧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 로또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1등 당첨자 수도 많아지면서 1등 당첨금의 평균 액수는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2] 로또 1등 당첨금액의 변화

(단위: 백만원)



주: 판매일자는 연도-월-주차를 의미함
출처: 동행복권 홈페이지(dhlottery.co.kr)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국가기록원, 「일주일간의 설레는 행복」, <https://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lottery.do>, 검색일자: 2022. 10. 28.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해
1983년에 도입된
올림픽복권은 처음으로
1등 당첨금 1억원 시대를
열었다.

300만원이었다(<표 4> 참조). 이후 1등 당첨금은 1978년에 1,000만원, 1981년에 3,000만원까지 증가하였으며, 1983년 올림픽복권 발행과 함께 주택복권 발행이 종료되었다. 1983년에 등장한 올림픽복권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1등 당첨금이 처음으로 1억원 시대를 열었다. 참고로 1983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15㎡(약 34평)의 거래가격은 4,500만원에서 5,300만원 사이에 형성되었다. 올림픽복권은 올림픽이 폐회한 후 1988년 12월에 발행이 종료되었다. 이후 1989년에 주택복권이 재발행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권으로 판매되었고, 2002년 로또 복권의 등장과 함께 주택복권 수요가 급감하여, 2006년에 발행이 종료되었다.

<표 4>는 주요 복권의 액면발행금액 대비 1등 당첨금액의 비율,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84㎡ 기준) 대비 1등 당첨금액의 비율을 보여준다. 1983년 이전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찾기 어려워 일부 신문에 제시된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평균하였다. 1969년 주택복권의 액면발행금액은 100원이었고, 당시 1등 당첨금은 300만원으로 그 비율이 3만이었다. 또한

<표 4> 주요 복권 가격 및 1등 금액 통계

| 시점 | 복권 종류 | 액면발행금액 (A) | 당시 1등 금액 (B) | C=B/A (단위: 1만) |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D) ³⁾ | E=B/D |
|--------------------|-------------|------------|------------------------|----------------|----------------------------------|-------|
| 1969 | 주택복권 | 100원 | 300만원 | 3 | 11만 5,000원 | 26.10 |
| 1975 | 주택복권 | 100원 | 900만원 | 9 | 420만원 | 2.14 |
| 1981 ¹⁾ | 주택복권 | 100원 | 1,500만원×2 = 3,000만원 | 30 | 4,500만원 | 0.67 |
| 1983 | 올림픽복권 | 500원 | 1억원 | 20 | 5,000만원 | 2.00 |
| 1990 | 주택복권 | 500원 | 1억 5,000만원 | 30 | 1억 5,142만원 | 0.99 |
| 1998 ¹⁾ | 월드컵 축구복권 | 500원 | 1억 5,000만원×2 = 3억원 | 60 | 1억 6,901만원 | 1.78 |
| 2004 ²⁾ | 로또복권 | 2,000원 | 35억 3,000만원 | 1,765 | 2억 9,178만원 | 12.10 |
| 2005 | 주택복권 | 1,000원 | 5억원 | 50 | 3억 1,576만원 | 1.58 |
| 2010 ²⁾ | 로또복권 | 1,000원 | 25억 4,000만원 | 2,540 | 5억 7,246만원 | 4.44 |
| 2022 ²⁾ | 로또복권 | 1,000원 | 19억 9,000만원 | 1,990 | 11억 8,894만원 | 1.67 |
| 2023 ²⁾ | 로또복권 | 1,000원 | 18억 2,000만원 | | - | - |

주: 1) 1981년의 주택복권, 1998년의 월드컵축구복권은 같은 번호 2장을 묶음으로 판매하여, 각각 1등 상금 1,500만원×2 = 3,000만원, 1억 5,000만원×2 = 3억원임

2) 2004년, 2010년, 2022년 및 2023년 로또복권 1등 금액은 각 연도 1월 평균값임

3)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평당 평균 가격을 전용면적 84㎡ 타입으로 환산한 기준임. 1983년 이전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부재하여, 신문 기사 등을 참고하여 추정치를 사용함

출처: 국가기록원, 「일주일간의 설레는 행복」,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실거래가격」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약 11만 5,000원으로 추정되는데, 1등 당첨 금액은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대비 약 26배 많았다. 1975년 주택복권의 경우 액면발행금액과 1등 당첨금액의 비율은 1969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대비 1등 당첨금액의 비율은 2.14로 크게 감소한다. 이는 1970년부터 시작된 강남 개발 사업의 영향으로 아파트 수요가 급증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1981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대비 주택복권 1등 당첨금액의 비율은 1을 하회하게 되어, 1등 당첨금으로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다. 1983년 올림픽복권 도입과 더불어 1등 당첨금액이 처음으로 1억원이 되면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대비 1등 당첨금액이 다시 1을 넘어 2가 되었다.

아파트 매매가격의 변화가 비교적 덜하였던 1990년대에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대비 주요 복권의 1등 당첨금액 비율이 2 내외로 유지되었다. 2002년 로또 복권 도입 이후 로또 가격 인하 전에 1등 당첨금액이 평균 50억원 수준으로 매우 높게 형성되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대비 로또 1등 당첨금액의 비율도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2004년 1월 기준, 로또 1등 평균 당첨금액은 35억 3,000만원이었으며,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억 9,178만원으로 그 비율이 10을 초과하기도 하였다. 주택복권 등 기존 복권에 비해 1등 당첨금액이 월등히 높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대비 복권 1등 당첨금액의 비율 역시 예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달라지게 된다. 부동산 가격이 거의 고점에 다다른 2022년 1월 기준으로 로또 1등 평균 당첨금액은 19억 9,000만원이었는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약 11억 8,894만원까지 증가하면서 그 비율이 다시 2를 하회하게 되었다. 로또 복권 도입 이후 사람들의 ‘인생 로또’에 대한 기대치가 재조정될 수 있는 계기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2022년 1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대비
로또의 1등 당첨금액 비율이
2를 하회하게 되었다.

IV. 복권 가격의 결정

이번 장에서는 로또 가격 결정 과정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복권 수요자와 복권 공급자 입장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권 판매액이 재정 지출 사업에 사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정책 목표도 감안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지

복권은 판매액이 저소득층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격 결정 과정에서 분배적 관점의 고려가 필요한 재화이기도 하다.

만 본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생략하였으며, 이는 추후 연구로 남겨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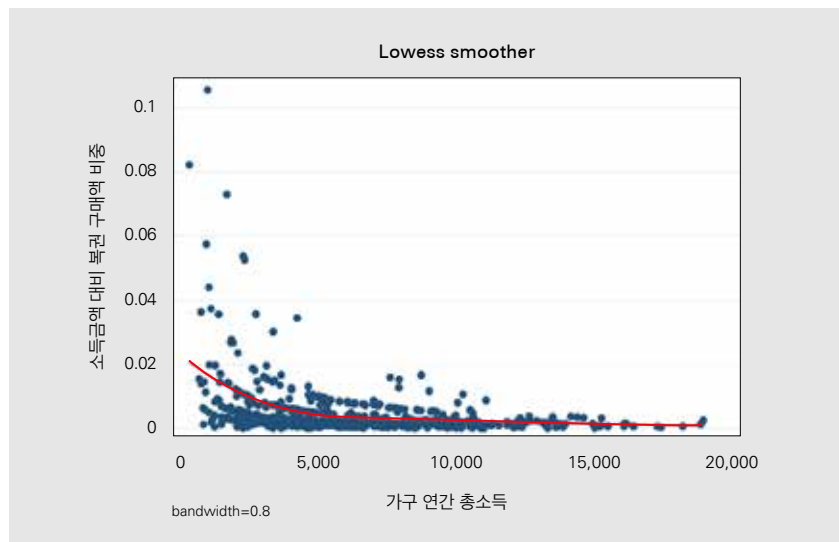
로또 가격의 적정 수준 추정에 필요한 기초 모형은 Lockwood et al.(2022)을 참고하였다. 본고는 구체적인 모형의 소개는 생략하고 모형의 함의 제시와 실증 분석의 적용에 초점을 맞춘다. Lockwood et al.(2002) 모형의 특징은 복권 가격의 적정 수준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복권 재화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점이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복권은 비교적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 재화이며, 소비의 역진성이 관찰되기도 하고,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구매 패턴이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재화이다.

[그림 3]은 소득 대비 복권 구매액의 비중과 가구 소득의 관계를 보여준다. 대체적으로 가구 소득이 증가할수록 복권 구매액의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최필선·민인식(2017)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찰 결과와 더불어 복권 판매액이 저소득층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격 결정 과정에서 분배적 관점의 고려가 필요한 재화이기도 하다. Lockwood et al.(2002)의 모형이 이와 같은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반영하여 가격 결정 과정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Lockwood et al.(2022)의 모형은 복권 구매 과정에서 발견되는 소비자의 특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복권 가격 산출에 적용하였다는 점이 중

[그림 3] 소득 대비 복권 구매액 비중

(단위: 만원, %)



출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요한 특징이다. 복권 수요는 일종의 행동 편향(behavioral bias or perceptual distortion(Woodford, 2012))가 반영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주류 및 담배 소비와도 일부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자기 절제 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이 복권을 과소비할 가능성이 있다. 혹은 복권의 기대 가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계산한 소비자라면 복권 소비를 지나치게 많이 할 행태가 관찰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복권 가격 책정 시 가격 변화를 통한 소비의 변화를 파악하고, 일부 소비자의 과소비를 교정하려는 정책 목적이 반영될 수 있다.

본격적으로 모형을 통한 로또 복권 가격 결정 과정을 설명하기에 앞서 계속 논의되었던 소비자들의 특성, 즉 행동 변수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소비자들의 행동 편향을 측정하는 대리변수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는 질문을 사용한다. 자기 절제(self-control),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 통제 및 산술적 능력, 마지막으로 복권에 대한 기대 수익이 그 항목들이다. 정확히 이들 항목을 대변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재정패널조사」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최대한 이들 항목을 가깝게 대리(proxy)할 수 있는 질문들을 이용한다.

먼저, 자기 절제를 대리하여 추정해볼 수 있는 질문으로 시간 선호(time preference) 질문을 사용한다. 「재정패널조사」 자료에서 사용하는 시간 선호 질문은 [그림 4]와 같다. 자기 절제 변수를 만들기 위해 내일 교환 시 토큰의 가치와 한 달 뒤 교환 시 토큰의 가치 응답 금액 차이가 가장 큰 10만원과 10만

본고에서 참고한 Lockwood et al.(2022) 모형의 중요한 특징은 복권 구매 과정에서 발견되는 소비자의 특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복권 가격 산출에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그림 4] 시간 선호 설문조사

※ 아래 지문의 내용을 읽고 응답해주시시오.

“귀하에게 토큰 20개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내일 토큰 1개를 돈으로 교환하게 되면 100,000원을 받습니다. 반면 내일부터 한 달 뒤(즉, 한 달 + 1일)에 교환할 경우 토큰의 가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h1. 내일 교환할 토큰의 개수와 한 달 뒤 교환할 토큰의 개수는 각각 몇 개입니까? 경우마다 20개의 토큰은 모두 교환하여야 합니다.

| 선택지 | 내일 교환 시 토큰 1개 가치 | 한달 뒤 교환 시 토큰 1개 가치 | 내일 교환 개수 | 한달 뒤 교환 개수 |
|-----|------------------|--------------------|----------|------------|
| 1 | 100,000원 | 101,000원 | | |
| 2 | 100,000원 | 101,250원 | | |
| 3 | 100,000원 | 101,500원 | | |
| 4 | 100,000원 | 101,750원 | | |
| 5 | 100,000원 | 102,000원 | | |

출처: 「재정패널조사」 설문조사 자료

시간 선호 질문을 사용하여 자기 절제를 추정할 결과, 대체적으로 자기 절제 변수와 월평균 복권 구매액 간 양(+)의 상관성이 확인된다.

2,000원에 대한 응답 자료만을 사용하기로 한다. 내일 교환한다고 응답한 개수가 많은 응답자일수록 자기 절제가 부족한 응답자로 간주한다. 토큰 20개를 기준으로 응답하기 때문에 응답자의 응답 가능 범위는 0~20개이다. <표 5>에 제시되었듯이, 평균 6.3개를 내일 교환하고 나머지 약 13.7개를 한 달 뒤 교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5] (a)는 분석에 사용된 자기 절제 변수와 월평균 복권 구매액의 관계를 보여준다. x축의 자기절제 값이 증가할수록, 앞선 시간 선호 질문에서 토큰을 내일 교환하겠다고 응답한 토큰의 개수가 많은 응답자이다(즉, 자기 절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응답자들이다). 응답의 범위는 0~20개인데, 이를 다섯 개 묶음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 번째 범주는 내일 교환할 토큰의 개수를 0~4개로 응답한 응답자, 두 번째 범주는 내일 교환할 토큰의 개수를 5~8개, 세 번째 범주는 9~12개, 네 번째 범주는 13~16개, 다섯 번째 범주는 17~20개로 분류한다. 네 번째 범주에서 월평균 복권 구매액의 크기가 다른 구간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자기 절제 변수와 월평균 복권 구매액 간에 양(+)의 상관성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행동 편의를 대리할 수 있는 변수 중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 항목을 사용한다. 이 역시 「재정패널조사」 자료에서 정확히 대리할 수 있는 질문은 부재하기 때문에,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을 사용하여 대리한다. 질문은 “귀하가 생각하는 본인의 건강상태는 어떠합니까?”이며, 이에 대한 응답은 다섯 가지 범주로 매우 건강한 편(1), 대체로 건강한 편(2), 보통(3), 대체로 건강하지 못한 편(4),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5) 등으로 응답할 수 있다. <표 5>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 질문에 대한 응답 평균은 2.43이었으며, 표준편차는 0.89이다. [그림 5]의 (b)는 주관적 건강 상태와 월 복권 구매액의 관계를 보여준다. 주관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일수록 월평균 복권 구매액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비교적 뚜렷한 음(-)의 상관성이 확인된다.

<표 5> 행동 편의를 대변하는 변수들의 통계량

| 변수 | 평균 | 표준편차 | 응답 범위 |
|-----------|-------|-------|-------|
| 자기 절제 | 6.349 | 8.327 | 0~20 |
| 주관적 건강 상태 | 2.434 | 0.894 | 1~5 |
| 산술적 계산 능력 | 0.553 | 1.805 | 0~10 |
| 기대 수익 | 3.390 | 0.783 | 1~5 |

출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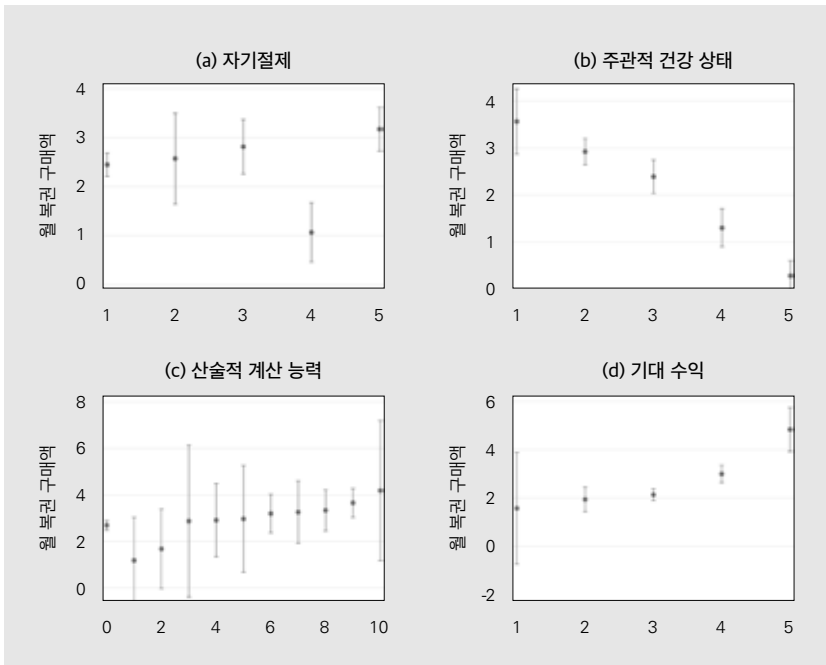
다음으로 살펴볼 행동 편 의 대리변수는 응답자의 통계 및 산술적 계산 능력을 대리하는 항목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그림 4]의 시간 선호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대리변수로 설정한다. 일부 응답에는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림 4]에서 토큰을 한 달 뒤 교환하겠다고 응답한 개수가 두 번째 선택지(100,000 → 101,250원)보다 첫 번째 선택지(100,000 → 101,000원)가 더 많은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각각의 선택지를 비교하여 응답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를 세어 대리변수를 설정한다.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 응답자는 일관성 있게 산술적 계산 능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응답자의 경우에서 산술적 계산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응답자의 약 10% 정도가 이 변수로 추정된 산술적 계산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의 (c)는 이렇게 설정된 산술적 계산 능력과 월평균 복권 구매액의 관계를 보여준다. 산술적 계산 능력과 복권 구매액에는 약한 양(+의) 상관성이 관찰된다.

마지막으로 검토할 행동 편 의 대리변수는 복권에 대한 기대 수익과 관련된 항목이다. 앞선 대리변수인 산술적 계산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응답자라

주관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일수록 월평균 복권 구매액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비교적 뚜렷한 음(-)의 상관성이 확인된다.

[그림 5] 로또 복권의 구매량과 개인 특성간의 관계

(단위: 만원)



주: 신뢰구간은 5% 유의수준

출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복권 기대 수익과
 월평균 복권 구매액의
 관계를 보면,
 납부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의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월평균 복권 구매액이
 낮은 경향이 관찰된다.

하더라도 복권 구매를 통해 기대하는 기대 수익이 지나칠 경우 복권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행동 편의를 포착하기 위해 복권에 대한 기대 수익 변수를 설정하여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복권에 대한 기대 수익 및 기대를 반영할 수 있는 질문 역시 「재정패널조사」 자료에는 부재하다. 본고에서는 “귀하는 본인이 납부했던 세금과 비교해 볼 때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의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복권 구매에 대한 기대를 대리하여 포착한다. 납부한 세금에 대한 정부의 혜택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권에 대한 투자 대비 정부로부터 얻는 혜택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오히려 세금에 대한 기대 수익은 낮지만, 복권의 경우에는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응답의 선택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1), 약간 높은 수준이다(2), 적절한 수준이다(3), 약간 낮은 수준이다(4), 매우 낮은 수준이다(5)로 분류된다. <표 5>를 보면 평균적인 응답은 약 3.4로, 약간 낮은 수준과 적절한 수준에 응답이 몰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의 (d)는 기대 수익 대리변수와 월평균 복권 구매액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납부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의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월평균 복권 구매액이 낮은 경향이 관찰된다.

앞서 설명한 행동 편이 변수들과 Lockwood et al.(2022)의 모형을 토대로 복권 가격 결정 모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Lockwood et al.(2022)의 모형은 식 (1)과 같이 충분통계량(sufficient statistics)을 통해 정부의 정책 목표와 소비자의 성향을 감안한 최적의 복권 가격을 도출할 수 있음을 보인다. 로또 복권 한 게임의 최적 가격(p) 수준은 다음과 같은 충분통계량을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복권 수요의 가격 탄력성(ζ_p), 소비자들의 행동 편이(자기 절제, 삶에 대한 주관적 태도 등 앞서 살펴본 변수들)가 야기하는 변화, 복권 구매의 역진적 성격을 포착하는 통계량 등을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p - \frac{\partial C}{\partial s} = \bar{\gamma}_p (1 + \sigma_p) - \frac{Cov[s(z), g(z)]}{|\bar{\zeta}_p| \bar{s}} \quad \text{식 (1)}$$

식 (1)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식 (1)의 좌변 $C(a, \bar{s})$ 는 정부가 특정 복권 a 를 \bar{s} (복권 총판매량)만큼 판매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식 (1)의 좌변 $p - \frac{\partial C}{\partial s}$ 는 마크업(Mark-up above MC)을 의미하며 복권 한 장당 세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식 (1)의 우변 두 항과 같아져야 한다.

식 (1) 우변의 첫 번째 항 γ 는 소비자들의 행동 편이가 존재할 때, 추가적인 복권 구매를 통해 느끼는 효용(perceived utility)과 행동 편이가 없는 경우의 소비를 통해 얻는 일반적인 효용(normative utility)의 크기 차이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그림 6]을 살펴본다. [그림 6]의 왼쪽 그림은 복권 구매와 행동 변수의 관계를 임의로 나타낸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은 복권 가격과 복권 구매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요곡선이다. 왼쪽 그림은 특정 행동 편의 변수가 복권의 과소비로 이어지는 경우를 반영한 그림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오른쪽 그림은 그러한 과소비로 인해 소비자가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달라지는 것을 표현한다. 행동 편이와 복권 구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식 (2)와 식 (3)과 같은 단순회귀 방정식을 생각해 본다. 식 (2)와 식 (3)에서 s_i 는 복권 구매액, b_i 는 개인의 행동 편의 변수, b_i^* 는 일반적인 소비자의 행동 편의 변수를 의미한다. 회귀 방정식에는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기 위해 「재정패널조사」 자료에서 수집된 위험 선호 변수(preference)를 포함하였고, 그 외에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변수(X_i ; 교육, 성별, 소득 등)들을 통제하였다(추정치는 <표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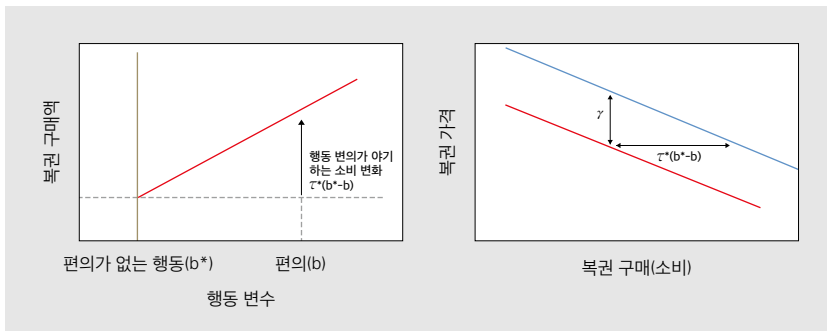
$$\ln(s_i + 1) = \tau b_i + \beta^* preference_i + \lambda^* X_i + \epsilon_i \quad \text{식 (2)}$$

$$\ln(\hat{s}_i^V + 1) = \tau b^* + \beta^* preference_i + \lambda^* X_i + \epsilon_i \quad \text{식 (3)}$$

소비자가 행동 편이를 갖지 않는 일반적 소비자라 할 때(b^*) 복권 구매액은 식 (2)에 따라, τb^* 만큼이 될 것이다(다른 통제 변수들의 영향은 여기서는 무시하기로 한다). 만약 특정 행동 편이를 갖는 복권 구매자가 일반적 소비자의 행동 변수와 다른 변수값을 갖는다면 그로 인한 편의의 크기는 $(b_i - b^*)$ 만큼일

[그림 6]의 왼쪽 그림은 특정 행동 편의 변수가 복권의 과소비로 이어지는 경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오른쪽 그림은 그러한 과소비로 인해 소비자가 직면하는 수요곡선의 변화를 표현한다.

[그림 6] 행동 편이가 유발하는 복권 소비 변화



출처: Lockwood et al.(2022)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응답자의 행동 편이의
질문들을 각각 평균하여,
그 평균값을 일반적인
소비자의 행동 변수 값으로
가정하였다.

<표 6> 복권 구매와 행동 편이

| T | 식 (2) |
|----------|----------------------|
| 자기절제 | 0.110*** (0.022) |
| 주관적 건강상태 | -0.167*** (0.018) |
| 산술적 계산능력 | 0.035** (0.020) |
| 기대 수익 | 0.149*** (0.022) |

주: *** p < 0.01, **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출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것이다. 결국 행동 편이가 야기하는 소비의 변화는 $\hat{\tau} \cdot (b_i - b^*)$ 가 될 것이다. [그림 6]의 오른쪽 그림에서 파란색 수요곡선(상위에 있는 수요곡선)은 소비자가 행동 편이를 갖고 있는 경우 직면하는 수요곡선이고, 아래 수요곡선인 빨간색 수요곡선은 일반적인 소비자일 경우 직면하는 수요곡선이다. 이때 특정 행동이 야기하는 편이의 크기를 화폐화하여 표현한 것이 $\gamma = \frac{\tau(b^* - b)}{\zeta_p}$ 가 된다.

일반적인 소비자, 즉 행동 편이가 없는 소비자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상당히 자의적인 기준일 수 있다. 본고는 이를 별도로 추정하거나 조사한 자료가 없는 관계로 응답자의 행동 편이의 질문들을 각각 평균하여, 그 평균값을 일반적인 소비자의 행동 변수 값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식 (2)와 식 (3)에서는 기본적으로 행동 편이의 내생성이 없다고($b_i \perp \epsilon_i$)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의 완화 등을 통해 분석의 강건성(robustness)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앞선 식 (2)와 식 (3)을 이용하면 식 (4)와 같은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특정 행동 변수를 갖는 소비자가 일반적인 행동 변수를 갖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적인 소비 혹은 저소비 지출을 식 (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식 (1) 우변의 첫 번째 항 γ 는 복권 수요의 가격 탄력성(ζ_p)과 식 (2) 및 식 (3)의 방정식 추정값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 $\bar{\gamma}$ 는 개별 소비자들의 추정된 $b_i - b^*$ 의 평균값이다. γ_i 의 해석을 예로 들자면, 만약 특정 행동 변수로 인해 소비자의 복권에 대한 수요가 일반적인 소비자에 비해 50% 더 발생하고, 이때 복권 가격 1,000원의 증가가 소비를 20% 줄인다면, 이 특정 행동 변수가 야기하는 편이의 화폐적 크기는 $\gamma_i = 50\% / (20\% / 1,000\text{원}) = 2,500\text{원}$ 이다.

$$\ln(s_i) - \ln(s_i^V) \approx \gamma(i)\zeta_p(i) \tag{식 (4)}$$

다음으로 식 (1) 우변의 두 번째 항 변수 σ_p 를 살펴보자. σ_p 는 행동 변수가 야기하는 편의를 교정할 때 기대되는 효과를 지칭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sigma_p = Cov \left[g(i), \frac{\gamma(i)}{\bar{\gamma}} \frac{\zeta_p(i)}{\bar{\zeta}_p} \frac{s(i)}{\bar{s}} \right]$$

이러한 정의를 통해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의 행동 편의를 교정할 때 효과가 더 커지며, 사회 전체적으로 한계 편익이 증가하는 것을 반영한다. 여기서 $g(i)$ 는 재분배 효과를 반영하며, 소득 수준에 따른 일종의 후생 가중치(welfare weight)로 가정한다. Saez(2002)에서 가정한 것처럼, 이 가중치가 가구 소득 혹은 가구 소비의 역수로 계산됨을 가정한다. 실제로 소득 수준과 앞서 사용한 행동 편익의 관계는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높을수록 자기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가 좋고, 소득이 낮을수록 자기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가 낮다. 물론 이러한 관계가 인과성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소득과 행동 변수 간에 상관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는 있다. 이러한 관계들로 인해, 교정적 소비를 통해 얻게 되는 효과가 소득 수준에 따라 이질적으로 관찰될 가능성이 있다. 본고의 분석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교정적 변화의 효과가 더 커짐을 가정한다. 즉,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가격 인상으로 인해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의 소비가 교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의 증가가 더 커짐을 가정한다. σ_p 가 이러한 부분을 반영한다고 보면 된다.

결과적으로 $\bar{\gamma}_p(1 + \sigma_p)$ 는 소비자의 수요가 교정(또는 감소)됨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적 한계 편익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교정적 조세인 피구세(Pigouvian correction)의 역할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복권 가격은 교정적 기능과 비례관계에 있다. 교정적 기능을 강화하려면 복권의 가격을 증가하는 것의 근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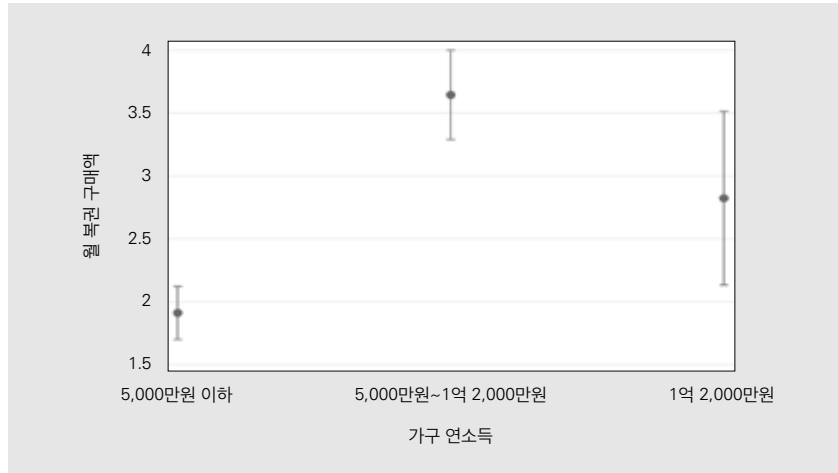
식 (1) 우변의 두 번째 항을 살펴보자. $s(z)$ 는 z 만큼의 소득을 창출하는 소비자가 지출하는 복권 구매액을 의미하고, $g(z)$ 는 앞서 정의한 것처럼 z 만큼 소득을 창출하는 소비자가 갖는 후생 가중치이다. $|\bar{\zeta}_p|$ 는 복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나타내며, \bar{s} 는 평균적인 복권 구매액의 크기를 의미한다. 식 (1)의 두 번째 항은 복권 가격 결정 과정에서의 재분배 동기를 반영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본고에서 사용한 「재정패널조사」의 경우 [그림 7]에서 살펴보듯이 비록 절대적인 복권 구매액과 소득의 상관성이 뚜렷하게 관찰되지는 않지만, [그림 3]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복권 구매와 소득의 경우 일부 역진적 성격이

본고의 분석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교정적 변화의 효과가
더 커짐을 가정한다.

[그림 7]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복권 구매와 소득의 경우 일부 역진적 성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가구 연소득과 월평균 복권 구매액

(단위: 만원)



주: 신뢰구간은 5% 유의수준
출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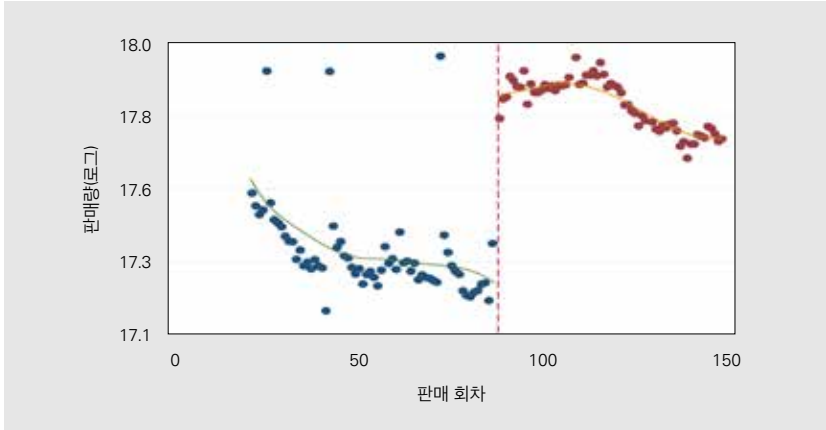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식 (1) 두 번째 항은 복권 구매와 소득 간 역의 상관성 때문에 복권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반드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복권 수요의 가격 탄력성($\overline{\zeta}_p$)은 식 (5)와 같이 추정하였다. 탄력성 추정의 아이디어는 [그림 8]과 같다. 이는 앞서 살펴본 [그림 1]을 구간을 좁혀 살펴본 그림이다. 가격의 외생적인 변화에 따른 수요의 변화를 포착하여 복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추정한다. 이를 위해 2004년 8월 첫째 주 이후 로또 복권의 가격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된 정책 변화를 활용하여, 회귀 분절 (regression discontinuity) 방정식을 통해 가격 탄력성 수치를 추정하여 충분 통계량 방법에 적용한다. 식 (5)에서 $1(Change_t)$ 는 로또 복권 가격 변화가 있었던 2004년 8월 첫째 주 이후를 나타내는 지시변수이며, $f(D_t)$ 는 시간(주차 (week)로 계산)의 3차 함수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변화 이후 복권 판매량이 약 3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ln(\text{복권 판매량}_t) = \gamma * 1(\text{change}_t) + f(D_t) + \beta * 1\text{등복권당첨금액} + \delta_m + \epsilon_{mt} \tag{5}$$

지금까지 살펴본 앞선 식 (1)을 다시 정리하면 식 (6)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8] 로또 복권 판매량의 변화



출처: 동행복권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이때 마지막 두 항, $\frac{\partial C}{\partial s} = \sum_k \pi_k w_k + o$ 은 복권의 기대 수익($\sum_k \pi_k w_k$)과 복권 발행의 간접비용(o)을 의미한다. 복권의 기대 수익은 정부 입장에서 기대 비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로또를 기준으로 <표 3>에서 산출한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복권 발행의 간접비용은 기획재정부 『2022 복권백서』 등을 참고하여 한 장 판매(1,000원)당 200원으로 가정하였다.

$$p = \bar{\gamma}(1 + \sigma) - \frac{Cov[g(\theta), s(\theta)]}{|\bar{\zeta}_p| \bar{s}} + \sum_k \pi_k w_k + o \quad \text{식 (6)}$$

식 (6)에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들, 각 항의 추정값을 대입하여 우리나라 로또 가격의 적정 수준을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p = 0.823 * (1 + 0.073) - \frac{0.106}{0.3477 * 2.601} + 0.241 + 0.2 = 1.207(\text{천원})$$

본고의 「재정패널조사」 자료와 가정을 사용하여 산출한 로또 복권의 적정 가격 수준은 1,207원으로 계산되었다. 현재 1,000원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가격 인하 이전의 2,000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bar{\gamma}$ 는 0.82(820원)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로또 복권 한 게임 판매 시 행동 변수들이 야기하는 평균적인 복권 구매 편의의 크기로 해석할 수 있다. σ 는 0.073으로(양수값) 앞서 소득이 낮은 소비자들이 더 많은 소비의 편의를 야기하는 것을 의미하

가격 탄력성
수치를 추정하여
충분통계량 방법에
적용한 결과, 로또 복권의
가격 인하 정책 변화 이후
복권 판매량이
약 3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재의 로또 가격에 비해
 본고에서 도출한
 로또 가격은 약 200원가량
 높은 수준으로,
 현재 복권 가격은
 교정적 기능보다
 재분배 기능을 더
 고려한 가격이라는
 함의가 있다.

며,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를 교정할 때 소득이 낮은 소비자들을 통한 후생 증가가 더 큼을 의미한다. 교정적 기능과 관련된 $\bar{\gamma}(1 + \sigma)$ 의 크기는 0.883(883원)으로, 추정된 로또 복권의 적정 가격 1,207원 가운데 73%가 교정적 기능을 반영하는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을 더 높히 조정한다면, 복권에 대한 과소비의 소비 행태 교정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반면, $-\frac{Cov[g(\theta), s(\theta)]}{|\zeta_p|s}$ 는 앞서 언급했듯이 역진적 성격의 복권 구매 및 재분배 효과를 고려한 복권 가격의 감소분을 나타낸다. 그 크기는 0.117(117원)이며, 주로 저소득층에서 로또 복권 소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고려할 때, 117원 정도만큼은 복권 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마지막 두 항은 언급했듯이, 복권의 기대 수익과 판매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의 로또 가격 수준과 비교하여 본고에서 도출한 로또 가격은 약 200원가량 높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현재 정부가 로또 복권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본고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함의를 찾아볼 수 있다. 현재 복권 가격은 교정적 기능보다는 재분배 기능을 더 고려한 가격이라는 점이다. 복권 구매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집단에서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이들 집단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권이 암묵적으로 과세되는 재화라는 것을 가정할 때, 정부 입장에서 재분배적 요소를 강하게 고려할 유인이 있는 것이다. 반면에, 최근 2년간 연달아 복권 판매액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권의 과소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교정적 기능을 강화시켜 가격 인상을 고려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고는 「재정패널조사」 자료와 Lockwood et al.(2022)의 모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로또 복권 가격의 적정 수준을 논의하였다. 지난해 로또 복권 판매는 역대 최대 금액을 경신하였다. 올 한 해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인생 로또’에 대한 기대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로또 복권의 수요 역시 올 한 해도 높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또 복권 가격의 조정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복권 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기존에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점이 본고의 출발점이다. 본고는 부족한 자료 및 분석의 한계가 있지만, 복권 가격 결정에 고려되어야 할 일부 요소들을 명시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 로또 복권 가격의 적정 수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고는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충분통계량 접근법을 이용하여 로또 복권의 한 게임당 가격의 적정 수준을 1,207원으로 산정하였다. 이는 현재의 1,000원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복권 구매에 대한 교정적 기능을 강화하여 가격을 인상시키는 것이 본고의 분석 결과 더 적절한 가격 수준이라 생각해볼 수 있다. 복권 가격 인상이 소비자의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권이 주로 저소득층 및 중간 소득 계층에서 많이 구매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복권 가격의 지나친 인상이 자칫 서민들의 '인생 로또'에 대한 희망마저 빼앗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의 적정 로또 가격 수준이 1,207원으로 도출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분석에 있어서 몇 가지 한계점을 언급하고 마무리한다. 첫째, 행동 편의를 야기하는 변수가 소비자들의 복권 구매와 관련된 특성을 잘 반영하는 변수가 아닐 수 있다. 복권 구매와 소비자의 특성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는 자료가 현재로서는 부재한 것으로 파악된다. 추후 이러한 자료가 구축될 수 있다면 본고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새롭게 가격 수준을 산정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탄력성 계수를 비롯하여 계수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회귀분석의 내생성이 완벽하게 통제되지 않은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충분통계량 적용 과정에서 편의가 있는 추정치를 사용하여 1,207원의 로또 가격에 편의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로또 복권 구매와 관련된 구매 정보 이외에도 다른 복권의 구매 정보까지 같이 고려하였기 때문에 본고의 추정치에 편의가 존재할 수 있다. 물론 최근 대부분의 복권 구매가 로또에 편중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다른 복권에 대한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본고의 설정이 측정오류(measurement error)를 야기할 수 있다. 「재정패널조사」에서 로또 복권 구매에 대한 별도의 문항이 없었기 때문에 로또 복권만의 구매 정보를 획득하기는 어려웠다.

본고의 분석 방법은 비단 로또 복권 가격 산정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복권과 유사한 성격의 경마, 담배 등의 가격 설정 과정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긴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통

본고는 복권 가격 결정에 고려되어야 할 일부 요소들을 명시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 로또 복권 가격의 적정 수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고의 분석 방법은 복권과 유사한 성격인 경마, 담배 등의 가격 설정 과정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분석이 추후 활발히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해 가격 산출 과정을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은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충분한 장점일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자료가 준비될 경우, 본고의 분석이 추후 활발히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KB부동산, 「데이터허브」, <https://data.kbland.kr/>, 검색일자: 2023. 1. 28.

국가기록원, 「일주일간의 설레는 행복」, <https://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lottery.do>, 검색일자: 2022. 10. 28.

기획재정부, 「2022년도 복권 인식도 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3. 1. 11.

기획재정부, 「2022 복권백서」, 2022.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2021년도 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 복권위원회사무처 공고 2022-01, 2022. 2. 25.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2022년도 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 복권위원회 공고 2023-01, 2023. 2. 28.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bokgwon.go.kr/>, 검색일자: 2023. 1. 28.

김상헌·김한창, 「사회적 비난을 두려워하는 Leviathan: 온라인 복권가격 정책결정의 모형」, 『공공경제』, 제10권 제2호, 한국재정학회, 2005, pp. 81~103.

동행복권 홈페이지, www.dhlottery.co.kr, 검색일자: 2023. 1. 16.

최필선·민인식,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한 우리나라 복권지출의 역진성 분석」, 『재정학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재정학회, 2017, pp. 49~76.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실거래가격」, 각 연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각 연도.

Lockwood, Benjamin, Hunt Allcott, Dmitry Taubinsky, and Afas Y. Sial, "What Drives Demand for State-Run Lotteries? Evidence and Welfare Implications," NBER Working Paper, 2022.

Online Gambling Websites, "Lottery Takes Around the World: Which Countries Take a Slice of the Jackpot?," 2021. 10. 12., <https://www.onlinegamblingwebsites.com/blog/lottery-taxes-around-the-world-which-countries-take-a-slice-of-the-jackpot/>, 검색일자: 2023. 1. 28.

Saez, Emmanuel, "Optimal Income Transfer Programs: Intensive Versus Extensive Labor Supply Respons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7(3), 2002, pp. 1039~1073.

Woodford, Michael, "Inattentive Valuation and Reference-Dependent Choice," Working Paper, 2012.

<각국의 복권 자료(검색일자: 2023. 1. 28.)>

미국, <https://www.irs.gov/publications/p505>; <https://www.irs.gov/taxtopics/tc419>;
<https://www.irs.gov/forms-pubs/about-publication-515>

영국, <https://www.gov.uk/income-tax>

캐나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about-your-tax-return/tax-return/completing-a-tax-return/personal-income/amounts-that-taxed.html>

호주,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come-and-deductions/income-you-must-declare/amounts-you-do-not-include-as-income/>

스페인, https://sede.agenciatributaria.gob.es/Sede/en_gb/no-residentes/irnr-sin-establecimiento-permanente/gravamen-especial-sobre-premios-loterias-apuestas.html

뉴질랜드, <https://www.ird.govt.nz/income-tax/withholding-taxes/schedular-payments/making-schedular-payments/taxing-prize-money>

노르웨이, <https://thelawreviews.co.uk/title/the-gambling-law-review/norway#footnote-006-backlink>

네덜란드, <https://www.gamblingholland.nl/what-is-the-gambling-tax-holland/>

멕시코, <https://www.nmlottery.com/2021/10/14/winners-claiming-prizes/>

핀란드, <https://www.vero.fi/en/businesses-and-corporations/taxes-and-charges/self-assessed-taxes/lottery/>

아일랜드, <https://www.lottoland.ie/magazine/are-lottery-winnings-taxed-in-ireland.html>

유럽(EuroMillions), <https://www.euro-millions.com/tax>

유럽(Euro Jackpot), <https://www.euro-jackpot.net/en/faqs>

스웨덴, <https://www.swedishlottery.se/lotto/help>

크로아티아, https://www.porezna-uprava.hr/en/EN_porezni_sustav/Pages/tax_winnings_lottery.aspx

인도, <https://tax2win.in/guide/income-tax-on-awards-and-prizes>

싱가포르, [https://www.iras.gov.sg/taxes/individual-income-tax/basics-of-individual-income-tax/what-is-taxable-what-is-not/winnings-\(toto-4d-\)](https://www.iras.gov.sg/taxes/individual-income-tax/basics-of-individual-income-tax/what-is-taxable-what-is-not/winnings-(toto-4d-))

그리스, <https://www.opap.gr/en/forologia-kerdwn>

대만, <https://www.etax.nat.gov.tw/etwmain/en/etw183w/etw183w2?id=182ae787e6200000ce49cd86bb9745af>

02

전국 주택가격 격차를 통한 지역 불균형 추이 분석¹⁾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chpark@kipf.re.kr)

1. 서론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제시하며 지역 불균형 심화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조하였다. 이는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등 심화하는 지역 격차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지역별 주택가격 격차 분석을 통해 지난 십여 년의 지역 불균형 추이를 구체적 수치로 파악하여 정책 대응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 더불어 주택가격 격차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지역 불균형 대응 정책 중 하나인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전국 주택가격 격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살펴본다.

지역 불균형 연구에서 지역 간 주택가격 격차를 분석하는 것은 주택가격에 반영된 지역별 생활여건 격차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모두가 자유롭게 거주 지역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된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지역에 살고자 하는 유인이 있으며 거주를 위한 지불용의가 크다는 뜻이다. 그러한 유인은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좋은 직장, 넓고 깨끗한 집, 혹은 공연장이나 백화점 등 편의시설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유인의 총합을 생활여건으로 칭하면 주택가격의 격차가 곧 지역 간 생활여건 격차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지역 간 주택가격 격차의 추이를 분석하여 지역 간 생활여건의 격차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1) 본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강연 연구원의 도움으로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주택가격의 상대적 격차를 통하여 지역 불균형을 분석할 때 장점은 대규모 주택공급이나 거래 관련 규제 등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의 작용에도 지역 간 주택의 상대 가격은 생활여건을 반영하여 유지되기 때문에, 다양한 외부 여건 변화와 상관없이 장기간 일관되게 지역 간 격차 분석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분석은 지역 간 생활여건의 변동에 따라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거주지를 옮길 수 있다는 완전한 이동성 가정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그 적용에 유의해야 한다는 한계 또한 존재한다.²⁾ 예를 들어 완전한 이동성 가정에 따르면 특정 지역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시행되어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일제히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인구가 빠르게 유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인구이동이 즉각적으로 일어나기는 어려우므로 두 지역 간 상대적 주택가격 격차가 생활여건의 차이를 온전히 반영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다만 본고의 분석은 장기간에 걸친 추이를 살펴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약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전국 주택가격 격차 분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전국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2006~2021년, 16년간의 전국 주택가격 지니지수(Gini index) 추이를 분석한다. 지니지수는 특정 집단 구성원 간 격차의 총합을 하나의 숫자로 대표하여 나타내는 지표로, 본고에서는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간 격차를 종합하여 실증 분석에 활용한다.³⁾ 지니지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전국 주택가격 격차는 2006년에서 2017년까지 꾸준히 하락한 후 2021년까지 빠르게 반등하는 U자 모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주택가격 격차는 각 지역 간 주택가격의 평균적인 차이와 각 지역 내 주택가격 차이 모두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U자 모양의 변화는 예컨대 서울과 대전의 평균 집값 차이의 변화에 기인할 수도 있지만, 서울·대전 및 각 지역 내 주택가격 격차의 변화를 주로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다. 본고의 주된 관심은 지역 내(within-region) 주택가격 격차가 아닌, 지역 간(between-region) 주택가격 격차이므로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을 구분하기 위하여 타일 분해(Theil decomposition) 기법을 이용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시행한다. 분석 결과, 주된 주택가격 격차 감소 구간인 2010~2016년의 변화는 지역 간 격차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등 구간인 2017년 이후에는 지역 간 격차와 지역 내 격차가 모두 증가하였다. 결과

본고는 국토교통부의 전국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16년(2006~2021년)간의 전국 주택가격 지니지수 추이를 분석한다.

2) 도시경제학의 공간균형 모형과 완전한 이동성 가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조희평(2021) 참조

3) 본고는 불평등 지수를 이용하여 전국 주택가격 격차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집중하며, 이를 확장하여 주거 불평등에 관한 규범적 논의를 하는 것은 본고의 범위를 벗어남을 밝힌다.

지역 간 주택가격 격차는
지난 16년간 하락 구간과
상승 구간을 거치며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으로 본고의 관심인 지역 간 주택가격 격차는 지난 16년간 하락 구간과 상승 구간을 거치며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이어진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과는 달리 주택가격으로 본 지역 간 생활여건 격차는 줄어든 후 다시 커지는 추세를 보였다.

전국 주택가격 격차를 분석한 국내 선행연구 중 조윤지(2020)는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2008~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주택가격 5분위 분배율을 계산하였다. 본고와 마찬가지로 주택가격 격차가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든 후 커지는 현상을 보였는데, 지역별로 분석할 경우 이러한 U자 모양의 추세가 수도권에서만 나타나고 비수도권에서는 격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본고에서는 U자 모양의 추세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광역시 및 기타 시도에서도 나타남을 보이는데, 분석표본이 크고 기간이 길어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와 차이가 나타났다. 서재원·진장익(2021) 역시 국토교통부의 서울시 주택 실거래가 2011~2019년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거래가격 지니지수를 분석한 결과, 주택거래가격 격차가 줄어들다가 2013년부터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연구 모두 지역 내 격차와 지역 간 격차를 구분하지는 않았다.

한편 주거 격차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주택가격 외에도 연구 목적에 따라 가구당 주거면적 등 주거서비스 관련 지표를 분석하였다. 조윤지(2020)는 가구 및 1인당 주거면적,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등을 분석하여 주택가격과 달리 5분위 분배율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함을 보였다. 이여정·정철모(2021)는 지니지수와 타일지수로 측정한 1인당 주거면적 불평등도가 2006년 대비 2014년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상승함을 보였다. 이수옥(2018)은 2006~2017년 소득계층별 자가보유율 및 자가점유율을 분석하여 주택 소유 관련 격차가 2012년 이후 확대됨을 언급하였다.

주거 관련 불평등을 연구한 선행연구는 모두 표본 자료를 이용하여 5분위 분배율, 지니지수 등 표본 불평등도를 계산하였는데, 표본통계량을 이용하였음에도 표본오차 및 신뢰구간을 구하지 않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고는 전국 개별주택 및 공공주택 공시가격 전수 자료를 사용하여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한다.

지역별 생활여건 격차 관점에서 주택가격을 분석한 국내 선행연구는 이변송·김용현(2004)과 조희평(2021)이 있다. 이들 연구는 지역별 임금 대비 주택가격

을 통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여 임금의 영향을 통제된 상태의 주택가격에 반영되는 거주환경의 질을 분석하였다. 본고는 임금의 영향을 통제하지 않고 임금 수준까지 해당 지역의 생활여건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고 후반부에서는 앞서 살펴본 지역 간 주택가격 격차의 변동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 불균형 해소 정책 중 하나인 혁신도시 개발 정책이 주택가격 격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분석한다. 혁신도시 개발은 정부가 지난 2003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을 발표하고, 국회가 2007년 「혁신도시법」을 제정한 이래 지역 발전의 거점을 형성하고 지역의 생활여건을 높이기 위하여 10개 시도에서 추진되었다. 혁신도시의 개발 시기가 위에서 살펴본 지역 간 주택가격 격차 하락 시기와 맞물리고 그 정책 목표 중 하나가 지역 불균형 해소인 만큼 혁신도시 개발이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다각도로 살펴보았으나, 관련하여 뚜렷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전국 주택 공시가격의 편차를 종합하여 나타내기 위해 지니지수와 타일지수의 두 가지 불평등 지수를 이용한다.

II. 전국 주택가격 격차 추이

1. 불평등 지수를 이용한 주택가격 격차 측정

전국 주택 공시가격의 편차를 종합하여 나타내기 위해 본고는 지니지수와 타일지수의 두 가지 불평등 지수를 이용한다. 지니지수는 인구의 누적비율에 따른 소득의 누적점유율을 나타내는 로렌츠곡선이 모든 구성원의 소득이 균일한 균등분포선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나타낸다([그림 1] 참조). 이러한 직관적인 해석에 힘입어 지니지수는 불평등도 측정에 이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불평등 지수로 자리하고 있다. 지니지수를 수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구성원 간의 차이를 평균한 값(절대 소득편차의 평균)을 전체 소득의 평균으로 나누어 정규화(normalize)하는 공식이 대표적이다. 즉 사회에 총 n 명의 구성원이 있으며 i 번째 구성원의 소득을 x_i , 평균소득을 \bar{x} 라고 할 때 지니지수 G 는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타일지수를 이용하면
 전국 주택가격 격차를
 지역 내 주택가격 격차와
 지역 간 평균 주택가격 격차의
 합으로 분해할 수 있다.

$$G = \frac{1}{2} \frac{\text{절대소득편차의 평균}}{\text{평균소득}} = \frac{1}{2} \frac{\frac{1}{n^2} \sum_{i=1}^n \sum_{j=1}^n |x_i - x_j|}{x} \quad \text{식 (1)}$$

본고에서는 소득이 아닌 주택가격 격차를 파악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각 구성원의 소득이 아닌 주택의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지니지수를 계산한다.

한편 타일지수는 지니지수의 로렌츠곡선을 이용한 해석과 유사한 직관적인 해석은 불가하지만, 전체 불평등도를 집단 간 불평등도와 집단 내 불평등도로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타일지수 T 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 = \sum_{i=1}^n s_i \frac{x_i}{x} \log\left(\frac{x_i}{x}\right) \quad \text{식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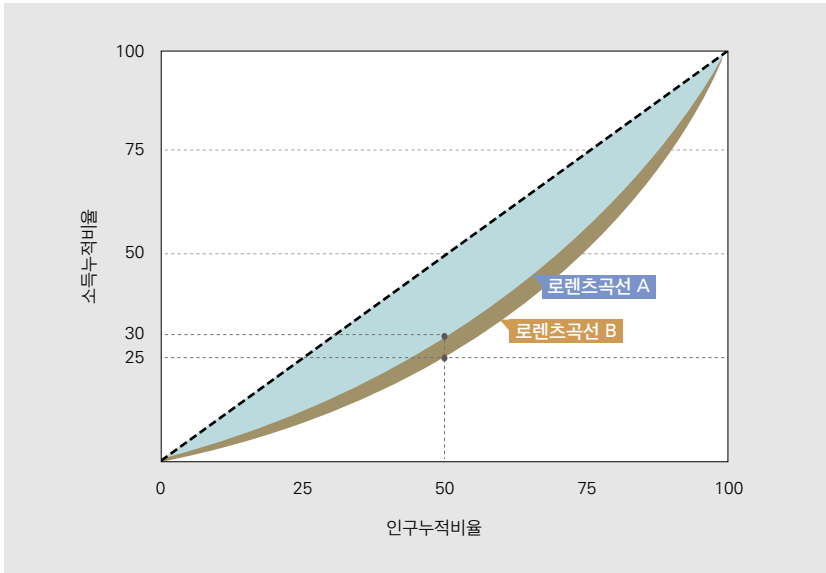
이때 s_i 는 i 번째 구성원이 전체 인구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1/n$ 이다. 이제 전체 집단을 m 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i 번째 지역의 평균소득을 \bar{x}_i , i 번째 지역의 인구 수가 전체 인구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s_i 라고 하면 식 (3)과 같이 타일 분해가 가능하다.

$$T = \sum_{i=1}^m s_i T_i + \sum_{i=1}^m s_i \frac{\bar{x}_i}{x} \log\left(\frac{\bar{x}_i}{x}\right) \quad \text{식 (3)}$$

이때 우변의 첫 번째 항은 각 지역 내 불평등도 T_i 를 각 지역의 인구 수로 가중평균한 값으로, 각 지역 내(within-region) 불평등도를 전국 단위에서 총합한 값이다. 두 번째 항은 각 지역의 모든 구성원이 똑같이 해당 지역의 평균소득만큼의 소득을 얻는다고 했을 때 전체 집단의 불평등도이다. 즉 지역 내 불평등도를 제거하고 지역 간 평균소득의 차이만을 고려했을 때의 불평등도로, 지역 간(between-region) 불평등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식 (3)은 전체 불평등도인 T 를 지역 내 불평등도와 지역 간 불평등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본고의 주택가격 격차에 적용하면 전국 주택 간 공시가격 편차의 총합을 각 지역 내 주택가격 격차의 합과 지역 간 평균 주택가격 격차의 합으로 분해할 수 있다. 본고에서 관심을 가지는 지역 불균형에 해당하는 항목은

[그림 1] 로렌츠곡선을 통한 불평등도 측정

(단위: %)



- 주: 1. 점선으로 표시된 45도선은 소득 분포가 완벽히 균일한 균등분포선임
- 2. 로렌츠곡선 A와 로렌츠곡선 B는 각각 상대적으로 균등분포선에 가깝고 불평등도가 낮은 분포 A와 상대적으로 불평등도가 높은 분포 B를 나타냄
- 3. 지니지수는 그림상 균등분포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을 균등분포선 아래 직각삼각형 면적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됨

출처: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작성방법 및 의의 > 지니계수」, <https://kostat.go.kr/>, 검색일자: 2023. 3. 5.

후자인 지역 간 주택가격 격차이므로 타일 분해를 이용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전국 주택가격 격차 추이

본 절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전국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2006~2021년 전수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주택가격 격차를 측정한다. 주택의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 자료를 이용하는 이유는 전수 자료를 활용하여 표본 불평등도의 신뢰구간 설정 문제 외에도 김정환(2022)에서 지적한 편의 및 민감도 문제 등 표본 통계량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피하여 가격 격차 추세를 일관되게 분석하기 위함이다. 특히 우리나라 공시가격은 과세를 위한 기준이 되며 매년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자료를 갱신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공시가격 자료에 비하여 신뢰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송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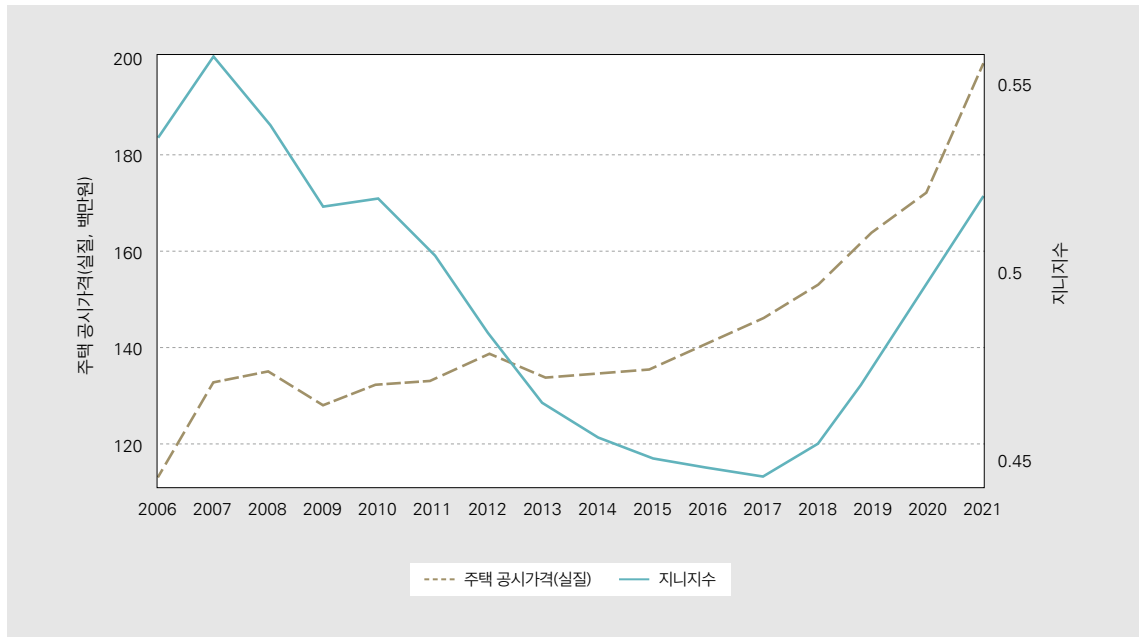
주택의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 자료를 이용하는 이유는 전수 자료를 활용하여 표본 통계량 사용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피하여 가격 격차 추세를 일관되게 분석하기 위함이다.

전국 주택가격 지니지수는
2007년 0.56에서
지속 하락하여
2017년 0.45로 최저점을
기록 후 2021년 0.52로
다시 상승하는 U자 형태가
나타났다.

(2022)의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사이에는 편차가 존재하며 이러한 편차가 일관되지 않고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하여 불평등도 측정에 편의를 발생시킬 여지도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연도, 지역 및 가격대별 현실화율의 차이를 반영한 후속 연구를 통해 측정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림 2]는 전국 주택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계산한 연도별 평균 공시가격 및 지니지수의 추이를 나타낸다. 2010년 물가를 기준으로 보정한 주택 한 채의 평균 실질 공시가격은 2007년에서 2015년까지 1억 3,000~1억 4,000만원 수준을 유지한 뒤 2016년부터 상승하여 2021년에는 약 2억원에 이르렀다. 전국 주택가격 지니지수는 2007년 0.56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7년 0.45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다시 상승하여 2021년 0.52 수준으로 높아지는 U자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지수 변화의 정도를 가늠하기 위하여 주요국의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지수와 비교해 보면, 지니지수 0.1만큼의 차이는 영미권 국가의 소득불평등도(미국 0.38, 영국 0.35)와 북유럽 국가의 소득불평등도

[그림 2] 2006~2021년 전국 주택 공시가격 및 지니지수



주: 통계청의 2010년 기준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물가상승률 보정

출처: 국가공간정보포털, 「공동주택가격」, <http://data.nsd.go.kr/dataset/12645>, 검색일자: 2022. 4. 28.; ____, 「개별주택가격정보」, <http://data.nsd.go.kr/dataset/20200305ds00001>, 검색일자: 2022. 4. 2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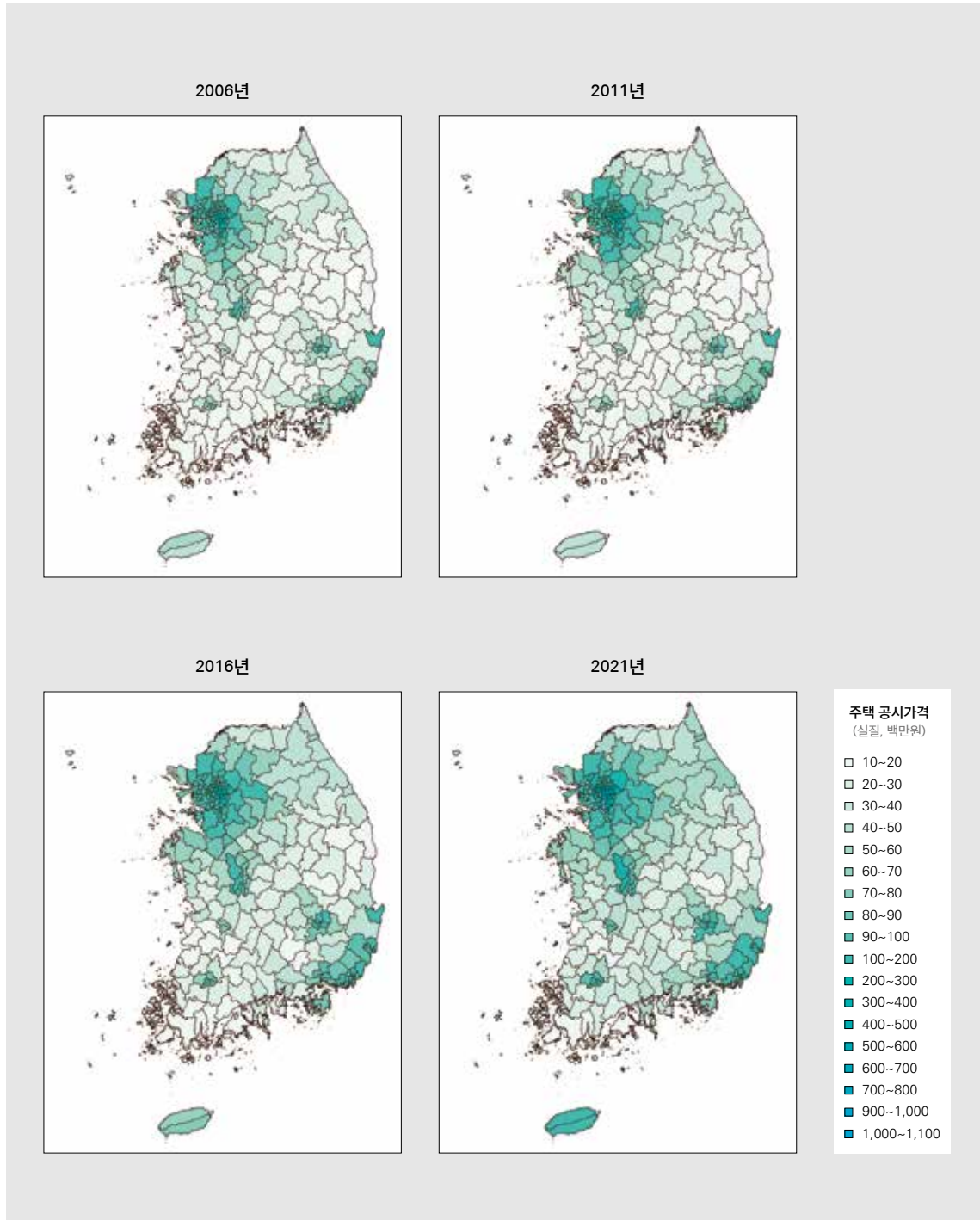
(스웨덴 0.28, 덴마크 0.27, 노르웨이 0.26)의 차이에 해당한다. 물론 주택가격 기준 지니지수와 소득 기준 지니지수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2007년에서 2021년에 걸친 우리나라 주택가격 격차의 하락과 상승 폭이 절대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평균 주택가격이 정체한 기간에 지니지수가 하락한 것은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던 주택의 가격이 빠르게 올랐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그림 3]의 시군구별 주택 공시가격 시각화 자료를 보면 2006~2016년 색이 옅은 지역은 점차 진해졌으나, 서울 등 색이 짙은 지역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016~2021년 사이에는 서울 및 각 지역 거점도시를 포함하여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였다.

[그림 4]에서 주택 공시가격 및 지니지수 추이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세종시 포함) 및 기타 지역 등 권역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우선 주택가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도권은 2007~2015년 소폭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꾸준히 상승하였다. 따라서 이 기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주택가격 격차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국 주택가격 불평등도 추이가 지역 간 격차 변화에 기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지니지수를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서 U자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주택가격 불평등도 추이가 지역 내 격차 변화의 영향 역시 받았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수도권은 2007~2016년 0.5에서 0.4 수준으로 감소한 뒤 반등하는 반면, 광역시는 2010년, 기타 시도는 2012년부터 지니지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등 또한 기타 시도의 경우 2019년부터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시점 및 변동성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분석을 통하여 앞서 살펴본 조윤지(2020)의 2008~2018년 기간 연구에서 비수도권 주택가격 격차가 꾸준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가 분석 기간이 반등 시점 이전까지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비수도권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동시에 지니지수는 낮아지는 구간이 나타나는데, 이는 비수도권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주택 가치가 더 빠르게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주택가격 격차의 U자 형태 변화는 수도권과 광역시 및 기타 지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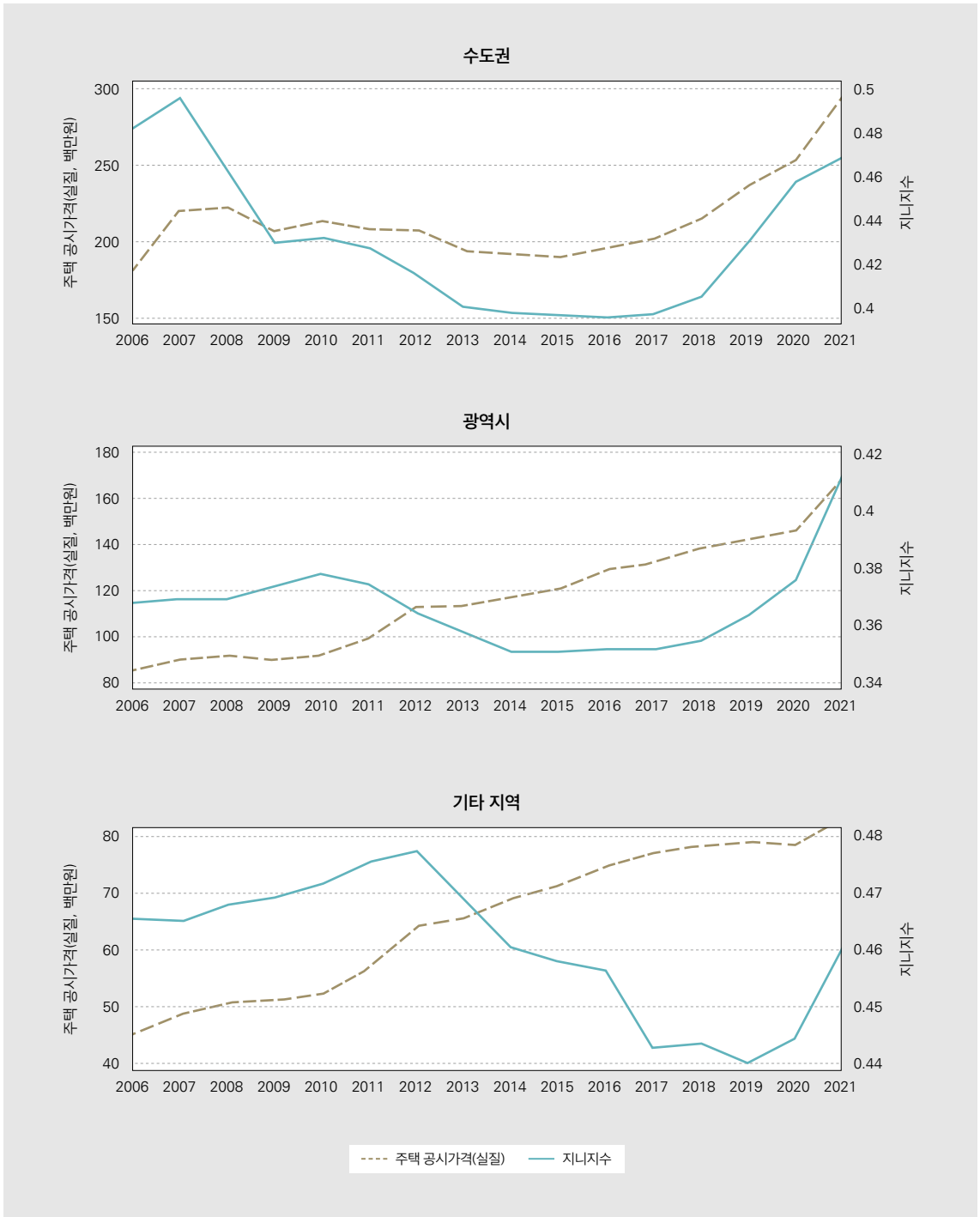
[그림 3] 2006~2021년 시군구별 주택 공시가격



주: 통계청의 2010년 기준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물가상승률 보정

출처: 국가공간정보포털, 「공동주택가격」, <http://data.nsd.go.kr/dataset/12645>, 검색일자: 2022. 4. 28.; ____, 「개별주택가격정보」, <http://data.nsd.go.kr/dataset/20200305ds00001>, 검색일자: 2022. 4. 2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 2006~2021년 권역별 주택 공시가격 및 지니지수



주: 통계청의 2010년 기준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물가상승률 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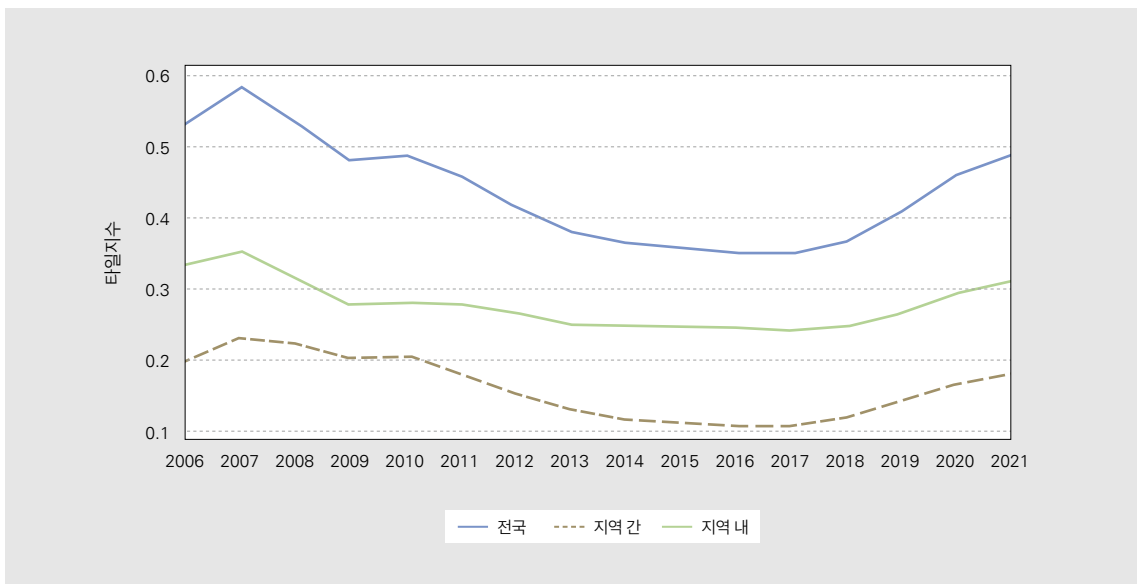
출처: 국가공간정보포털, 「공동주택가격」, <http://data.nsd.gov.kr/dataset/12645>, 검색일자: 2022. 4. 28.; ____, 「개별주택가격정보」, <http://data.nsd.gov.kr/dataset/20200305ds00001>, 검색일자: 2022. 4. 2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전국 17개 시도를 기준으로
타일 분해를 진행한 결과,
주택가격 격차의
U자 형태 변화는
지역 간 격차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그림 5]는 타일지수를 이용하여 전국 주택가격 격차를 지역 내 격차와 지역 간 격차로 분해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전국 주택가격 격차 추이는 지니지수로 측정된 결과와 마찬가지로 2017년까지 줄어든 후 다시 늘어나는 U자 모양을 띠고 있다. 다음으로 전국 17개 시도를 기준으로 타일 분해를 진행한 결과, 전체 주택가격 격차에서 지역 내 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역 간 격차보다 약 0.1 높지만 격차의 U자 형태 변화는 지역 간 격차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특히 2010~2017년 주택가격 격차의 하락은 지역 간 격차 하락이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2010년과 2017년 이후의 추이는 지역 내 격차와 지역 간 격차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기여하였다. 결과적으로 2021년 지역 내 격차와 지역 간 격차는 모두 2006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림 6]은 주택 한 채당 가격 대신 주거전용면적(㎡)당 주택가격의 격차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앞선 분석의 생활여건이 주거면적에 대한 지불용의를 포함하는 개념이었다면, 면적당 주택가격 격차 분석은 주택 고유의 면적을 제외한 지역 생활여건에 집중한다고 볼 수 있다. 분석 결과는 앞선 주택가격 격차 분석 결과와 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면적당 주택가격 역시 정체가간을 가진 후 상승하였으며 지니지수는 2016년부터 반등하는

[그림 5] 2006~2021년 주택가격 타일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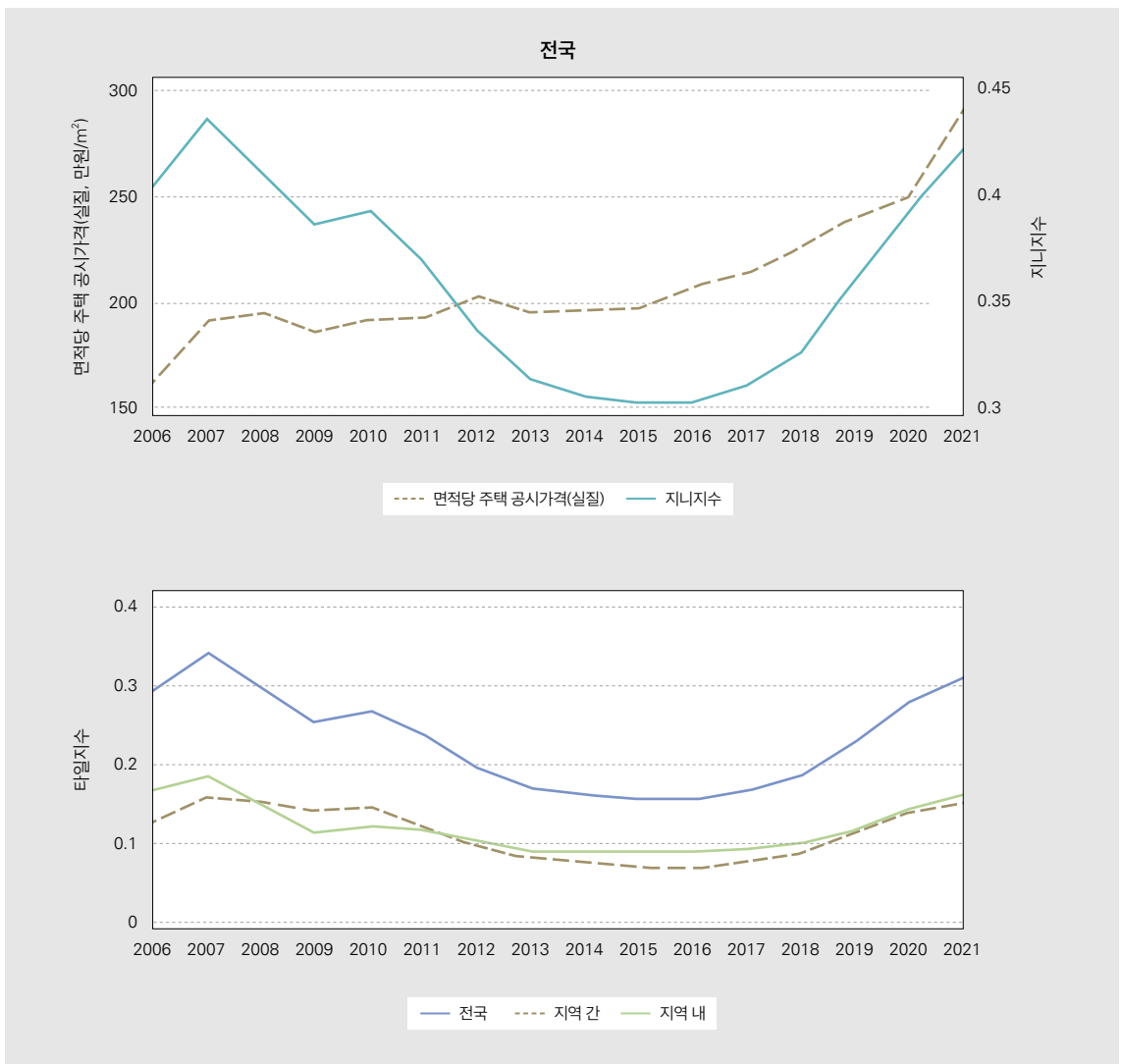


출처: 국가공간정보포털, 「공동주택가격」, <http://data.nsd.go.kr/dataset/12645>, 검색일자: 2022. 4. 28.; ____, 「개별주택가격정보」, <http://data.nsd.go.kr/dataset/20200305ds00001>, 검색일자: 2022. 4. 2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U자 형태를 보인다. 타일 분해 결과 역시 지역 간 격차가 U자 형태의 추세를 견인하고 있다. 다만 전체 격차에서 지역 간 격차와 지역 내 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앞선 분석 결과와의 차이점이다.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이 토지가격 역시 낮아 면적이 넓은 주택이 많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토지가격이 낮은 지역에서 보다 넓은 주택에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점 또한 해당 지역에 살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본고의 분석 방향은 면적 개념을

면적당 주택가격 격차 분석 결과, 앞선 분석과 달리 전체 격차에서 지역 간 격차와 지역 내 격차의 비중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림 6] 2006~2021년 면적당 주택 평균가격, 지니지수 및 타일 분해



출처: 국가공간정보포털, 「공동주택가격」, <http://data.nsdj.go.kr/dataset/12645>, 검색일자: 2022. 4. 28.; ____, 「개별주택가격정보」, <http://data.nsdj.go.kr/dataset/20200305ds00001>, 검색일자: 2022. 4. 2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제Ⅲ장에서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전국 주택가격 격차 변동을
주도하였을 가능성을
분석한다.

포함하여 분석하는 주택 한 채당 가격 분석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논의에서 전국 주택가격 격차가 하락한 후 상승하는 U자 형태를 보인다. 이는 점과 이러한 추이가 지역 간 주택가격 격차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역 간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역 간 격차의 경우 2007년부터 10년간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2017년부터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변동요인 분석을 통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며 지역 내의 주택가격 격차 또한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지역 단위의 주거 격차 대응책 마련도 요구된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대표적인 지역 균형발전 정책인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이러한 주택가격 격차 변동을 주도하였을 가능성을 분석한다.

Ⅲ. 혁신도시 개발과 전국 주택가격 격차

1. 혁신도시 개발사업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지역별 성장 거점 마련을 목표로 공공기관 이전과 연동하여 총 10개 시도⁴⁾에 주거 및 산업 등 자체 기능을 갖춘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2005년 10개 혁신도시의 입지선정을 완료한 이래 지난 20년간 여러 정부를 거치며 꾸준히 추진되었다(<표 1> 참조). 혁신도시 소재 주택의 분양이 시작되어 공시가격이 처음으로 공개된 해는 2013~2015년이다. 2019년 10개 혁신도시에 4만 8,000여 명 규모의 134개 공공기관(세종시 제외)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2022년 기준 주택은 9만여 호 공급되었으며 인구는 23만여 명에 달한다(단계별 혁신도시 개발 계획은 <표 2> 참조). 혁신도시 개발에 투입된 예산은 2015년 말 기준 개발사업과 기반시설 설치에만 10조원 이상이다(고창수·이환웅, 2020).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중소형 도시 10개를 동시에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혁신도시 개발로 인한 주택가격 및 지가 변동에 관한 연구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주택가격을 연구한 민혜숙·신승우(2021)는 이중차분법을 통하여 시군구 단위에서 혁신도시 소재지의 주택가격이 혁신도시 미소재 시군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을 보였다. 이지연(2015) 역시 혁신도시 소재 시군구의 주택가격

4) 혁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은 강원,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광주·전남, 전북, 제주, 충북 지역이다.

을 분석하여 주택가격이 상승함을 보였다. 그 외 혁신도시 소재 시군구의 지가 변동(이유철·김찬호, 2020; 김명연·김은정, 2018; 강호제·정명진, 2010)과 혁신도시 소재 필지의 지가 변동(이호준 외, 2012)을 연구한 논문들 역시 혁신도시로 인한 지가 상승을 확인하였다. 장영봉(2019)은 읍면동 단위에서 혁신도시와 신도심, 원도심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비교하여 혁신도시, 신도심, 원도심 순으로 지가가 차등적으로 상승함을 보였다. 선행연구들이 혁신도시가 소재지의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을 상승시켰는지에 주목했다면, 본고는 혁신도시가 주변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성장 거점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분석하는 데 집중한다.

혁신도시가 소재지의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을 상승시켰는지에 주목한 선행연구와 달리, 본고는 혁신도시가 주변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성장 거점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분석하는 데 집중한다.

<표 1> 혁신도시 추진 경과

| 구분 | 주요 내용 |
|-----------|---|
| 2003년 6월 | 정책 구상 발표 |
| 2004년 8월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 발표 |
| 2004년 8월 | 이전원칙 설정 |
| 2005년 6월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기본원칙 및 추진방향 발표 |
| 2005년 6월 | 이전공공기관 확정 |
| 2005년 8월 |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
| 2005년 8월 | 전담조직 설치 |
| 2005년 8월 |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 설치 |
| 2005년 12월 | 입지선정 완료 |
| 2005년 12월 | 10개 혁신도시 입지선정 완료 |
| 2007년 1월 | 제도적 기반 구축 |
| 2007년 1월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 2007년 4월 | 혁신도시 지구지정 |
| 2007년 4월 | 10개 혁신도시 지구 지정 완료 |
| 2007년 9월 | 기반조성 착공 |
| 2007년 9월 | 혁신도시별 부지조성 공사 착공 |
| 2007년 12월 | 지방이전계획 승인 |
| 2007년 12월 | 이전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 승인 시작 |
| 2012년 | 지방이전 개시 |
| 2012년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혁신도시 이전) 개시 |
| 2019년 12월 | 지방이전 완료 |
| 2019년 12월 |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 |

출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혁신도시 주요 총괄 현황』, <https://innocity.molit.go.kr>, 검색일자: 2022. 12. 20.

<표 2> 단계별 혁신도시 개발 계획

| 개발 단계 | | | 개발 규모 |
|-------|-----------|--------------|---|
| 1단계 | 2007~2014 | 이전 공공기관 정착단계 |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기업 종사자 수 약 2,500~4,000명, 유발인구 약 1만 5,000~2만 5,000명 |
| 2단계 | 2015~2020 | 산·학·연 정착단계 | 혁신도시 유치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종사자 수 약 4,000~8,000명, 유발인구 2만 5,000~5만명 |
| 3단계 | 2021~2030 | 혁신확산 단계 | 혁신 클러스트 확산에 따른 일자리 수와 유발인구는 지역과 규모에 따라 상이 |

출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https://innocity.molit.go.kr/>, 검색일자: 2022.6. 22.,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혁신도시 개발이 전국 주택가격 격차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는 혁신도시 소재지의 주택가격 상승과 혁신도시 소재지 주변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다.

2. 혁신도시 개발이 주택가격 격차에 미친 영향

혁신도시 개발이 전국 주택가격 격차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혁신도시 소재지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상대적 저개발 지역에 신형 주택을 공급한 결과 소재지의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전국 주택가격 격차가 줄어드는 경로이다. 하지만 혁신도시 소재지의 주택이 전국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소재지 주택가격의 변화만으로 전국 주택가격 격차가 변동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두 번째 경로는 혁신도시 소재지 주변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다. 도시경제학의 도시성장이론(Brueckner, 1980; Capozza and Helsely, 1989; Braid, 2001)에 따르면 도시의 성장으로 그동안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였던 주변부 토지의 용도가 변화하고 그에 따라 주변부 토지 및 주택의 미래가치가 높아져 주변부의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도시성장이론은 혁신도시가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기능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목표에 분명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본 장에서는 혁신도시 개발이 혁신도시 소재지 및 주변지역의 가치 상승을 유도하여 제Ⅱ장에서 살펴본 지역 간 주택가격 격차 변동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한다.

혁신도시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주택가격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읍면동 단위에서 혁신도시 소재지와 그 주변지역을 구분한다. 다만 행정구역인 읍면동을 이용할 경우 분석 기간 동안 변화가 잦아 패널 단위 분석에 어려움이

<표 3> 혁신도시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읍면동 현황

(단위: 개)

| 구분 | 부산 | 대구 | 울산 | 강원 | 충북 | 전북 | 광주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총계 |
|---------------|-----|-----|-----|-------|-------|-------|-------|-------|-------|-----|--------|
| 혁신도시 소재 | 1 | 4 | 4 | 1 | 2 | 4 | 1 | 1 | 1 | 1 | 20 |
| 혁신도시 1km 이내 | 1 | 3 | 2 | 1 | 2 | 1 | 2 | 3 | 1 | 2 | 18 |
| 혁신도시로부터 1~3km | 6 | 12 | 21 | 9 | 13 | 8 | 19 | 6 | 12 | 1 | 107 |
| 혁신도시로부터 3~5km | 12 | 8 | 11 | 9 | 11 | 29 | 18 | 18 | 16 | 5 | 137 |
| 그 외 | 226 | 261 | 137 | 1,242 | 1,464 | 1,671 | 2,681 | 3,043 | 2,123 | 175 | 13,023 |
| 총계 | 246 | 288 | 175 | 1,262 | 1,492 | 1,713 | 2,721 | 3,071 | 2,153 | 184 | 13,305 |

출처: 국가공간정보포털, 「공동주택가격」, <http://data.nsd.go.kr/dataset/12645>, 검색일자: 2022. 4. 28.; __, 「 개별주택가격정보」, <http://data.nsd.go.kr/dataset/20200305ds00001>, 검색일자: 2022. 4. 2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획 변화가 적은 법정동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주민등록 관할구역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2021년 법정동 구획을 기준으로 법정동 단위 연도별 패널 자료를 구축하였다.

각 읍면동과 혁신도시 소재지 간 거리는 읍면동의 중심지와 혁신도시 소재 신규 공급 공동주택 중 가장 가까운 공동주택 단지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이때 읍면동의 중심지는 지역 내 모든 주택 좌표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하였다. 즉, 주택 밀집도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한 중심지 개념을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혁신도시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읍면동 현황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7]에는 읍면동 단위 분석의 예시로 전라북도의 읍면동별 주택 공시가격이 연도별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다. 각 지도 중앙 상단에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전북 혁신도시 소재지로, 전주시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 내 신규 공급 주택의 최초 분양(2012년)과 공시가격 발표(2014년)를 전후로 주택가격을 비교하면 혁신도시 소재지의 주택가격이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혁신도시 주위 읍면동의 주택가격 역시 상승하였지만, 이것이 혁신도시 개발의 파급효과인지 전주시를 비롯한 전반적인 주변지역 주택가격 상승 추세의 영향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림 8]에서는 주택가격 변화를 보다 선명하게 보기 위하여 전북 혁신도시 소재 읍면동 및 혁신도시 소재 주택으로부터 1km, 3km 및 5km 내에 그 중심지가 있는 읍면동들의 주택가격 추이를 제시하였다.⁵⁾ 대조를 위하여 혁신도시로부터 10km 이상 떨어진 읍면동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통제집단과 비교할 때 혁신도시 소재지 및 주변 읍면동의 주택가격이 혁신도시 개발을 전후로 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역시 혁신도시 개발의 파급효과인지 주변지역의 상승 추세인지 그래프만으로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혁신도시의 주택가격 파급효과를 보다 엄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혁신도시가 소재한 10개 시도 자료를 모두 이용하여 이원고정효과 모형의 이벤트 스타디 패널회귀분석을 시행한다. 회귀모형은 식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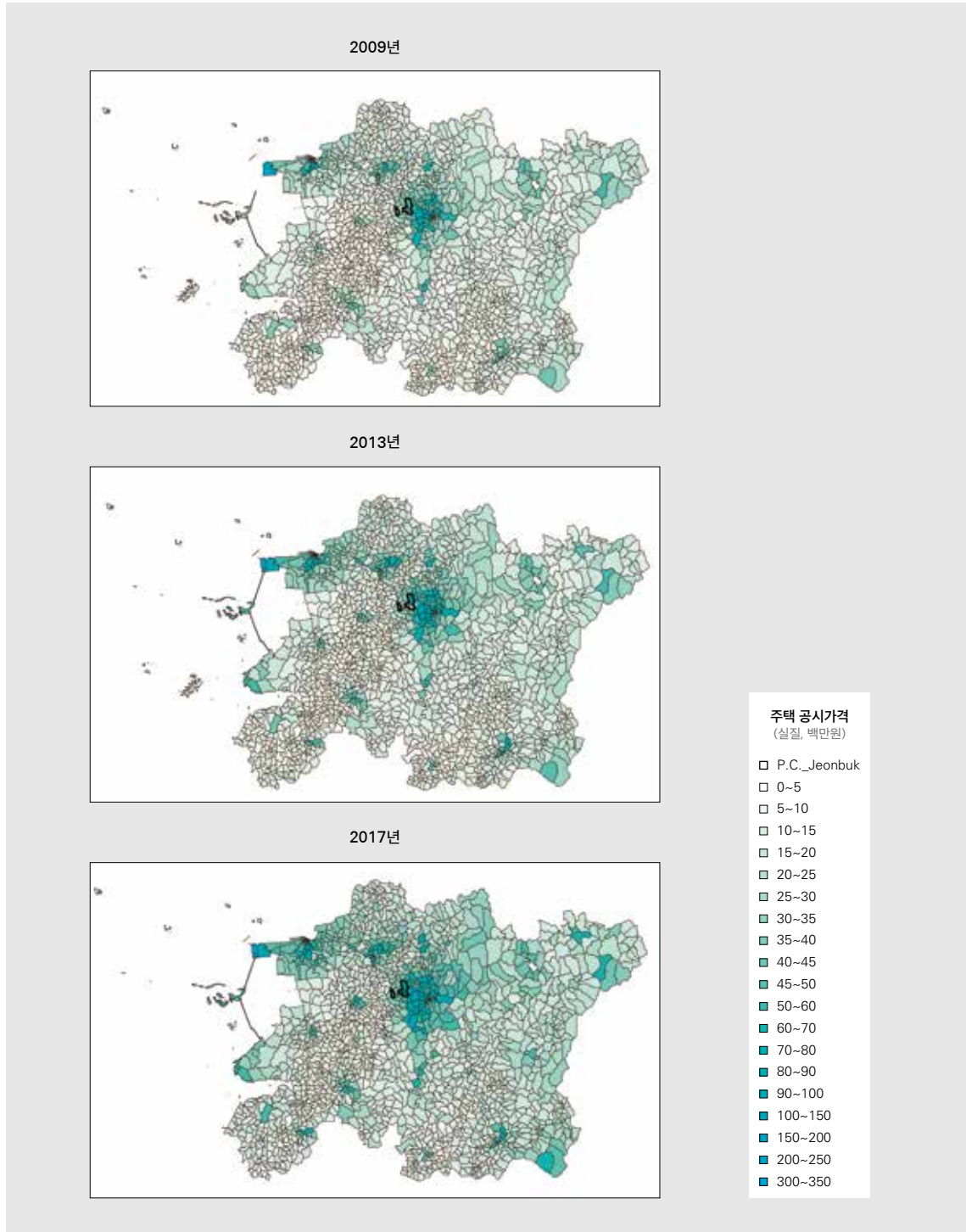
$$\log P = \sum_{k \in K} \beta^k \delta_{it}^k Treat_i + \lambda_i + \mu_t + \epsilon_{it} \quad \text{식 (4)}$$

이때 $\log P_{it}$ 는 읍면동 i 의 t 년도 로그 주택가격, δ_{it}^k 는 읍면동 i 가 속한 시도

전북 혁신도시 내
신규 공급 주택의
최초 분양(2012년)과
공시가격 발표(2014년)를
전후로 주택가격을 비교하면
혁신도시 소재지의
주택가격이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10개 혁신도시 모두의 소재지 및 주변 읍면동의 주택가격 변화 그래프는 [부도 1] 참조

[그림 7] 전라북도 읍면동별 주택 공시가격



출처: 국가공간정보포털, 「공동주택가격」, <http://data.nsd.go.kr/dataset/12645>, 검색일자: 2022. 4. 28.; ____, 「개별주택가격정보」, <http://data.nsd.go.kr/dataset/20200305ds00001>, 검색일자: 2022. 4. 2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의 혁신도시 주택 공시가격이 최초 발표된 연도와 t 의 차이가 k 일 때만 1의 값을 가지는 이벤트 스터디 사건 시간 더미변수, $K = \{-7, -6, \dots, 6\} \setminus \{-1\}$ 는 공시가격 최초 발표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삼은 이벤트 스터디 사건 시간 집합, $Treat_{it}$ 는 읍면동 i 가 혁신도시에 속해있는지 혹은 혁신도시로부터 특정 거리 이내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λ_i 와 μ_t 는 각각 읍면동과 연도 고정효과, ϵ_{it} 는 시군구 단위에서 균집한 표준오차를 뜻한다.⁶⁾ 대조군은 혁신도시 소재 시도의 읍면동 중 해당 시도 혁신도시의 주택에서 10km 이상 떨어진 읍면동으로 설정하였으며 분석 자료는 균형패널이다. 관심 회귀계수는 β^k 로, 혁신도시 내 주택 공시가격 공개로부터 k 년 후 혁신도시 소재지의 평균 주택가격이 공시가격 공개 1년 전에 비하여 $(e^{\beta^k} - 1) \times 100\% \approx \beta^k \times 100\%$ 만큼 상승하였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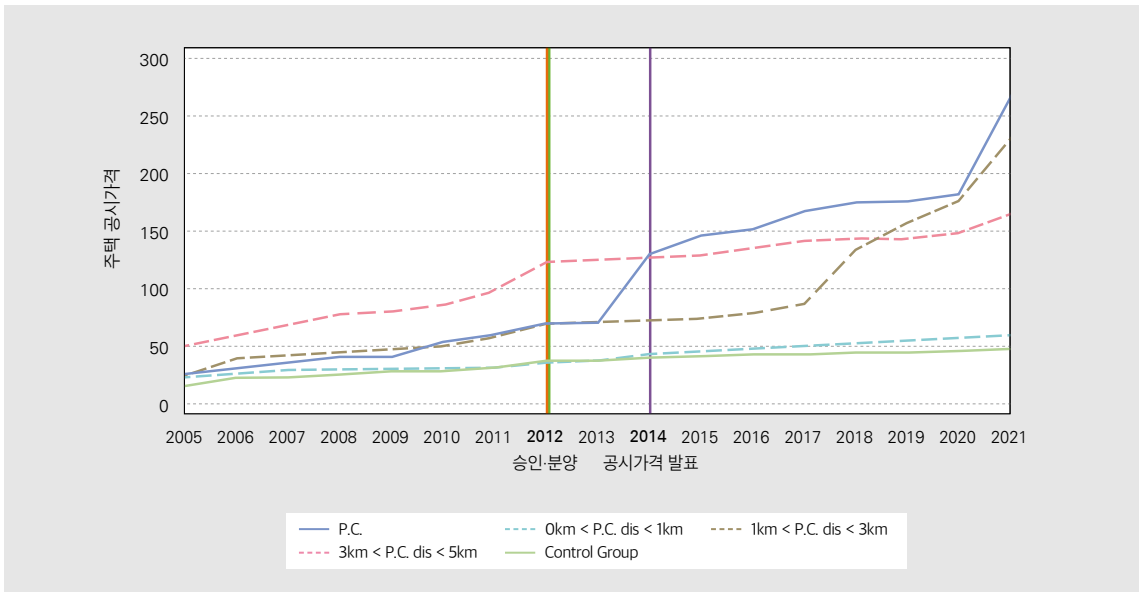
본 이벤트 스터디 모형은 읍면동별 혁신도시 개발 여부의 차이와 혁신도시 개발 전후 시점의 차이를 이용한 이중차분법에 기반하며, 혁신도시 개발 전후 주택가격의 변화를 시점별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모형

본 이벤트 스터디 모형은
혁신도시 개발 전후
주택가격의 변화를
시점별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6) 표준오차는 읍면동이나 시도 단위에서 균집하는 경우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함

[그림 8] 전라북도 혁신도시 소재지 및 주변 읍면동 주택 공시가격 추이

(단위: 백만원)



주: 주황색 세로선은 승인연도, 녹색 세로선은 분양연도, 보라색 세로선은 공시가격 최초 발표연도를 각각 의미하며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승인연도와 분양연도가 2012년으로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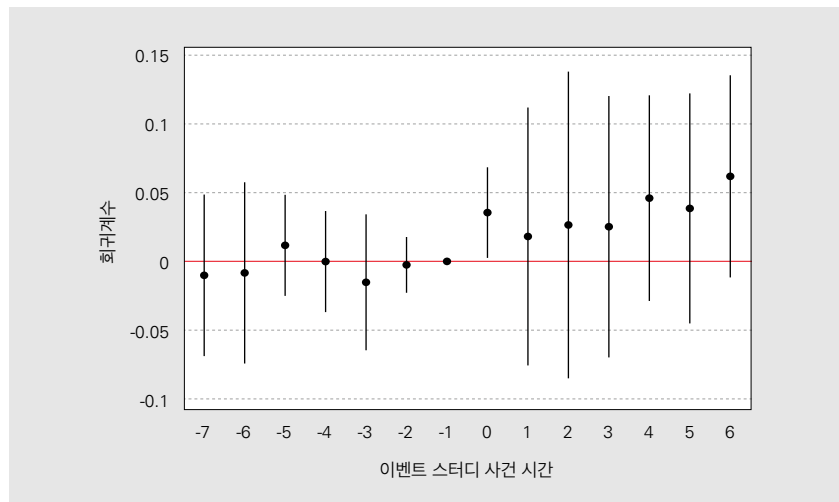
출처: 국가공간정보포털, 「공동주택가격」, <http://data.nsd.gov.kr/dataset/12645>, 검색일자: 2022. 4. 28.; ____, 「개별주택가격정보」, <http://data.nsd.gov.kr/dataset/20200305ds00001>, 검색일자: 2022. 4. 2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혁신도시 주택의
공시가격이 발표된 해에
혁신도시 소재 읍면동의
주택가격은 직전 연도에 비하여
약 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에서 혁신도시 개발 시점을 혁신도시 내 주택 공시가격 최초 발표연도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미 개발 관련 정보가 퍼져 개발 시점 이전에도 주택가격 상승 추세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 측정하는 개발의 효과는 실제 혁신도시 조성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정보로부터 발생하는 효과이며 사건 이전 추세에 유의하여 해석해야 한다. 물론 도시 개발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주택 개발이 완료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정보 역시 주변에 파급효과를 미치기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그림 8] 및 [부도 1]에서 공시가격 발표 전후로 혁신도시 소재지의 주택가격이 눈에 띄게 상승한다는 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는 식 (4)의 이벤트 스터디 모형으로 혁신도시 소재 읍면동의 주택가격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우려했던 사전 추세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혁신도시 주택의 공시가격이 발표된 해에 혁신도시 소재 읍면동의 주택가격은 직전 연도에 비하여 약 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격 상승은 점 추정치로 볼 때 그 후에도 평균적으로 유지되지만, 공시가격 발표 2년 차부터는 추정치의 표준오차가 매우 높아 혁신도시 간 주택가격 변화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혁신도시 소재 읍면동의 혁신도시 개발 전후 주택가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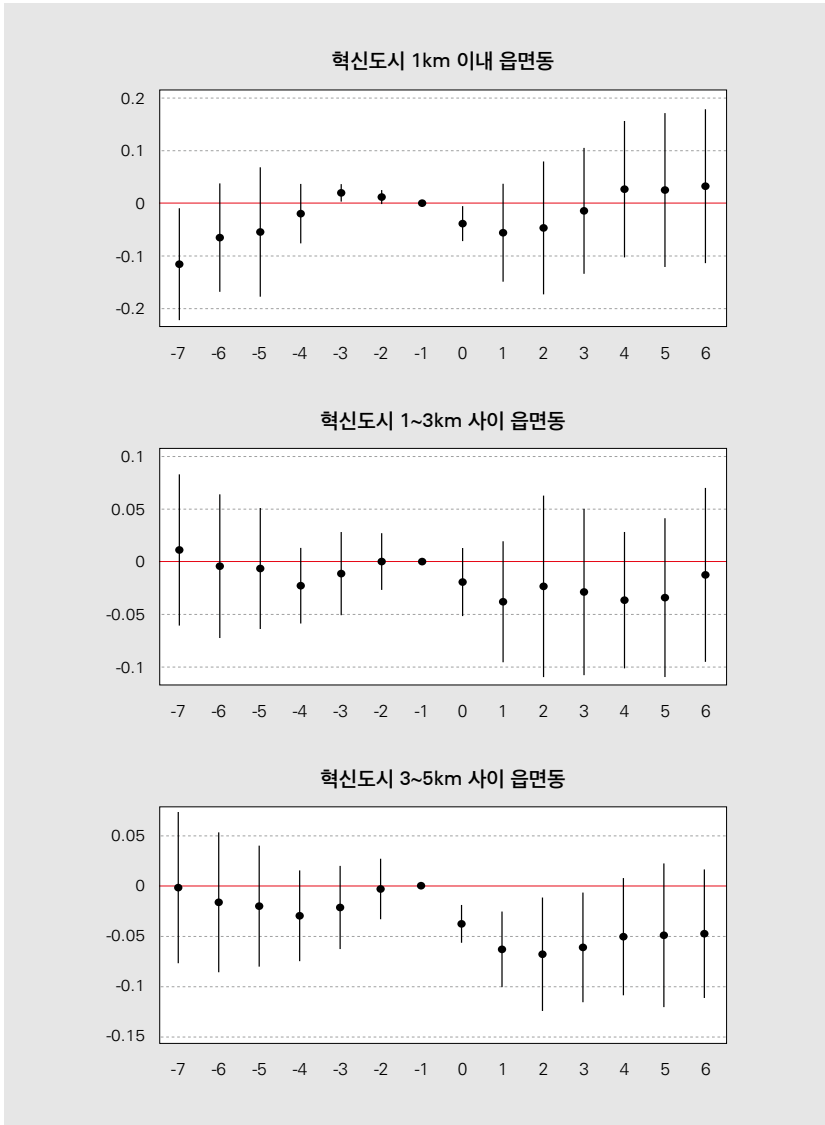


주: 그래프의 점은 이벤트 스터디 회귀모형의 점 추정치를, 선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하며 이벤트 스터디 사건 시간은 지역별 혁신도시 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 해를 0으로 함
출처: 국가공간정보포털, 「공동주택가격」, <http://data.nsd.go.kr/dataset/12645>, 검색일자: 2022. 4. 28.; __, 「개발주택가격정보」, <http://data.nsd.go.kr/dataset/20200305ds00001>, 검색일자: 2022. 4. 2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10]은 혁신도시 개발의 주변지역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벤트 스터디 모형으로 혁신도시에서 각각 1km 이내, 1~3km, 3~5km 사이에 위치하는 읍면동의 주택가격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주택가격이 상승한 혁신도시 소재지와 달리 주변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정 기간 하락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주택가격이 상승한
혁신도시 소재지와 달리
주변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정 기간
하락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그림 10] 혁신도시 주변 읍면동의 혁신도시 개발 전후 주택가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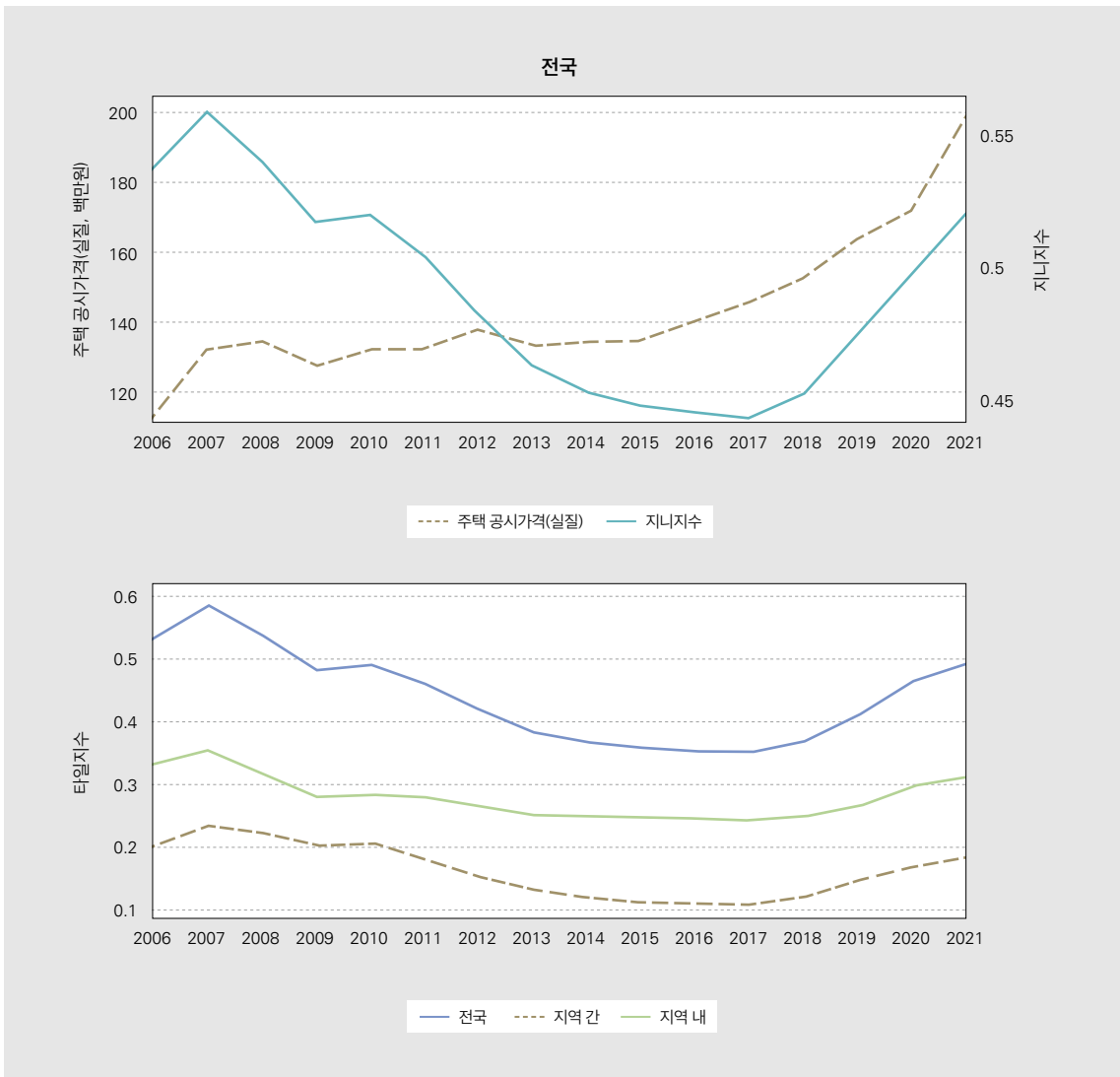


주: 그래프의 점은 이벤트 스터디 회귀모형의 점 추정치를, 선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출처: 국가공간정보포털, 「공동주택가격」, <http://data.nsd.go.kr/dataset/12645>, 검색일자: 2022. 4. 28.; ____, 「개발주택가격정보」, <http://data.nsd.go.kr/dataset/20200305ds00001>, 검색일자: 2022. 4. 2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이벤트 스터디 모형을 통해
 혁신도시 개발로 인한
 소재지의 주택가격 상승이
 5km 이내 주변지역으로
 전파되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 하락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혁신도시 개발로부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높아진 주변지역의 주택가격이 실제 개발 결과 긍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자 떨어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주택가격 하락이 나타나게 된 요인은 후속 연구에서 다룰 주제이지만, 적어도 혁신도시 개발로 인한 소재지 주택가격 상승이 5km 이내 주변지역으로 전파되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1] 2006~2021년 전국 주택 공시가격과 지니지수 및 타일 분해(혁신도시 소재 읍면동 제외)



출처: 국가공간정보포털, 「공통주택가격」, <http://data.nsd.go.kr/dataset/12645>, 검색일자: 2022. 4. 28.; ____, 「개별주택가격정보」, <http://data.nsd.go.kr/dataset/20200305ds00001>, 검색일자: 2022. 4. 2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이상의 분석에서 혁신도시 개발이 혁신도시 소재 읍면동의 주택가격을 상승시켰지만, 그 증장기 효과는 지역별 편차가 컸다는 점과 혁신도시 개발이 주변 지역의 주택가격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앞서 혁신도시 개발이 전국 주택가격 격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경로를 논의하였는데, 분석 결과 그중 두 번째 경로인 주변지역 파급효과를 통한 격차 해소 경로가 작동하였다는 증거는 찾지 못하였다. 다만 혁신도시 소재지의 주택가격 상승은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통한 전국 주택가격 격차 변동의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1]은 앞서 [그림 2]에서 살펴본 전국 주택 공시가격 및 지니지수 추이를 혁신도시 소재지를 제외한 후 계산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혁신도시 소재지의 주택가격 상승분을 제외하였을 때도 앞서 살펴본 전국 주택가격 격차의 U자 모양 변동이 나타나는지 확인하여 혁신도시 소재지 주택가격 변화가 그 추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살펴본다. 분석 결과, 앞서 예상한 바와 같이 혁신도시 소재지의 주택이 전국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작아 전국 주택가격 격차 추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혁신도시 개발이 비록 5km 이내 주변부에는 파급효과를 미치지 못하였지만 같은 시도 내의 더 넓은 지역에서 그 영향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군구 단위에서 혁신도시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개발 효과의 이질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시군구별 혁신도시 소재지와와의 거리는 앞선 읍면동 분석에서와 같이 시군구의 중심지와 중심지에서 가장 가까운 혁신도시 소재 신규 공급

[그림 11]을 보면
혁신도시 소재지의
주택이 전국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작아
전국 주택가격 격차
추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표 4> 혁신도시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시군구 현황

| 구분 | 부산 | 대구 | 울산 | 강원 | 충북 | 전북 | 광주·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총계 |
|-----------------|----|----|----|----|----|----|-------|----|----|----|-----|
| 혁신도시 소재 | 1 | 1 | 1 | 1 | 2 | 2 | 1 | 1 | 1 | 1 | 12 |
| 혁신도시 5km 이내 | 2 | 0 | 2 | 0 | 0 | 0 | 0 | 0 | 0 | 0 | 4 |
| 혁신도시로부터 5~10km | 7 | 1 | 1 | 0 | 0 | 1 | 0 | 0 | 0 | 0 | 10 |
| 혁신도시로부터 10~50km | 6 | 6 | 1 | 3 | 8 | 9 | 12 | 7 | 14 | 1 | 67 |
| 그 외 | 0 | 0 | 0 | 14 | 4 | 3 | 9 | 16 | 7 | 0 | 53 |
| 총계 | 16 | 8 | 5 | 18 | 14 | 15 | 22 | 24 | 22 | 2 | 146 |

출처: 국가공간정보포털, 「공동주택가격」, <http://data.nsd.go.kr/dataset/12645>, 검색일자: 2022. 4. 28.; ____, 「개발주택가격정보」, <http://data.nsd.go.kr/dataset/20200305ds00001>, 검색일자: 2022. 4. 2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식 (5) 회귀분석 결과, 혁신도시 개발이 혁신도시 소재 시군구의 주택가격을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변지역으로의 파급효과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주택 간의 거리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혁신도시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시군구 현황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모형은 읍면동 분석에 사용한 이벤트 스터디 모형과 유사한 이원고정효과 모형의 패널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회귀식은 식 (5)와 같다.

$$\log P_{it} = \sum_{d=0}^4 \beta^d Post_{it} \times Treat_i^d + \lambda_i + \mu_t + \epsilon_{it} \quad \text{식 (5)}$$

이때 $Post_{it}$ 는 시군구 i 가 속한 시도의 혁신도시 주택 공시가격이 최초로 발표된 이후에는 1, 이전에는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이며 강건성 분석을 위하여 $Post_{it}$ 가 발표 직후 3년에는 1, 4년 전부터 2년 전까지는 0의 값을 가지는 경우도 고려하였다. $Treat_i^0, Treat_i^1, Treat_i^2, Treat_i^3, Treat_i^4$ 는 각각 시군구 i 가 혁신도시에 속해있는지, 혁신도시에서 5km 이내인지, 5~10km 사이인지, 10~50km 사이인지, 그보다 멀리 떨어져있는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표준 오차는 시도 단위에서 군집하였다. 따라서 본 패널회귀분석은 각 시군구의 주택가격이 혁신도시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 이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한다.

<표 5> 혁신도시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이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

| 구분 | (1) | (2) |
|----------------------|---------------------|-----------------------|
| 개발 이후 × 혁신도시 소재 시군구 | 0.159** (0.0618) | 0.0835* (0.0407) |
| 개발 이후 × 혁신도시 5km 이내 | -0.0191 (0.0532) | -0.0948** (0.0415) |
| 개발 이후 × 혁신도시 5~10km | 0.0261 (0.0529) | -0.0180 (0.0404) |
| 개발 이후 × 혁신도시 10~50km | 0.0763* (0.0425) | 0.0257 (0.0446) |
| 개발 이후 × 그 외 시군구 | -0.0313 (0.0220) | -0.0656* (0.0329) |
| 표본 크기 | 3,495 | 1,746 |
| R ² | 0.980 | 0.985 |


주: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내며 () 안은 표준오차
출처: 국가공간정보포털, 「공동주택가격」, <http://data.nsd.go.kr/dataset/12645>, 검색일자: 2022. 4. 28.; 「개발주택가격정보」, <http://data.nsd.go.kr/dataset/20200305ds00001>, 검색일자: 2022. 4. 2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5>는 앞선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1)열은 혁신도시 개발 전후 모든 시기를 포함한 분석 결과이고, (2)열은 강건성을 위해 공시가격 발표 1년 전을 제외하고 발표 4년 전부터 3년 후까지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 기간에 상관없이 혁신도시 소재 시군구의 주택가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변지역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에 차이는 있지만, 혁신도시의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읍면동 단위에서 좁은 범위를 분석했을 때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다만 첫 번째 모형의 경우 혁신도시로부터 10~50km 사이에 있는 시군구의 주택가격이 10% 유의수준에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의성이 낮고 결과가 강건하지 않아 혁신도시가 주변지역의 주택가격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쳤다고 볼 근거는 찾지 못하였다.

본고는 2006~2021년 전국 주택 전수를 분석하여 주택가격 격차가 U자 모양으로 변화하였음을 발견하였으나, 혁신도시 개발이 주택가격 격차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찾지 못하였다.

IV. 결론

본고는 지역별 주택가격 격차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역 불균형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부 인식과 달리 2000년대 중반부터 10여 년간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추세가 반전되어 지역 간 주택가격 격차와 지역 내 주택가격 격차 모두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택가격 격차 추세의 변화 요인을 이해하고자 대표적인 국토균형발전 정책인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혁신도시 개발은 소재지의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왔지만 이러한 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파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앞서 살펴본 10여 년간의 지역 격차 감소가 혁신도시 개발의 영향이라고 볼 근거는 찾지 못하였다.

본고의 의의는 2006~2021년 전국 주택 전수를 분석하여 주택가격 격차가 U자 모양으로 변화하였음을 발견한 데 있다. 더불어 혁신도시 개발의 영향을 분석하여 그 변동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뚜렷한 효과를 찾지 못하여, 아쉽게도 주택가격 격차 변동요인 규명은 후속 연구로 남겨두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혁신도시 개발이 전국 주택가격 격차 변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을 뿐 혁신도시 개발정책의 종합적 평가를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며 글을 마친다. 

참고문헌

- 강호제·전명진, 「대규모 개발사업에서의 기대가치와 토지가격변화 - 참여정부의 행정중심 복합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2권 제1호, 2010, pp. 53~66.
- 고창수·이환웅,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 확대가 지역 민간고용에 미치는 영향: 공공기관 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 김명연·김은정, 「혁신도시 개발이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21권 제3호, 2018, pp. 93~107.
- 김정환, 「불평등지수 활용 시 유의점 및 개선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제도의 재분배 효과 추정 예시」, 『재정포럼』, 2022년 11월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민혜숙·신승우, 「혁신도시 개발정책 평가 - 지역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 『주거환경』, 제19권 제3호, 2021, pp. 165~183.
- 서재원·진장익, 「주거소비 불평등도 측정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4권 제1호, 2016, pp. 103~123.
- 송경호,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보유세, 매매가격 및 임대가격, 주택 보유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이번승·김용현, 「도시의 인적자본, R&D, 및 기타 특성이 도시의 임금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분석 - 도시 삶의 질 측정을 중심으로 -」, 『경제학연구』, 제52권 제2호, 2004, pp. 115~150.
- 이수욱,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국토정책 브리프, 국토연구원, 2018.
- 이여정·정철모, 「주택가격의 불평등은 계층이동 가능성의 기대감을 낮추는가?」, 『국토계획』, 제56권 제7호, 2021, pp. 141~156.
- 이유철·김찬호, 「혁신도시 개발성과의 평가와 검증에 관한 연구: 인구 분산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32권 제1호, 2020, pp. 47~68.
- 이지연, 「혁신도시 부동산 시장 10년」, 『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 분석보고서』, 통권 1호, 한국감정원, 2015, pp. 69~83.
- 이호준·김형태·정동호, 「공공수용 적정보상지가에 관한 분석」, 『한국개발연구』, 제34권 제3호, 2012, pp. 1~29.
- 장영봉, 「혁신도시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2019.

조윤지,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본 최근 10년(2008~2018)간 주거양극화 추이」, 워킹페이퍼 19-24, 국토연구원, 2020. 4.

조희평, 「공간균형 모형을 통해 추정된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 『재정포럼』, 2021년 4월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pp. 8~25.

Braid, Ralph M., “Spatial Growth and Redevelopment with Perfect Foresight and Durable Housing,” *Journal of Urban Economics*, 49(3), 2001, pp. 425~452.

Brueckner, Jan K., “A Vintage Model of Urban Growth,” *Journal of Urban Economics*, 8(3), 1980, pp. 389~402.

Capozza, Dennis R. and Robert W. Helsely, “The Fundamentals of Land Prices and Urban Growth,” *Journal of Urban Economics*, 26(3), 1989, pp. 295~306.

국가공간정보포털, 「개별주택가격정보」, <http://data.nsd.gov.kr/dataset/20200305ds00001>, 검색일자: 2022. 4.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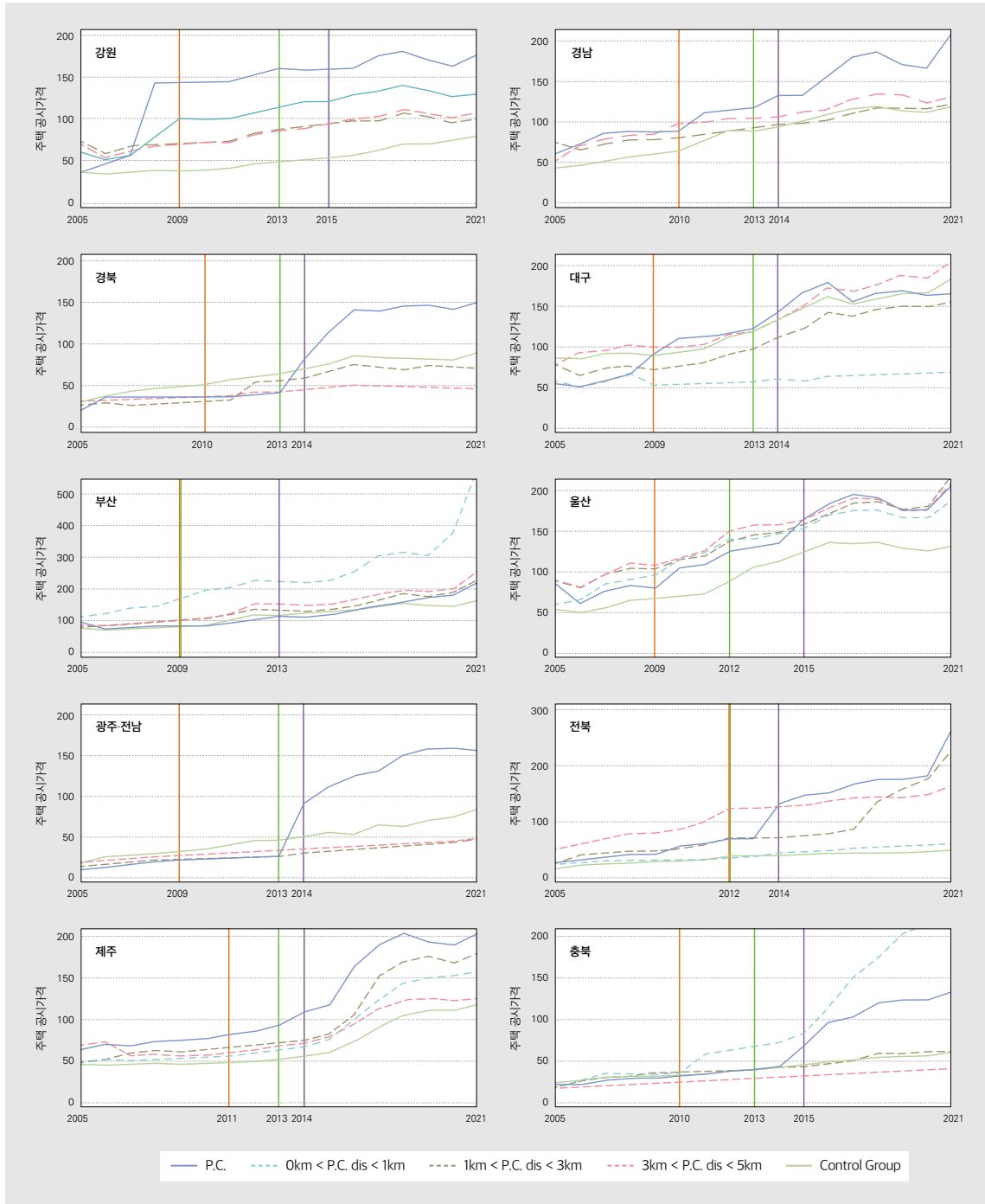
국가공간정보포털, 「공동주택가격」, <http://data.nsd.gov.kr/dataset/12645>, 검색일자: 2022. 4. 28.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혁신도시 주요 총괄 현황」, <https://innocity.molit.go.kr/content.do?key=2208172095042>, 검색일자: 2022. 12. 20.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작성방법 및 의의 > 지니계수」, <https://kostat.go.kr/menu.es?mid=b80304010100>, 검색일자: 2023. 3. 5.

[부도 1]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주택 공시가격 추이

(단위: 백만원)



주: 주황색 세로선은 승인연도, 녹색 세로선은 분양연도, 보라색 세로선은 공시가격 최초 발표연도를 각각 의미함

출처: 국가공간정보포털, 「공공주택가격」, <http://data.nsd.go.kr/dataset/12645>, 검색일자: 2022. 4. 28.; ____, 「개별주택가격정보」, <http://data.nsd.go.kr/dataset/20200305ds00001>, 검색일자: 2022. 4. 2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정책연구

- + 근로자 소득지원정책의 발전방향: 근로장려세제의 확장
전병목·전영준
- + 탄소가격 체계 개편의 수용성 제고방안
배진수·고지현·정재현
- +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 변화 추이 연구
정재호·정다운
- +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정다운·정재호
- +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이 근로빈곤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 연구
김빛마로·김문정

01 근로자 소득지원정책의 발전방향 : 근로장려세제의 확장

+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전영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대표적 근로연계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제도는 2018년 대폭적인 제도 확대 이후 연간 총지출 규모가 약 5조원에 이르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근로장려와 소득지원 목적으로 도입된 동 제도들의 효과성 분석은 주로 근로장려, 즉 노동시장 측면에 중점을 두어 왔다. 단순한 복지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근로장려를 위한 제도로 설계·도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연계소득지원제도의 확대는 최근 높아진 보편적 지원제도 도입 요구에 따라 그 역할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소득지원 대상의 보편성과 지원 수준의 충분성은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 막대한 재정소요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면 절충적 접근이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사회보장 재정 투입이 상대적으로 적어 아직 필요계층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또한 보편적이고 충분한 소득지원을 감당할 정도의 혁신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되지도 않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도 요원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복지지

출제도에 비해 효율적인 근로장려세제의 역할 확대는 복지지출의 보편성을 높이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의 포괄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일반적인 복지정책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근로유인 확대라는 제도 본연의 경제적 유인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근로자 소득지원정책으로 효과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근로장려금제도(자녀장려금 포함)를 다양한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확대 시나리오를 분석한다. 근로연계지원제도의 확대는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면서 노동시장 참여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활동참가율이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소득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에서 근로연계지원제도의 확대는 근로참여 이외 소득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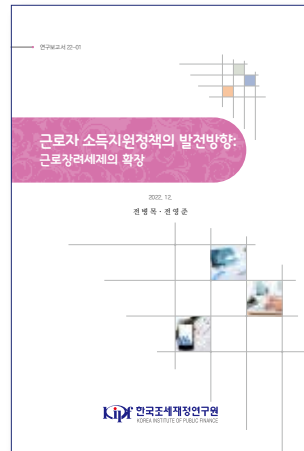
먼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제도의 형평성 관점 평가와 빈곤지원 효과를 분석한다. 기존의 노동공급 효과 중심의 연구와 달리 다양한 사회적 기준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전통적 소득계

층별 효과와 함께 가구유형, 연령, 자녀 유무, 빈곤 계층 등으로 관점을 확장하였다. 소득지원제도로써 보편성에 대한 기여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전통적인 소득계층 간 재분배 관점에서 근로장려금은 소득 1, 2분위에 집중된 효과를 보이며, 이를 통해 소득 5분위 배율을 4.8% 개선시킨다. 반면 자녀장려금은 자녀 있는 가구에 중점을 두어 지원하므로 저소득가구를 중심으로 설계하였지만, 소득 2분위의 수급률이 가장 높은 것이 특징이다. 유자녀가구의 소득 수준이 조금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득 5분위 배율은 0.7% 개선에 그친다. 가구유형별로는 단독가구와 맞벌이가구의 대상 선정 기준에서 혼인 패널티가 존재한다. 즉 단독가구 2인이 동일 소득에서 혼인하여 맞벌이가구가 되면 장려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혼인이 출산의 전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제도 확대 시 혼인 패널티 규모에 대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가구유형에 따른 제도적 격차이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의 맞벌이가구 수급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기준으로 인하여 홀벌이가구의 6.5%에 비해 크게 낮은 2.6%에 그치고 있다. 자녀양육비 부담을 고려한 설계이지만 자녀양육의 요건 중 하나인 시간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가정양육 여건이 되지 않는 맞벌이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통해 상승한 양육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구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상한을 적용하는 것은 맞벌이가구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가구주 연령별 수급률을 살펴보면



B5변형 / 130면
2022. 12.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수급률이 21.9%로 가장 높고, 근로가능 연령 가구주 가구의 수급률은 각각 14.7%(20~40세), 13.9%(40~60세)에 머무르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소득가구인 고령가구 중심의 수급구조를 보인다. 근로장려금 지급이 고령가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목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와의 연계성이 낮은 고령가구의 높은 수급률은 개선 필요성이 높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양육 부담 시기 가구의 자녀장려금 수급률이 낮은 것은 자녀장려금이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중복성도 매우 높다. 자녀장려금의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지나치게 한정함으로써 제도의 분리 운영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세액공제, 아동수당 등 재정제도와 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분리운영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근로장려금제도가 빈곤계층 지원제도로써 갖는 한계는 비교적 뚜렷하다.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에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의 경우 소득지원 효과와

근로유인을 자극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함께 나타난다. 하나의 제도로 모든 계층에 효과적인 소득지원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장려금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조합이 중요하다. 근로능력자에게는 근로참여를 유도하는 근로장려금제도가, 근로무능력자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차별화된 소득지원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제약적으로 적용되는 재산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빈곤계층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한 소득지원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자산 형성은 보다 높은 소득계층으로의 이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의 구성요소별 효과성 분석은 전통적인 빈곤율, 지니계수 관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액을 높이는 지원금액 인상 시나리오의 효과성이 지원 대상 확대 시나리오에 비해 우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원금액 인상 시나리오는 현 제도보다 지니계수 개선 효율성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점증률 인상은 가장 높은 효과를 보이는 방안이다. 점증구간이 긍정적인 근로유인 효과를 유인한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점증률 인상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시나리오라 할 수 있다.

지원 대상 확대 시나리오는 빈곤율 개선에의 효과는 거의 없으며 지니계수 개선에는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 확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자에게까지 대상을 넓히는 것이므로, 새로운 정책 목적 설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고소득층과의 소득격차가 확대된다면 중요한 제도 확대의 유인이 될 수 있다. 빈곤 대응 이후 사회 연대성을 확

보하는 방안은 소득격차를 일정 수준 이내로 유지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은 인센티브 구조 변화에 따른 납세자들의 행태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반균형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제도 요소 일부의 변화는 그 변화 폭이 상당히 크다고 하더라도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제도의 주요 수혜대상이 되는 최저소득계층의 행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소득계층 내에서도 연령군에 따라 상이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나 변화의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는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근로 장려를 제공하는 정책조합을 찾기 어려운데, 이전보다 근로소득이 높은 근로자로의 제도 확대는 근로에 대한 의사결정 왜곡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장려세제 개편 시 확대 적용이 필요한 집단을 선별하여 제도를 디자인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제도 조정 대안 중 비교적 큰 폭의 변화를 유발한 것은 가구 단위 제도에서 개인 단위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 대안하에서는 가구 단위 제도의 경우에 비해 보조 소득자(여성)의 제도 참여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액에 따른 것이다. 보조 소득자의 노동에 대한 비효율의 정도와 노동참여를 제약하는 각종 요소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근로장려세제를 비롯한 현행의 복지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소득제로 전환하는 것은 거시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제로의 전환은 최저소득계층의 근로저해요인이 크지 않고

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여타 소득계층의 근로와 저축에 대한 의사결정을 대폭 왜곡함으로써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왜곡을 줄이고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재원을 누진적인 근로소득세 대신 소비세로 조달하는 대안은 거시경제 지표를 호전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분배를 대폭적으로 악화시키는 문제도 있다. 누진적 근로소득세제하에서 세 부담이 낮은 저소득층은 비례소비세하에서는 세 부담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세제 개편 시 효율성과 소득분배 측면의 고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한 세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 소득분포 변화 양상을 감안할 때 지원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분포 악화가 중위계층 이하의 격차 확대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보편적 지원제도인 기본소득제도보다는 중위소득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정도의 근로장려세제 확대가 바람직하다. 중하위소득자에 대한 지원금액 인상은 여전히 빈곤율, 지니계수 개선 등의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다. 빈곤계층에 대한 적절한 소득지원은 높은 우선순위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도 확대 시 재원조달 방안도 기존의 소득세뿐만 아니라 소비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누진적 소득세제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다.

셋째, 근로장려세제 내 혼인가구와 단독가구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재산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이 상

대적으로 낮으므로 형평성 관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맞벌이가구의 소득 기준을 단독가구의 2배 수준에 근접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계층 상향 이동에 재산 수준 역시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므로 재산요건을 지나치게 제약할 필요는 없다. 이미 중하위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요건은 이상 상황에 대한 대응수단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자녀장려금도 맞벌이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 홀벌이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부담하는 추가적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22-01 『근로자 소득지원정책의 발전방향: 근로장려세제의 확장』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02 탄소가격 체계 개편의 수용성 제고방안

- + 배진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 고지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 정재현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조교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 중에서 탄소가격 체계는 경제 주체들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배출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탄소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와 같은 탄소가격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EU에서 탄소국경 조정제도의 도입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탄소가격을 매기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G7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제 단일 탄소가격을 적용하는 기후클럽 창설을 논의하는 등 탄소가격을 국제적으로 규범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하지만 탄소가격의 부과는 가격부담을 지는 경제 주체들의 반발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정치적인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최근 유럽국가에서는 탄소가격에 대한 납세자의 반발을 관찰할 수 있다. 스위스의 경우 자동차 연료, 항공권에 추가적인 탄소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2021년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바가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 사용 차원에서 유류사용에 대한 탄소세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세금 인상에 반발

한 시민의 노란조끼 운동이 일어나게 됨에 따라 기존의 탄소세 인상 계획이 철회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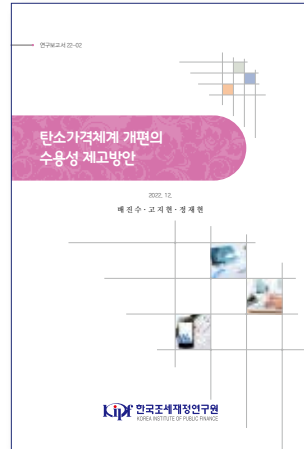
본고는 탄소가격 체계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재정패널」 자료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탄소가격의 부과가 납세자의 구매력, 분배적 형평성, 환경개선에 미치는 실제 영향과 납세자가 인식하는 영향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이는 탄소가격의 부과가 환경개선 등의 실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경제적 부담을 과대평가하거나 환경개선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경우 정책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재정패널」 자료를 통해 6만원/톤의 탄소가격이 가구에 부과되었을 때 실제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 분배적 효과, 탄소 감축효과를 (s1)탄소세 부과, (s2)탄소세 부과 및 탄소 배당, (s3)탄소세 부과 및 소득세 감면 시나리오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s1)탄소세 부과의 경우 모든 가구의 구매력은 감소하고 10분위 배울 또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탄소가격의 부과가 역진적인 성격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탄소가격 부과로 인한 가

구의 탄소배출은 3.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s2)탄소세 부과에 추가하여 탄소배당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가치분소득이 증가하는 가구가 55%에 해당하였으며 10분위 배율은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3)탄소세 부과에 추가하여 소득세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근로유인의 증가로 인해 근로소득이 증가하나 10분위 배율은 모든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악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정패널」 자료 분석에 덧붙여 (s2)탄소배당정책이 시행되었을 경우 납세자의 구매력, 분배적 형평성, 환경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납세자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Douenne and Fabre(2022)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6만원/톤 탄소가격을 부과하고 1인당 연 11만원을 배당하는 탄소배당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77.6%의 가구가 구매력의 관점에서 이득¹⁾을 보고, 분배적 형평성은 개선되며, 탄소배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22.8%만이 구매력 관점에서 이득을 볼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50.6%는 분배적 형평성의 개선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29.9%는 환경개선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처럼 탄소가격 부과의 실제 영향과 인식되는 영향이 차이가 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 정책의 주관적 순편익과 객관적 순편익의 차이가 과도한 응답자의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우선 응답자의 특성 중에서 실제와 인식의 괴리가 큰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



B5변형/ 196면
2022. 12.

나, 이러한 괴리의 원인은 연구자들에게 관찰되지 않는 개인의 고유한 신념에 의한 것으로 추론되었다. 다만 본인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응답한 경우 이러한 괴리가 적어 정치적인 견해가 강할수록 괴리가 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실제 정책의 효과를 설명하는 것은 응답자의 인식을 크게 바꾸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입안자는 납세자가 느끼는 탄소가격의 실제 영향과 인식되는 영향의 괴리를 보고 면밀히 고려하여 탄소가격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을 시사하였다.

다음으로 선택실험 설문을 통해 응답자가 선호하는 탄소가격 체계의 형태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항목은 탄소가격의 크기, 면제조항의 유무, 국제적 동향을 고려한 도입시기, 탄소가격 부과를 통한 정부 수입의 활용방안이었으며, 이를 통해 응답자가 가장 선호하는 탄소가격 체계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1,015명의 응답자에게 각각 9개의 선택상황을 제

1) 가치분소득 증가와 유류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구매 감소로 인한 절약금액이 포함된다.

시하고 가장 선호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선택실험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탄소가격 크기에 대한 계수는 -0.217로 추정되어 응답자는 낮은 크기의 탄소가격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면제조항에 대한 선호의 경우, 중소기업 및 영세업자 면제에 대한 더미변수의 계수는 유의하지 않게 추정되어 응답자는 중소기업 및 영세업자에게 탄소가격을 면제해주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선호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고용이 많은 기업에 대한 면제에 대해서는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181로 추정되어 응답자는 고용이 많은 기업에 대한 탄소가격 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선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탄소가격으로 환산하는 경우 0.834만원/톤을 덜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가 탄소가격 부과가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기보다는 고용이 많은 기업은 대체로 대기업이거나 재무상태가 양호할 수 있으므로 면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해외 국가 유사정책 도입 동향을 고려한 탄소가격에 대한 선호의 경우 미국, EU와 같은 선진국이나 중국, 인도와 같은 다배출 국가의 탄소가격 도입 여부가 국내의 탄소가격 도입에 대한 선호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해보자면 응답자는 다른 국가가 탄소가격을 도입하면 우리도 도입하겠다는 관망 전략을 택하고 있기 보다는 탄소감축 노력이 국제적 규범화가 되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탄소배출 비용 수입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특정 목표 없이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것보다 전 국민 균등 배분, 탄소감축기술 투자, 소득세 및 소비세 감면,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 지원의 특정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 추정된 계수는 0.427~0.575에 해당하며 탄소가격으로 환산하면 1.820~2.650만원/톤이 추가적인 지불의사이다. 반면 법인세 감면은 계수가 -0.0630(-0.290만원/톤)으로 추정되어 긍정적인 선호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응답자들이 탄소가격 부과로 인한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보다는 본인들이 부담하게 될 직접적인 경제적 유인이나, 경제 전체의 형평성, 혹은 탄소감축을 통한 환경개선에 더 큰 선호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

추정된 계수를 바탕으로 탄소가격 체계 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비교의 기준이 되는 단순 탄소가격 부과의 경우 과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탄소가격의 수준은 5만원/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탄소가격 부과 정책의 세부 사항을 바꾸었을 때 과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탄소가격 수준은 최소 4만원/톤 수준에서 최대 9만원/톤 수준으로 차이를 보여 탄소가격 부과 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세부사항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높은 수용성을 가져다주는 탄소가격은 면제조항 없음, 해외 국가 도입 여부 관계없이 도입, 정부 수입은 전 국민 균등 배분에 사용하는 방안이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응답자들의 견해는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에 대해서는 큰 우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탄소감축 노력의 국제적 규범화에 대해서 관망하기보다는 주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탄소배출권 판매 수입

(혹은 탄소세 수입)의 경우에는 단순히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일반회계로 편입하기보다는 특정 목적의 용도로 설정할 때 탄소가격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22-02 『탄소가격 체계 개편의 수용성 제고방안』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03 부가가치세 유효세 부담 변화 추이 연구

+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고는 부가가치세 명목세율이 아닌 유효세율을 추정해서 소비자의 실질적인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 방법론은 물론이고 새롭게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하여 상호 비교함으로써 좀 더 정확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도가 높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명목세율은 1977년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당시부터 현재까지 45여 년 동안 10%로 동일하다. 하지만 사회적 배려, 세 부담의 역진성 완화, 국민 후생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국가에서도 국가별로 추구하는 정책 목적, 사회·경제적 환경, 국민들의 인식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로 인해 명목세율과 유효세율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산업별·업종별로 차이가 크게 난다면 경제적 비효율의 왜곡이 산업 전반에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왜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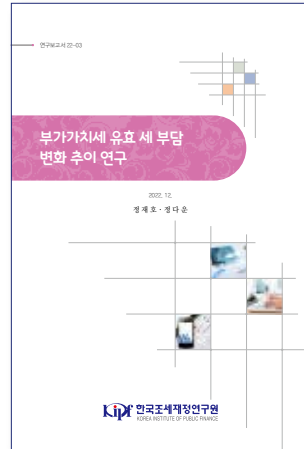
현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추정이 중요하다. 또한 최종 소비자마다 면세 재화 및 서비스 수요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의 유효세율은 다를 수밖에 없다.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인 생필품 등의 소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실제 상대적 부담의 정도는 고소득층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세 부담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의 유효세율을 살펴보는 것은 면세 범위의 조정을 통한 부가가치세 역진성 완화라는 정책 효과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본고는 고정된 부가가치세의 명목세율이 아닌 유효세율의 변화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론을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자주 이용한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방법은 산업연관표를 사용해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분석한다. 산업연관표의 중간투입계수를 이용하여 최종 거래 단계까지 포함되는 중간 과세 거래 및 면세 거래의 비중을 고려해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한다. 이처럼 과세와 면세 거래의 비

울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산업연관표가 유일하다. 하지만 이 방법에도 한계가 있다.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알기 위해서는 「가계동향조사」와 연계가 필요한데, 산업연관표와 「가계동향조사」의 조사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산업연관표에서 가구는 목재 가구, 철제가구 등 가구 산업이 중요하지만,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는 소파, 식탁, 책상, 의자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이 둘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자들이 면세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가 발생하면 모두 전가한다는 가정에 기초해서 분석하는데, 이러한 정보가 산업연관표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가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다. 그리고 각종 공제제도도 포함할 수 없었다.

이런 한계를 염두에 두고 본고에서는 새롭게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활용해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하였다. 그동안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제약으로 인해 기존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을 처음 시도한 것에 학문적 의의가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실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이용해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산업연관표를 이용해서 다른 세목들의 유효세율과는 약간 다른 의미로 추정되었다.

국세청 신고자료에는 면세로 인해 가격 전가는 물론 의제매입세액, 각종 공제제도 등의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앞선 한계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의 업



B5번형/ 160면
2022. 12.

종 구분을 이용해서 「가계동향조사」의 소비항목과 연계시키는 작업도 수행하였다. 다만 국세청 신고 자료에는 거래단계별 면세 업종의 사용 규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신고자료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자료이기에 여기에 고의적 혹은 실수로 신고 누락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신고 오류 혹은 탈세 등으로 인해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다.

기존 방법과 새로운 방법을 사용해서 추정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신고자료를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크기가 기존의 방법론에서 추정한 유효세율의 크기보다 평균적으로 더 크게 추정되었다. 본고에서 제안한 방법은 중간 거래 단계의 세 부담 전가, 가격 전가, 그리고 이를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같은 각종 공제제도의 영향 등을 고려한 방법이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기존 방법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보다 크게 산출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실제로는 세 부담 전가는 본고에서 제시한 부담 정도보다 훨씬 크지만, 의제매입세액공

제 등 정부의 정책 대응으로 일부 세 부담이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정부 정책의 개입이 없었다면, 실제 유효세 부담은 훨씬 더 크게 추정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부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저소득 계층 혹은 경제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계층의 유효세율 추정을 보다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기존 방법과 새로운 방법을 사용해 부가가치세 유효세 부담을 추정한 결과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 소비자의 소득, 소비, 연령, 가구원 수 등의 특징에 따른 이질성 분석 결과 해석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절대적인 수치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신고자료를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크기가 기존의 방법론에서 추정한 유효세율의 크기보다 평균적으로 더 크게 추정되어, 각 방법론 간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분석을 통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소득수준별로 이질적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보기 위해 소득수준별 부가가치세 세 부담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부가가치세 세 부담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현재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령에 따른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크기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가가치세 면세가 생필품 위주로 적용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면세에 따른 혜택은 고령층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70대 이상의 고령층의 부가가치세 세 부담이 낮고, 그 다음으로는 20대의 젊은 연령층의 부가가치세 세 부담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30대에서 부가가치세 세 부담이 높게

나타났다. 30대는 출산과 육아라는 특징이 있지만 의료비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양육 등의 가사 서비스는 이미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 중에 있다. 소비 지출항목을 분석한 결과, 30대는 음식·숙박비, 의류·신발, 오락·문화비의 지출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과세 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자녀 교육 소비 지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30대에 비해 부가가치세 유효세 부담은 작게 나타났다.

20대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다른 연령층과 다르게 2019년에 비해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에 낮게 추정되었다. 2020년에 20대의 소비 구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식료품·비주류 음료의 비중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음식·숙박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 면세품 소비 비중이 증가하면서 유효세율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은 명목 유효세율 추정에서는 관찰하기 어렵다.

가구원 수별로 나누어 유효세율의 크기 변화를 분석하였다.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부가가치세 유효세 부담이 증가하여 가구원 수가 3명인 경우를 최고점으로 부가가치세 유효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연령대 가운데 30대가 가장 높은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부담한 것과 연결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근래 들어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본고에서 사용한 「가계동향조사」 자료에서도 전체 가구 분포 중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은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1인 가구의 부가가치세 유효세 부담은 7% 정도로, 다른 가구원들보다 가장 낮은 수준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었다. 앞선 연령대별 분석에서 살펴본 70대 이상의 고령층 및 2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의 유효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점과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고령화와 함께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에 직면하는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더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이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에 영향을 받는 소비자들이 더 많아지면서 면세제도 조정에 따른 파급효과도 이전에 비해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정책당국의 면세제도 조정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소비지출을 경제적 능력으로 간주하고 소비 지출분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비 분위별 분석에서는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기존 연구방식을 사용했을 때 소비수준과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간에 뚜렷한 양(+)의 상관성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소비수준이 낮은 계층의 유효세율이 뚜렷하게 낮아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로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 항목별로 부가가치세 과·면세를 구분하고 과·면세가 혼재된 소비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과세로 혹은 면세로 가정해서 과세인 경우와 면세인 경우 각각 명목 부가가치세 유효세율도 추정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면세 재화를 과세 재화로 전환하였을 때의 소득별, 연령별, 가구원 수별, 그리고 소비지출별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과·면세 분류가 애매한 경우를 모두 면세로 전환할 경우 부가가치세 명목 유효세율의 감소 폭은 저

소득일수록 단조적으로 커졌는데, 이는 이들 품목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으로써 떠안는 세 부담의 크기가 저소득층일수록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품목에 대한 면세 전환은 부가가치세 면제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단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과·면세 구분이 애매한 경우를 면세로 전환할 경우 고령층으로 갈수록 유효세율의 크기는 감소하였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수요가 높은 의료 서비스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유효 세 부담의 결과 값이 달라졌고,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층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정책 취지를 달성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소비자의 명목 유효세율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연령대가 고령층일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소비수준이 낮을수록 재화 또는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적용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연령대가 고령층일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소비수준이 낮을수록 부가가치세 세 부담의 증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소득층, 고령층, 그리고 1인 가구 등이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세 부담 완화 및 부가가치세 역진성을 완화하는 데 일부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분석 결과는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면세로 혹은 면세 재화를 과세로 전환할 때 거래단계, 재화의 성격, 소득수준, 소비연령 및 가구원 구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

사한다.

기존 방법과 본고의 방법을 통해 추정된 유효세율의 크기를 소분류 품목별로 소비자의 이질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현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애완동물서비스는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상대적 부담은 두 방법 모두 동일하지만, 고소득층의 부가가치세 상대적 부담은 본고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계산할 경우 미미하지만 더 크게 나타난다.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해소 측면에서의 정책 효과를 더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외래의료서비스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에도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 정도가 본고의 방법을 이용하였을 경우 훨씬 더 크게 계산된다. 따라서 의료비의 실질적 부담 정도가 예상된 수준보다 더 크고, 그 부담이 저소득층에 더 가중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육류구입, 곡물구입의 경우도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많이 부담하고 있고, 절대적인 부담의 크기도 기존에 비해 더 크게 추정됨에 따라 판매 과정에서의 발생 가능한 일부 외곡을 정부가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반면 성인학원비, 학원보습교육비 등 면세 대상인 사교육은 고소득 계층에서의 수요가 더 커서 면세 혜택도 고소득층이 더 본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사교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실질적 부담은 고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크게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도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더 뚜렷하게 관찰되었기 때문에 사교육의 면세로 인해 고소득 계층이 더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기존 방법과 새로운 방


법에서 각각 추정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변화 추이를 보면, 방법별 유효세율 변화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명목 유효세율과는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최종 소비금액과 과·면세 지출 구성을 통한 명목 유효세율의 추정은 실제세 부담을 정확히 추정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방법을 이용하여 기존 연구 결과와 결합해서 1990년 이후 최근까지의 산업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를 살펴보았다. 같은 대분류 산업군이라고 해도 30년의 기간 동안 그 구성이 변화하고 규모가 달라져서 정확하게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감안하면서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동안에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명목세율인 10% 내외에 분포해서 산업별 부가가치세 세 부담 차이가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산업들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일반 품목들로 구성된 산업들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도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가 축소(과세 범위 확대)됨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상승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면세 재화보다 과세 재화의 소비 비중이 더 커졌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혹은 해당 산업에서 사용되는 중간 투입물 중에서 면세 재화보다 과세 재화의 비중이 더 커진 것에 기인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인 농림수산물,

광산품, 그리고 음식료품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공공행정 및 국방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감소하고 있다. 공공행정 및 국방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1990년에는 4.62%였는데, 2019년에는 2.40%까지 감소하였다.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 그리고 공공행정 및 국방 산업군의 면세 범위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 산업에서 사용되는 중간 투입물 중에서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의 비중 변화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 여겨진다.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를 추적 조사하는 연구 수행은 필요하다. 이런 연구를 통해 과거의 부가가치세제도 운용의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한편, 향후 부가가치세제도 개선의 방향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중요한 이유는 중간 거래 단계의 가격 전가 및 세 부담 전가, 그리고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같은 각종 공제제도의 영향 등의 행태가 모두 반영된 국세청 신고자료의 활용과 보다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유효세율 추정 가능성을 통해 연구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분석 결과, 중간 거래 단계의 가격 전가 및 세 부담 전가가 예상보다 클 수 있고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의 각종 공제제도로 인해 일부 세 부담이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가격 및 세 부담 전가,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각종 공제제도는 결국 중간 거래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가 사용될 필요가 있다. 앞서 보았듯이 저소득 계층 등 경제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계층의 유효세율을 추정하고 이런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정부 정책을 통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부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22-03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 변화 추이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04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 +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의 면제에 따른 중복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의 도입, 공제율의 변화 등은 정책 목적에 맞 게끔 변화를 거듭해 오고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의 예외적인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부담한 기납부세액이 없는 상황에서 매입세액을 의제하여 공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정책적 정당성 평가는 기존 연구의 주요 검토 대상이었다.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공제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기존 연구의 주요 관심사였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는 그동안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도입 당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 허용했던 여러 예외 조항들 및 면세 범위 등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통해 단일세율의 효율적인 세제 구축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등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외 조항으로 남아 있는 여러 제도들을 검토하여 부가가치세제의 예외를 인정하면 서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정상 과세로의 전환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역시 부가가치세제의 예외적 조항이다. 면세 거래가 중간 거래 단계에 포함됨에 따라 나타나는 부가가치세의 중복과세 등의 문제로 인해 경제적 왜곡이 발생하며, 이를 교정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도입한 것이다. 부가가치세제의 예외 조항을 허용함에 따라 단일세율 세제 운영의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희생하 되, 경제적 왜곡의 시정을 통한 추가적인 편익을 기대한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인 기대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는 실증 검증을 통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제도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사업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 제도 변화에 따른 행태 변화 등에 대한 실증 검토를 통해 정책의 의도된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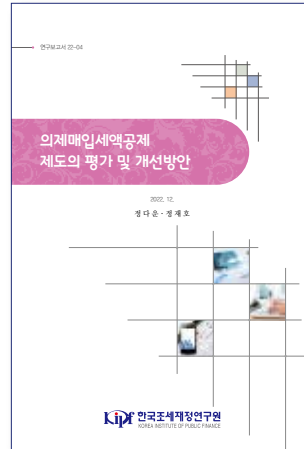
본고는 기존의 수많은 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을 새롭게 살펴보고자 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의 도입, 공제율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자의 행태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담의 정도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신고 미시자료, 『국세통계연보』,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조사」 자료, 통계청의 「음식주점업 조사」 자료, 설문조사 자료, 「가계동향조사」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에 대해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이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점이라 할 수 있다.

2. 연구의 주요 내용

본 연구에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업자의 가격 전가 행태를 검토한다. 가격 전가 행태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율(매출-매입)/매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도 변화에 따라 부가가치율의 변화 정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제도에 대한 반응, 궁극적으로는 가격 전가 등의 경로를 통해 소비자에 전가되는 세 부담의 크기를 살펴본다.

가. 제도가 사업자에게 미치는 효과

부가가치세 실제 신고자료를 패널자료로 구축하여 사업체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제도 적용에 따른 사업자의 가격 전가 행태를 먼저 살펴본다. 분석 결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될 경우, 사업자



B5변형/ 241면
2022. 12.

의 부가가치율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허용은 사업자에게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격 전가의 정도를 낮추게 됨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이 결과는 사업체 고정효과 이외에 업종고정효과 모형 등 다른 모형에서도 동일하게 추정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주로 간이사업자와 일반 개인사업자에게서 나타났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징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에 따른 가격 전가의 정도가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도 도입 이후 공제 한도 도입이 적용된 결과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공제 한도 도입은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사업체에 비용의 증가로 인식될 수 있다.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새롭게 적용된 2014년 이후, 제도의 적용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료품제조업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부가가치가 더 커질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미 의제매입세액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 한도가 도입되어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되는 사업자

들이 다음 단계로 전가하는 행태가 일부 발견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의제매입세액공제 자체가 전가를 줄이지만 이미 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추가적인 비용 발생의 일부 부담을 다음 거래로 전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제율 및 공제 한도율의 조정효과도 검토하였다. 공제율 및 공제 한도율이 상향 조정될 경우, 다음 거래 단계로의 전가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러한 결과의 강건성 검토는 추후 연구에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이용 자체와 한도 도입의 효과가 뚜렷하게 관찰된 것과는 달리, 제도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 공제율의 조정 및 공제 한도율의 조정을 통한 사업체의 행태 변화 효과는 뚜렷하게 관찰하기 어려웠다.

나. 제도가 소비자에 미치는 효과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자체의 도입은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등의 변화로 인해 사업자가 추가로 떠안게 되는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제도 도입 이후의 변화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귀속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에 영향을 주로 받는 외식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공제 한도의 감소로 사업자의 비용이 증가할 경우, 소비자로의 가격 전가는 심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제 한도의 증가로 사업자의 비용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소비자로의 가격 전가 크기는 작더라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소비 항목별 유효세율의 변화를 토

대로 소비자의 세 부담을 살펴보았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변화 및 한도의 도입이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변화 측면에서 특별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변화 및 한도율의 조정이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다.

3. 정책시사점 및 결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 제언 및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소비자에게도 혜택은 돌아간다고 할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없앤다면, 사업자의 가격 전가 정도는 매입세액 불공제 규모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다만 기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의 예외 사항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만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해야 할 것이다. 만약 동 제도를 세액공제가 아닌 면세사업자와 거래하는 과세사업자들에 대한 지원금 형태의 제도 운영을 통해 사업자의 가격 전가 정도를 낮게 조정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의 예외 사항을 두지 않고도 중복과세, 소비자 부담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단순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의제매입을 이용하고 있는 한, 공제율의 조정을 통한 중복과세 현상의 완화 등의 가능성은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업종별로 차등을 두는 것 역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제 한도율도 마찬가지다.

공제 한도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효과가 관찰되지 않는다. 한도가 도입된 시점에는 일부 가격 전가의 완화효과가 관찰되기는 했지만, 공제 한도율이 도입된 이후 한도율 변화를 통한 효과는 관찰되지 않는다. 공제 한도율을 높여서 사업자들의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는 오히려 가격 전가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중요한 관찰 결과 가운데 하나는 사업자의 행태는 공제율 및 한도율 조정에 따른 비용 증감에 대칭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제율 및 한도율이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든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든 소비자는 결과적으로 예전과 같은 가격 혹은 좀 더 높은 가격에 거래하게 된다. 따라서 공제율 및 한도율의 주기적인 변화는 오히려 사회 전체의 후생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운영은 단순한 구조로 운영하는 것이 현재 구조에서는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도를 현재와 같은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면, 제도 대상의 폭을 좁히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에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제도를 통한 소비자의 후생 증대 역시 소규모 사업자에게서 상대적으로 크게 관찰된다는 점을 근거로, 일정 규모의 과표를 기준으로 제도 적용 대상을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자에게 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여러 선진적인 시스템을 잘 흡수하여, 선진적으로 운영되는 세목 중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외적인 조항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탈세, 부가가치

세제로 인한 경제 활동의 왜곡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최종담세자는 소비자이다. 지나친 예외 사항으로 인한 왜곡에 따른 피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지게 된다. 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통한 세원 및 세수의 확충을 위해, 소비자의 납세 순응은 중요하다. 가장 효율적인 세제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면, 대체 가능한 방안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예외 사항을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22-04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05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이 근로빈곤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 연구

+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1.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 개관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수혜를 받으려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2008년 시행되고 20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하였으며 도입 이후 적용대상, 소득요건, 부양자녀요건, 재산요건, 주택요건 등이 계속해서 변경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근로장려세제를 2018 귀속분부터 대폭 확대하였다. 먼저 2013년부터 지속되어 오던 단독가구의 연령요건을 폐지하였다. 또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수급탈락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가구당 1억 4,000만원 미만이었던 재산요건을 중위소득 65% 수준의 평균적인 자산수준인 2억원 미만으로 완화하였다. 단, 재산 규모가 1.4억~2억원 미만 구간에 속하는 경우 지급액이 50% 감액되도록 하였다. 또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

이가구에 적용되는 소득요건을 각각 1,300만원에서 2,000만원, 2,100만원에서 3,000만원,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확대하여 수혜 가능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가구유형별 최대지급액 역시 각각 85만원에서 150만원, 200만원에서 260만원,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득발생시점과 근로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큰 기존의 연간 지급방식이 소득증대 및 근로유인 체감효과가 미미한 점을 고려해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 반기별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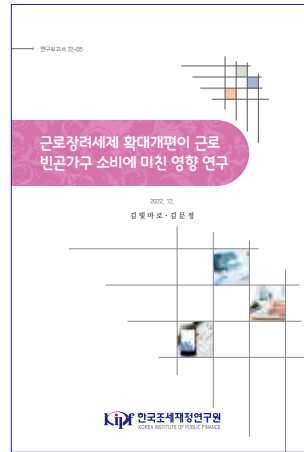
그 결과, 근로장려세제 지급가구 수는 제도 확대 전인 2017 귀속연도까지는 약 170만가구 정도였으나 제도 확대 이후인 2018 귀속연도부터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약 410만 가구, 2019년에는 431만 가구, 2020년에는 420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았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총지급규모도 2017년 1조 3,000억원 수준에서 2018년 4조 5,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가구당 평균 수혜금액도 제도 개편 이전 72만~75만원에서 제도 개편 이후 103만~110만원 수준으로 증

가하였다. 소득유형별로 살펴보면 제도 개편 이후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 지급가구 수 및 지급금액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근로빈곤가구의 소비행태에 대한 기존 논의

가. 근로빈곤가구의 소비 관련 주요 선행연구

근로장려세제는 정부의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 정책 중 하나로서 제도의 노동공급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소비 효과 등에 대해 국내외에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김태우 외(2016)는 근로장려세제가 근로빈곤층인 수혜가구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장려세제 수혜가구는 소비를 늘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저축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rrow and McGranahan(2000)은 미국의 EIC(Earned Income Credit)가 저소득 수혜가구들의 계절적 소비패턴(seasonal expenditure patterns)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EIC 수혜가구가 비수혜가구보다 총지출과 내구재 지출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IC 수혜가구는 비수혜가구보다 총지출은 3%, 내구재 지출은 9% 더 많았으며, 특히 EIC가 지급되는 2월에 내구재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oodman-Bacon and McGranahan(2008)은 미국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수혜자들이 환급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EITC 수급자는 자동차 구입 및 교통비 지출 등 내구재 관련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ITC 환급이 이루어지는 2월의 자동차 관련 물품에 대한 월평균 지출액이 EITC 수급자가 비수급자



B5변형/ 207면
2022. 12.

보다 약 3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EITC뿐 아니라 여러 목적을 위해 다양한 현금성 지원 정책을 운용한다. 이러한 현금성 지원을 받은 수혜자들의 소비패턴 변화에 대한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한 현금지원의 소비효과에 대한 분석이 다수 진행된 바 있다. 권홍진 외(2021)는 아동돌봄포인트 지급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돌봄포인트가 지급된 4월 13일부터 4주 동안 지급액 대비 34~44%에 달하는 추가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희·이수진(2021)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 아동돌봄쿠폰이 가구 소비지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돌봄쿠폰 지급이 가구소비지출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김미루·오윤혜(2020), 이태석 외(2020), 노용환(2021), 홍민기(2020), 남재현·이래혁(2021), 이승호·홍민기(2021) 등 다수의 연구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현금성 지원정책이 소비에 유의미한 효과를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현금성 지원 정책과 관계없이 가계의 소비성향 자체를 분석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손연정 외(2019)는 소비 기준의 불평등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전반적인 소비 규모를 통한 불평등 측정에서 더 나아가 세부 소비항목을 분류하여 가구의 소비지출 행태 및 불평등 정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평균 소비성향은 외환위기 이후 2000년에 정점을 기록한 후 추세적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을 기점으로 감소 폭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용·서정원(2020)은 최근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성향 변동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 소비성향의 유의미한 변동성은 주로 50대와 60대 이상 가구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 근로빈곤가구 소비행태에 대한 주요 논의

본 절에서는 근로빈곤층의 소비행태에 대한 기존 문헌의 내용을 보다 유기적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정부의 현금성 지원을 받은 근로빈곤층은 일시적 차원으로 그러한 지원금이 주어지더라도 소비반응이 예상될 수 있는데, 이는 보통 유동성 제약 등의 요인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동성 제약은 여러 요인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먼저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미래 소비를 위한 예비적 저축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안정성도 낮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소득 충격이 존재할 때, 개인 차원의 저축액이나 사회안전망으로부터의 생활급여가 없거나 부족해서 양적, 질적 소비수준이 저해된다. 안정적인 소득활동이나 저축활동을 하지 못하는 근로취약층은 대출금액이나 카드금액의 연체 확률도 높을 수 있다.

낮은 소득 수준과 더불어,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근로취약층의 금융 신용도에 영향을 미쳐서 유동성을 직접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근로빈곤층은 유동성 제약으로 인하여 저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한 내구재 소비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당한 수준의 지원금이 일시에 지불되는 경우 근로빈곤층은 그동안 계획해왔던 내구재 품목에 소비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Goodman-Bacon and McGranahan(2008)은 EITC 수급자의 근로장려금이 차량구매 혹은 대중교통 지출 분야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현재 소비가 유동성 제약이 없었을 때의 소비수준보다 낮은 근로빈곤층은 일시적인 정부의 지원금을 수급한 후 저축보다는 소비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소비활동은 지원금 수급 이후 단기간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유동성 제약은 소비의 양적, 질적 수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여가시간의 제약으로도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은 시간 제약과 예산제약을 동시에 완화시키는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유자녀 근로빈곤층에게 특히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Braga et al.(2020)에서는 EITC의 장기효과로써 근로장려세제가 자녀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저자들은 유년기에 EITC에 더 노출될수록(즉, 유년기 자녀가 있는 가구가 근로장려세제 수급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 자녀가 22~27세 시기에 비만이 될 확률을 낮추고 스스로 보고한 건강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주장한다. McGranahan and Schanzenbach(2013)에서는 다른 현금성 지원과 달리 EITC가 특정 시점

에 지급된다는 사실을 활용하여 잠재적 수급가구의 식료품 소비행태를 분석한 결과, EITC가 지급되는 시점(월)에 신선한 과일과 채소, 육류, 유제품 등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구매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경기변동에 따라 가구의 소득과 소비가 어떻게 변동하는가는 오래된 연구주제 중의 하나였다. Meyer and Sullivan(2011)은 저소득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경기변동(실업률)에 대한 소비, 소득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저자들은 검토 결과 거시적인 경기변동이 소득 및 소비의 빈곤수준과 상호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보인다.

다음으로 지급주기 측면에서의 논의가 있다. 본고의 주요 목적은 정부의 현금성 지원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는 (근로)빈곤층이 지급받은 현금을 소비와 저축 사이에서 어떻게 배분하는지, 그리고 소비하는 경우 이를 언제 소비하고(소비 평탄화 여부 등) 어떠한 재화를 구입하는지 등 소비패턴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저축과 소비에 대한 생애주기 가설(life-cycle hypothesis of savings and consumption)은 가구 소득, 소비와 저축의 관계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 중 하나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현재의 소비수준은 전망되는 생애 소득의 현재가치(present value of projected life-time earnings)의 함수이다. 따라서 아주 간단한 가정하에서 생애주기 가설은 EITC 등 정부의 현금성 지원정책의 지급주기 변화는 가구의 소비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예측한다. 하지만 신용제약 등의 요소가 이론에 추가되면 예측은 달라진다. 현금성 지원정책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은 유동성 제약하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들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이 높

기 때문에 지급 시기는 가구 소비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현재의 1원 가치가 미래의 1원 가치보다 높기 때문에 가구는 동일한 금액을 더 빈번하게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분할지급을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기존의 생애주기 가설이 가구의 행태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심리적 요인까지 반영한 생애주기 가설을 제시하기도 한다(Thaler and Shefrin, 1981). 근로장려세제의 지급주기와 관련해서는 가구가 금액이 큰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반기 지급보다 정기 지급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빈번한 주기로 소액이 지급되는 경우에 비해 한 번에 큰 금액이 지급되면 한계소비성향이 낮고 저축에 더 많은 금액을 배분하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다.

3. 근로빈곤가구의 소비행태에 대한 기초 분석

가. 분석자료 소개

근로장려세제의 소비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 수급 혹은 수급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를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소비행태에 대한 정보, 기타 인구통계학 및 사회경제적 변수 등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분석에 활용가능한 자료 중 이러한 모든 요소를 이상적으로 갖춘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KCB 신용카드 자료, 농촌진흥청 「농식품 소비자패널조사」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등 세 종류의 자료를 독립적으로 활용하여 근로장려세제의 소비효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1) KCB 신용카드 자료

Korea Credit Bureau(이하, KCB)는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개인의 신용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국내 18개 대형 금융회사들이 공동 출자한 개인신용평가회사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신용정보에 대한 법정동 단위의 집계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활용한 KCB 법정동 단위의 가구 집계자료(이하 KCB 가구 집계자료)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전국의 모든 법정동에 대한 월 단위자료이다. KCB 가구 집계자료에서는 특정 월의 법정동별 가구 수, 가구원 수, 가구 월소득, 카드 사용금액, 총대출잔액, 카드 이용금액(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별도), 현금서비스 이용금액, 대출금액, 대출연체수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장려세제 수급자가 집중되어 있는 법정동에서 카드소비금액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늘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출과 연체 정보가 있기 때문에 신용계약이 존재하는 가구의 경우 그러한 소비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KCB 가구 단위 가명처리 데이터의 총가구 수는 10,287가구이다. 해당 자료는 가구별 가구원 수, 소득, 카드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구분), 신규대출 및 대출상환 금액(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기타담보대출로 구분)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2) 「농식품 소비자패널조사」 자료

농촌진흥청에서 구축 및 운영하고 있는 「농식품 소비자패널」(이하 농식품패널) 자료는 가구 단위에서의 농식품에 대한 상세한 소비 정보와 인구통계

학적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농식품패널은 2009년 최초 1,000가구로 표본이 구축된 이후 2015년 1,500가구, 2017년 2,050가구로 확대되었으며, 2020년에는 노후화된 패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농식품패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구소득, 가구 구성원 수, 자녀 여부, 가구 주거형태(아파트, 단독주택, 원룸 등), 가구 보유 차량 수, 거주 지역, 가구원별 직업, 나이, 소득 등 인구통계 및 사회경제적 변수가 제공된다. 또한 농식품패널에는 구입한 재화가 속하는 상품군(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품명, 구입액, 수량, 중량, 원산지, 브랜드, 재배방법(인증종류), 결제방법, 구입처(대형마트, 전통시장, 슈퍼마켓, 편의점, 온라인 등 총 8개로 구분), 구입 날짜, 상품 구입을 위해 사용한 이동수단 등 농식품 소비와 관련된 매우 상세한 정보가 존재한다.

3)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가금복)는 통계청이 작성한 자료로, 여러 가지 행정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그 정확성을 높여 소득분배지표를 생성하거나 가구 소득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간단한 기초통계량을 제공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RDC 혹은 원격 접속에 의한 가금복 자료를 활용하였다.

가금복 자료는 전체 가구 대표성을 지닌 연간조사로서 가구 및 가구원 특질, 가구 소득·자산의 수준 및 유형, 근로장려세제 수급 여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금복 자료는 소비총량에 대한 정보와 함께 소비구조(필수

재/비필수재, 내구재/비내구재)에 대해서도 파악이 가능하다. 다만, 소비정보는 조사(응답자가 직접 보고)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금복 자료는 행정자료와 연계되어 있어 근로장려세제의 실제 수급가구를 데이터에서 식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 근로빈곤가구 소비행태에 대한 기초 분석

본 절에서는 앞서 소개한 KCB 및 농식품패널 자료에서 관측되는 근로빈곤가구의 소비행태 패턴을 소개한다.

KCB의 법정동 집계자료를 활용해 데이터에서 관측되는 패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소비의 절댓값이 커진다. 이는 소비 자체가 정상재로서, (정태적) 효용극대화 과정에서 소득과 함께 늘어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고소득가구는 저소득가구에 비해 양적으로 유사하더라도 질적 수준이 높은 소비를 하거나, 사치재 구매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고소득가구는 저소득가구에 비해 소득이나 자산을 기반으로 높은 신용도를 누릴 수 있고, 그 결과 소비지출 여력 역시 증가할 수 있다. 둘째, 1분위 가구를 제외하고는 고소득가구의 평균소비 성향이 저소득가구의 평균소비(소득 대비 소비 비율) 성향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패턴이 나타난 이유 중의 하나로 고소득가구가 유자녀 비율이 높고, 나아가 사교육비 등 자녀와 관련된 소비수준이 더 높기 때문일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소비수준의 변동성은 상위분위에서 크게 늘어난다. 소비를 필수재와 비필수재로 구분할 때, 필수품

목이 아닌 재화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소비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전체 소비 중에서 비필수재에 대한 상대적 비중이 고소득가구가 저소득가구보다 높다면, 결과적으로 고소득가구에서 보이는 소비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넷째,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의 변동성은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줄어든다. 소득의 수준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소비비중이라는 변수는 단순 소비변수에 비해 수준(level)으로 인한 소비변동성이 제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순 규모의 차이로 인한 소비변동성 제거 시, 고소득가구는 저소득가구에 비해 소비수준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저소득가구는 기간별 소비수준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저소득가구가 상대적으로 유동성 제약이 높아 기간간 평탄한 소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식품패널 자료에서 나타난 패턴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 5분위별 소비패턴을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과 소비수준의 비례관계가 농식품 품목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도 대체로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충격이 농식품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가구(5분위)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간의 소비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저소득가구(1분위 및 2분위)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대체로 소비가 감소하는 패턴이 관측되었다. 또한, 농식품 소비에 있어 명절(설날 및 추석)이 매우 중요한 이벤트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농식품패널 조사 대상자 중 소득감소를 경험한 가구의 소비 패턴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부정적 소득충격을 경험한 가구는 농식품 소비수준을 유의미하

게 감소시키고 이러한 패턴은 소득 1분위 및 2분위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수산물 소비는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패턴도 관측되는 반면, 과일 및 채소류에 대한 소비수준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특히 저소득층에서는 필수재 소비수준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감소한 가구들에서 국산 소고기 소비를 줄이는 패턴이 관측되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부정적 소득충격을 경험한 가구들의 소고기 총소비액 중 국산 소고기 소비액 비중은 감소하였다. 이는 소득충격에 직면한 가구들이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아닌 질적 측면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농식품패널에 존재하는 가구 정보를 활용하여 잠재적 근로장려세제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를 구분한 후 소비 패턴을 살펴보았다.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장려세제 잠재적 수급가구의 농식품 소비 수준이 근로장려세제 비수급가구에 비해 낮다는 점이다. 이러한 패턴은 주요 품목에 걸쳐 관측되었으며, 특히 가공식품, 축산물, 필수재 항목에서 그 차이가 컸다. 다음으로 근로장려세제 지급이 확대된 2019년에 근로장려세제 수급가구의 소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수급가구가 비수급가구에 비해 2019년 9월 소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는지 그 래프로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2019년 10월과 11월 소비의 전년 대비 증가 정도는 근로장려세제 수급가구가 비수급가구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농식품 소비를 품목별로 살펴보는 경우에도 모든 품목의 경우와 대체로 비슷한 패턴이 관측되었다. 소비의 질적 측면을 소고기 소비를

통해 살펴본 결과, 수급가구의 소비가 질적으로 크게 개선되는 패턴은 확인되지 않았다.

4. 근로장려세제의 소비효과 분석

가. 분석대상으로서 근로장려세제 선정 이유

반면,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과 노동시장 참여를 목적으로 주어지는 중요한 조세지출제도인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 가구에 대한 현금성 지원의 소비효과를 살펴보기에 적절한 제도이다.

먼저, 제도 자체가 근로빈곤층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점증, 평탄, 점감 형태를 따르고 있는데, 취업소득이 없으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세제 수급액은 없다. 또한 수급액의 점증구간 때문에, 취업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은 가구라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기존 일자리에서 근로시간을 늘려 취업소득을 증진할 유인이 존재한다. 근로장려세제 지급 대상은 결국 경제활동 능력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이 충분하지 않아 생계를 전적으로 국가에 의존해야 하는 집단과, 경제활동 능력이 충분히 있거나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이 충분하여 국가로부터의 별도 지원이 필요없는 집단 사이에 자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근로장려세제가 2019년에 큰 폭으로 확대되었는데, 해당 제도 변화가 2019년 신청분부터 바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를 사실상의 외생적 소득충격으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근로장려세제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하고, 근로소득자에 대한 반기지급을 허용하는 등 큰 폭의 제도 변화를 제안하였다. 이러

한 제도 변화가 더욱 특별한 것은, 해당 제도 변화가 2018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2019년 신청분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에 경제 주체가 정부의 제도 변화에 반응하여 행태를 변경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2018년 세법개정안이 2018년 7월 30일에 발표되었으므로, 2018년 1월부터 2018년 7월 30일까지는 제도 변화에 반응한 경제 주체의 행태 변화 가능성은 0으로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기간인 2018년 7월 3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제 주체의 행태변화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김문정·김빛마로(2020)에 의하면, 2019년 상반기 기준 근로장려세제의 신청자격에 대해 40.5%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한 가구 중 일부만이 실제로 행태를 변경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법개정안 발표 직후인 2018년 하반기에 정부의 근로장려세제 확대 발표에 반응하여 경제 주체가 내생적으로 행태를 변화했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본고에서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의 소비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9년 확대개편된 근로장려세제를 활용하였다.

나. KCB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분석

KCB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근로장려세제 지급이 가구의 소비금액 및 대출상환액 증가, 신규 신용대출 감소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결과는 변수의 절댓값 혹은 로그값을 설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강건하게 나타났다. 특히 소비증대와 관련하여, 근

로장려금 지급 이후 수혜가구는 체크카드 사용액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패턴이 추정되었다.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인 근로빈곤가구 중 신용도가 높지 않은 가구의 비중이 높아 신용카드 사용에 제한이 있거나 상황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경우 체크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있을 것이다. 다만,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대출상환금액 증가 효과는 소비 증가분의 약 20%로 나타났다. 즉, 지원금의 대부분은 평균적으로 소비에 사용하고 일부는 대출상환에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 지급 이후 전체 신규 신용대출금액은 감소하지만, 전체 신규 대출금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근로빈곤가구의 신용대출이 일반적인 소비수준을 영위하기 위한 대출인 경우가 많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에 따라 신규 신용대출이 감소한 결과는 수혜가구의 소비 수준을 확대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체크카드 사용액 대비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 과도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도 있다.

다. 농식품패널 자료를 활용한 분석

농식품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근로장려금 지급이 농식품 소비 총량을 늘리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추가분석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또한 근로장려세제는 수급가구 소비의 질적 수준을 유의미하게 개선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먼저,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육류 소비액과 소비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소비액은 증가하면서 소비량은 감소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수급가구가 소비량은 오히려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가격이 높은 재화의 소비를 늘리는 패턴이 관측된 것이다. 또한 수급가구는 과일 소비액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 반면, 라면류 소비액은 유의미하게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품군 측면에서의 질적 개선도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맥락에서 근로장려금 수급가구가 노점 및 무점포에서의 소비액을 유의미하게 줄이는 패턴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수급가구의 소비가 질적으로 개선되었음을 방증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상술한 결과들 모두 자녀(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더 강화되지는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라. 가금복 자료를 활용한 분석

가금복 자료를 활용하여 두 가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잠재적 근로장려세제 수급집단 중에서 실제로 수급한 경우를 처리집단으로 상정하고, 잠재적 근로장려세제 수급집단 중에서 실제로 수급하지 않은 경우를 통제집단으로 상정하였다. 둘째, 근로장려세제를 실제로 수급한 경우를 처리집단으로 상정하고, 근로장려세제를 수급하지 않으면서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임계수준 이하에 속하는 가구를 통제집단으로 상정하였다. 잠재적 수급가구라는 테두리 내에서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을 검토하는 경우 평균적인 소득이 1,500만원 이하로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반면, 그러한 테두리를 추가로 제한하지 않고 실제 근로장려세제 수급가구를 처리집단으로 상정하는 경우 평균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첫 번째 방식의 경우 2018년 귀속연도에 대하여 근로장려세제를

지급받은 가구 중에서도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처리집단의 소비효과를 포착하고, 두 번째 방식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처리집단의 소비효과를 포착한다고 할 수 있다.

소비의 절댓값을 종속변수로 상정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저소득 처리집단(첫 번째 분석방법)의 경우 전체 표본에서는 식료품과 교육비에서 유의미한 소비효과가 나타났다. 배우자 여부에 따라 표본을 분리하면, 무배우자 표본에서는 식료품과 통신비에서 유의미한 양(+)의 소비효과가 나타났으며, 유배우자 표본에서는 교육비 지출은 늘어나지만 통신비 지출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처리집단(두 번째 분석방법)에서 무배우자 표본은 식료품과 가사서비스에서 유의미한 양(+)의 소비효과가 나타났고, 유배우자 표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종합하면, 무배우자 표본은 식료품, 통신, 가사서비스 측면에서 소비효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통신기기는 오늘날 경제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점을 고려할 때, 통신비가 증가한 추정 결과는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무배우자 가구가 기존에는 이러한 필수재를 충분히 소비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가사서비스’는 포괄적으로 가사나 돌봄 등의 서비스를 의미할 수 있는데, 무배우자 가구의 가사서비스 소비가 늘어났다는 사실은 독거노인 가구 등을 다수 포함하는 무배우자 가구에서 그러한 서비스 수요가 상당히 높을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유배우자 표본 분석 결과는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들의 교육비 지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5. 결론 및 정책시사점

본고에서는 2019년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을 외생적 소득충격으로 이용하여 정부의 현금성 지원정책이 근로빈곤가구의 소비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KCB 신용카드 자료, 「농식품 소비자패널조사」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정부의 현금성 지원을 받은 근로빈곤가구가 소비의 양적, 질적 패턴을 유의미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가구가 소비 총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식료품, 통신비, 가사서비스, 교육비 등 특정 분야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패턴을 확인하였다. 또한 KCB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수급 가구가 전체 카드소비액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대출상환금액을 통계적으로 늘리고, 신규 신용대출금액은 줄이는 패턴이 나타났다.

이하에서는 본고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세 가지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일관되게 유의미한 소비효과가 관측되었다는 점은 향후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현금성 지원정책 설계 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소비 진작 목적의 정책에서는 소비 여력이 큰 고소득층에 의한 효과가 강조되어 왔으나, 비교적 저소득 계층으로 볼 수 있는 근로빈곤가구에서도 현금 지원에 따른 유의미한 소비효과가 관측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지원금과 같이 특정 기한을 두고 소비하지 않으면 지원금액이 사라지는 형태가 아닌 활용처 및 기한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근로장려금에서 유의미한 소비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

할 만하다.

또 본고를 통해 근로빈곤가구의 소비가 제약되었던 분야를 식별함으로써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 정책 설계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만약 정부가 본고에서 식별한 ‘현금지급 이후 소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제품군’의 소비를 증가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행정비용이 적고 소비자의 후생이 가장 크게 개선될 수 있는 현금지원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정부가 ‘현금지급 이후 소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제품군’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현금지원보다는 현물 지원이 더 적절할 수 있다. 다만, 현금지원 이후 해당 제품군의 소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제품군 소비가 가구 후생에 큰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정책 목표가 적절히 설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현금지원으로 시장에 과도한 유동성이 공급되는 것을 우려하여 현물지원을 대안으로 고려하는 경우에도 본고의 분석 결과가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 결과를 고려하면, 정부가 근로빈곤가구에 바우처 형식으로 현물 지원할 때 통신비, 육류, 과일 등의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이들의 효용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또한 정부의 현금성 지원이 수혜가구 소비의 질적 수준을 유의미하게 개선한다는 본고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정책을 평가할 때 장기적 재정 부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금성 지원 수혜가구가 유의미하게 과일류 소비를 증대시키고, 노점 및 무

점포 소비를 감소시킨다면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 장기적인 정부 지출이 경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잠재적인 장기 영향이 존재한다면 근로빈곤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장기적으로 비용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와 본고의 분석 결과를 비교해볼 때 근로장려세제의 소비 효과는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로빈곤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이들 가구 소비의 양적,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본고에서는 근로장려세제의 외생적 제도 변화가 있었던 2019년 지급분의 소비효과만을 추정했기 때문에, 제도에 의한 노동공급 형태 및 소득 변화가 소비에 미친 영향은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의 주 목적은 수혜가구의 근로유인을 증대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소비수준의 개선은 다소 부차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본고의 분석 결과는 근로장려세제의 비용과 편익을 평가함에 있어 간과될 수 있는 가구 소비 효과가 실증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근로장려세제의 개선방향을 모색할 때 제도 본연의 목적인 근로유인 증대 및 소득재분배 개선 외에도 가구의 소비를 개선함으로써 수혜가구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효과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22-05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이 근로빈곤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정책토론키포트

+ 2023년도 PEMNA 예산분과 회의



2023년도 PEMNA 예산분과 회의

개요

- **주 제** Strengthening the Role of Ministries of Finance in the Green Transition and Climate Resilience Agendas
- **일 시** 2023년 3월 8일 (수) ~ 9일 (목)
- **장 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주 최** 기획재정부, 세계은행
- **주 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후 원** 유럽연합

■ PEMNA(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 in Asia, 아태재정네트워크)는 아태 지역 국가의 공공재정관리능력(Public Financial Management) 배양을 목적으로 2012년에 설립된 국가 간 재정협력체임

- PEMNA 사업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주관하고 기획재정부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후원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사무국을 담당함
- 회원국은 한국,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브루나이로 총 14개 국가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계은행, EU, IMF가 개발협력회원으로 참여함
- PEMNA는 국고회계분과와 예산분과 총 2개 분과를 운영 중이며 2012년 1차 총회 이후 매년 연 1회의 총회와 2~4회의 분과 회의, 벤치마킹, 연구보고서 발간 등 활발한 교류 및 역량강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PEMNA는 “녹색회복과 전환을 위한 재정 거버넌스”를 주제로 하는 예산분과 회의를 2022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해당 주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023년도 예산분과 회의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함

- 본 회의는 이틀에 걸쳐 “녹색전환 및 기후 회복력 어젠다를 위한 재무부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였음

DAY 1

3월 8일(수)

Opening Session

Opening Remarks

• Alma Kanani (The World Bank)

■ PEMNA 운영위원회 공동의장 Alma Kanani는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녹색성장의 시의 적절성을 강조하며, 특히 녹색어젠다 실현을 위해 각국 재무부의 역할이 중요함바, 본 회의가 회원국의 녹색성장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함

- 지난해부터 대면회의가 재개되어 더욱 많은 사람이 PEMNA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이번 회의에는 중국 후난성 관계자도 참석하는 등 PEMNA 회의의 가시성이 증가함
- 회의 주제인 녹색성장 및 전환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와 불평등 문제 등 경제·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녹색어젠다의 중요성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무부의 역할 증대를 재확인한다고 할 수 있음
-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수평·수직적 협업이 요구되는바, 이번 회의에 말레이시아 환경부 소속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처럼, 향후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녹색어젠다 활성화를 기대함

Introduction

• Rofyanto Kurniawan (Ministry of Finance, Indonesia)

■ PEMNA 예산분과 의장 Rofyanto Kurniawan

은 기후변화가 범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이는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등 많은 국가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바, 이번 회의가 녹색경제를 통한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재정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인도네시아는 녹색경제를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주요 어젠다로 고려하고 있으며,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전기바이크 도입, 환경보조금 등 다양한 관련 제도와 정책을 시도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를 위해서는 특히 에너지 전환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예산 책정과 개발협력 파트너들과의 협업이 요구됨
- 이번 회의의 대주제인 재무부의 역할 강화는 중요한 이슈이며, 특히 위험관리와 녹색정책 수립 시 경제·재정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재무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Session 1. Greening Revenue Policies

Presentation 1 • Tsolmon Enkhbold (Mongolia)

■ 몽골은 장기개발정책 비전 2050을 통해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로는 ① 기후

변화 완화, ② 지속가능한 물 사용 및 관리, ③ 자연자산 가치평가를 통한 기본 생태계의 보호 및 균형 유지, ④ 천연자원 복구 등이 있음

-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산림 파괴와 사막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10억 그루의 나무심기(One Billion Trees) 계획에 대해 설명함
- 이어서 대기질 80% 개선, 담수의 55%에 대한 특별보호대상 지정, 채광활동으로 훼손된 8,000헥타르 부지의 복구, 온실가스 배출량 12.3% 감축 등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세부내용으로 설명함

■ 몽골은 세계에서 가장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세입정책(Revenue policy)과 조세정책(Tax expenditure)을 소개함

- 세입정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및 대기오염 범칙금(Air Pollution Fee)의 50%를 지방 탄소배출 저감 예산으로 재배치하는 정책 등이 있으며, 조세정책의 예로는 녹색개발을 실천하는 경제주체들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이 있음
- 이러한 중장기 개발정책을 통해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몽골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정책 도입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연구도 진행 중에 있음

Presentation 2

- Ganokporn Soisuwan (Thailand)
- Natnarin Sutheesophon (Thailand)

- 태국은 최근 이산화탄소 및 탄소의 배출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세제 정책 등을 활용하여 환경오염 완화와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음
 - 세제 정책은 소비세(excise) 형태로 적용되고 있으며, 크게 환경세와 에너지세로 나뉘어 석유 제품과 대기오염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에 관련 세금을 부과함. 또한 이를 통해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소비 증대 등의 대체효과를 기대함
 - 재해대책 예산 확보, 2065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등 여러 친환경 정책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 재해 대비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 전략 시스템(Strategic Program on Developing National Preparedness System and Disaster Management System)을 통한 국가 안보 전략, 8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 전략 프로그램 등 관련 예산을 매년 확보하고 있음
 -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 및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도움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Presentation 3

- Bui Minh Tuan (Vietnam)

- 베트남은 글로벌 기후위험지수(Global Climate

Risk Index)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 6위를 기록할 만큼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큰 국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베트남의 기후변화 대응 조세정책은 크게 화석연료 사용 감소 및 탄소배출 제한 정책과 녹색경제 전환 및 환경 보호 정책으로 나뉨
 - 전자의 예로는 환경보호세, 천연자원세, 소비세, 탄소세가 있으며, 후자로는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 비농지사용세와 같은 조세장치가 있음
- 녹색성장 분야에서 달성한 가시적인 성과로는 2019년 대비 2021년 말에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을 통한 전력생산량이 4배 증가한 것과 국내 자동차 생산기업인 Vinfast에서 2022년부터 자체 생산한 전기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기 시작한 것 등이 있음

Session 2.

Fiscal Tools for Subnational Ecosystem and Climate Action

Presentation 1

- Min Zhao (The World Bank)

-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와 생태재정이전(Ecological Fiscal Transfer, EFT)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메커니즘이며, 특히 다각적 측면에서의 활용과 다국가적 시스템 구축 등의 기회 창출이 요구됨

- PES는 생태계 서비스의 보전 또는 증진을 위한 활동에 대해 민간이나 지역사회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써, 특히 정부 차원에서 세금을 활용하여 체계화된 생태계 서비스를 계약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 주는 방식이 늘어나는 추세임
 - PES는 국제적인 시스템으로도 적용이 가능한바, 정부 간 또는 다자간 생태계 서비스 계약 등 다양한 기회 요인이 존재함
- 한편, EFT는 정부 간 이전 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기존 자원을 분배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현재는 기후변화 관련 활동에만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이 아닌바, EFT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 활동으로 발생한 기회 비용을 보상해주는 등 기후변화 관련 정책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이 필요함

Presentation 2

• Zhu Menghui (China)

- 중국 후난성의 생태적 보상 메커니즘은 물, 숲, 습지, 경작지, 초원과 같은 다양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생태 보호를 촉진하고 지역의 환경 보호 노력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생태적 보상 메커니즘을 통해 이룬 주요 성과로는 ① 생태 환경 보호 투자 증가, ② 중앙도시 상수도 음용수원 수질 상승, ③ 미세먼지

농도 감소, ④ 생태 자원 개선 등이 있음

- 후난성은 생태 보상 기금에 대한 투자를 매년 늘리고 있으며, 작년 대비 5.8% 증가한 약 102.7억위안(약 15억달러)의 기금을 2022년에 할당함

- 한편, 한정적 재정 투자 능력과 저조한 민간 자본 참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국가녹색개발 기금 및 지역토양오염방지기금 등 정부 자원을 동원하고, 환경오염배출권, 탄소배출권 및 수자원에 대한 시장기반 거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

Presentation 3-1

• Farah Zahir (The World Bank)

- 인도의 제14차 재정위원회(Fiscal Commission)는 매년 연방 정부가 지방 정부에 분배하는 교부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산식에 각 주의 산림 면적을 추가하였으며, 2015~2016년부터 2019~2020년까지 주별로 ‘매우 밀도가 높은’ 또는 ‘적당히 밀도가 높은’ 산림 면적에 비례하여 연방 정부 교부금의 7.5%를 분배함
 - 이러한 생태재정이전시스템(Ecological Fiscal Transfers, EFT)은 제14차 재정위원회에서 수평적 이양의 일환으로 제안되었으며, 총 74억 달러로 세계 최대 규모임
 - 해당 자금은 각 주의 산림 분야 예산에 종속되지 않으며 주의 재량으로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음

- 산림 지속가능성을 위해 산림을 유지함으로써 생기는 경제적 기회비용에 대한 재정 장애(fiscal disability)를 보상하고 산림이 제공하는 생태적 이점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제15차 재정위원회는 미래지향적 인센티브와 숲을 유지하기 위한 과거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숲 면적 외에도 일부 생태계를 포함하여 가중치를 7.5%에서 10%로 증가시킴
- 한편, EFT 도입 후 3년간 산림 분야 예산이 19%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지만, EFT 도입으로 인한 결과인지 불분명하고 결과를 축적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Presentation 3-2

• Manish Gupta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d Policy)

- 인도는 2005년 이래 제12차와 제13차 재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가 정부가 주 정부에게 산림에 대한 특정교부금을 제공해오고 있으며, 제14차 재정위원회에 이어 제15차 재정위원회에서도 산림 면적을 기준으로 높은 교부금 할당을 받도록 함
- EFT가 주 정부의 산림 분야 예산 할당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자 12개 주를 선정하여 산림 예산 수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제12차 재정위원회의 산림 특정교부금은 높은 교부금-지방예산 비율(Releases-Allocation

- Ratio)인 94.1%를 기록했으며, 제13차 재정위원회의 산림 특정교부금은 91.5%를 기록함
- 인도의 12개 주의 산림 및 야생동물 관련 재정 지출을 전체 재정지출의 백분율로 집계한 결과, 2005~2006년 0.98%에서 2014~2015년 0.89%, 2020~2021년 0.65%로 감소하였으나, 제15차 재정위원회 최종 교부금이 지급된 2021~2023년에는 증가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최근 인도는 세제 개혁,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재정의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거시경제 안정과 경제 성장의 회복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음
- 인도 EFT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이며, EFT의 결과를 축적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Presentation 4

• Khairul Naim Adham (Malaysia)

- 말레이시아는 세계 17대 생물다양성 국가(Mega-diverse Countries) 중 하나로 전 세계의 60~70%의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보존하고 지속가능하도록 관리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가정책 2016-25(National Policy on Biological Diversity, NPBD)를 수립함
- 2019년 NPBD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생태재정 이전(EFT)을 도입하여 보호 지역을 보호 및 보전하는 주 정부에 연방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함

- 한 차례 개혁을 통해 2022-25 EFT는 재정 범위, 분배 방식 등을 수정하였고 특히 사업 성과에 따른 재정 분배 방식을 채택함
- EFT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해 EFT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품질 지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EFT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법률 및 제도적 검토를 수행해야 함

Session 3. Strengthening the Role of Ministries of Finance in Driving Green and Climate Actions: A Framework and Guide for Ministries of Finance

Presentation 1

● Pekka Moren (Coalition of Finance Ministers for Climate Action)

-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Coalition of Finance Ministers for Climate Action)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후변화 어젠다를 경제, 재정 및 금융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전 세계 고위 관료들의 연합으로, 2019년에 설립되어 현재는 83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관심 분야는 탄소가격제 촉진, 저탄소 투자 자금 조달, 기후 관련 금융 위험에 대한 투명성 강화,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 등임

- 정기적 장관급 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연합 내 회의와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전략을 논의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관련 국제기구와 국가 싱크탱크를 포함한 26개의 기관 파트너들 또한 전문성과 분석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연합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Presentation 2

● Nick Godfrey (Grantham Research Institute at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 Anika Heckwolf (Grantham Research Institute at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 각국 재무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정책 수립이 장기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과 공공재정의 책임 있는 관리에 기여가 가능한바, 재무부 차원에서 거시적 전략 수립, 재정정책 개혁, 재정조달 정책 변화 등의 기능 개선 및 리더십, 협력, 인적자본 강화 등의 역량 강화를 주도해야 함
-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최소한 매년 국가별 전체 GDP의 2% 이상의 투자가 권장되는바, 재무부 차원의 투자 유치 방안 마련, 세제혜택 제공, 탄소중립 이행 등을 권고함
- 이와 같은 개혁을 위해 재무부를 위한 교육훈련 및 기술적 지원 프로그램 수립, 연구·지식 공유 네트워크 형성, 이행방안에 대한 대화의 장 마련, 국제적 컨센서스 도출을 위한 회의 개최, 장·차관급의 피드백 수렴 등의 실행 계획을 제안함

Presentation 3

• Maximilian Tariq Conrad (Malaysia)

- 지속가능성 이슈는 말레이시아에서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나 단일 부처가 아닌 여러 부처의 협력을 통해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2021~2025 제12차 말레이시아 계획(12MP) 및 통합 국가 재정 프레임워크(INFF)를 기반으로 함
 -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지원 이니셔티브인 INFF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태깅, My-SDG 재단 설립(민간, NGO 및 기타 단체 등 참여 다자 플랫폼), 지속가능성 수쿠크¹⁾(Sukuk) 발행(환경친화적 프로젝트 지원), 탄소 가격제 도입 검토, 친환경 정부 조달, 기후 행동 재무장관 연합 참여, 기후위기 대응 및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민간 부문 공동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음
 - 탄소 가격제의 경우 아직 검토 중이지만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가 2022년 12월 자발적 탄소 시장인 Bursa Carbon Exchange(BCX)를 도입함
- 2023년에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재정 이전(Ecological Fiscal Transfer), 녹색 기술 세금 인센티브, 전기 자동차 세금 인센티브, 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Storage) 세금 인센티브 등의 정책들을 시행할 계획임

1) 이슬람 채권

DAY 2

3월 9일(목)

Session 4.

Carbon Markets Development

Presentation 1

• Marc Forni (The World Bank)

- 민간과 국가 및 국제사회에서 녹색회복과 탄소중립이 중요 의제로 채택 및 논의되고 있는바, 세계은행의 저탄소 도시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관련 사업의 잠재적 시장 가치 및 성장 가능성을 설명함
 - 저탄소 도시 프로그램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탄소중립 관련 투자 및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 Programme) 대비 보다 직관적인 목표와 방법론 체계, 탄소중립을 통한 수익 창출 및 투자 유치 등이 주요 특징임
 - 베트남의 저탄소 정책 사례가 보여주듯 전기이륜차 도입과 지붕형 태양광 패널 설치를 통한 에너지 절약,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및 관련 시장 규모 증가 등 개발도상국 차원에서도 저탄소 정책을 통해 얻는 이익이 많음을 강조함

Presentation 2

• Arie Yanwar Kapriadi (Indonesia)

- 인도네시아는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

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특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탄소 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탄소세는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저탄소 개발과 SDG 및 인도네시아 2045 비전 달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재정 수단이 될 수 있음

- 현재 탄소배출과 관련된 고급자동차 소비세, 자동차세, 연료세 등 여러 세금이 있으나, 보다 효율적으로 탄소배출에 대한 세금 부과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세조화법(HPP)에 따른 조정이 필요함. 한편, 아직까지 국민 및 기업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전면적인 탄소세 시행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음
- HPP에 의해 탄소세 및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으며, 당초 2022년 도입이 예정돼 있었으나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부족 상황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고려하여 2025년 전면 시행을 계획하고 있음

- 배출권 판매 수입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어 탄소중립을 촉진하는 선순환을 지원하며, 기후대응기금은 2023년 기준 약 2.5조원 규모로 마련되어 있음

■ 2015년에 처음 도입된 K-ETS는 제도에 대한 의견수렴과 보완을 거쳐 현재 제3차 계획기간(2021~25년)이 시행 중임

- 특히 제도 시행 전부터 산업 경쟁력 저하 가능성을 우려한 기업 측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음
- 현재 제4차 계획(2026~30년)을 수립 중에 있으며,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이라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임
- 이 밖에도 참여 사업장 지원 및 시장 기능 강화, 국제협력 촉진 등의 개선안을 4차 계획에 반영할 계획임

Presentation 3

• Jihwan Eo (Korea)

■ 한국은 비용 효율적인 온실가스(GHG)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를 시행 중에 있음

- 정부가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 K-ETS 참가 기업들 간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임

Session 5.

Disaster Risk Management and Financing Strategy

Presentation 1

• Mary Joy O. de Leon (The Philippines)

■ 필리핀은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국가적 재해 감소·관리 기금(National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Fund), 위험 회복 탄력성 프로그램(Risk Resiliency Program), 신속대응 기금(Quick Response Fund), 지역 재해 감소·관리 기금 등을 운영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재정적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음

- 특히 국가적 재해 감소·관리 기금의 경우, 신속대응 기금과 별개로 특별 예산(2023년도 약 195억필리핀페소)을 편성하여 재해복구, 지원 정책 등을 위해 사용되거나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 회복 탄력성을 위해 활용되고 있음

Presentation 2

• Gregorio Soares (Timor-Leste)


- 동티모르는 상대적으로 자연재해 발생이 적은 편이나,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홍수, 산사태, 가뭄 등의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음
 - 이러한 자연재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위험 지역 식별 연구, 조기 경보체계 구축, 재난 발생 시의 즉각 대응책 확보,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력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는 국가 재난 위험 관리 전략을 운영하고 있음
- 자연재해 대응을 담당하는 기관은 내무부와 협력하는 시민보호국가기관(National Authority Civil Protection, NACP)이며, 사회통합부, 행정부, 농림부, 교육부 등 다양한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재해 위기에 대응함
 - 재해 대응을 위한 예산을 매년 NACP에 할당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한 예비비(budget of contingency)도 배정하고 있음

Wrap-up Session

Closing Remarks

• Youngsun Heo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2022년도 예산분과 방콕 회의에 이어 녹색전환과 재정에 관련된 주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게 된 이번 쿠알라룸푸르 회의에 참석해 준 모든 참가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함
 - 회원국 담당자와 국제 전문가들의 발표, 그리고 참석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녹색전환을 위한 재정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각 회원국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함
-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가능하게 한 주최 측과 후원 측, 그리고 발표자와 사회자를 비롯한 모든 참석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향후 PEMNA 후속회의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함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현재 자녀 1인당 2,000달러⁹⁾의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최고 3,600달러¹⁰⁾로 인상하고, 자녀가 없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의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를 확대하고자 함

- FDII(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 공제를 폐지함
- 혼성단체(hybrid entities) 매각으로 인한 외국 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s)를 제한함

<자료수집 및 정리: 권정교 세무사>

■ 기업에 대한 증세, 국제조세제도 개편 등 법인과 관련한 정책은 다음과 같음

- 법인세 최고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을 제안함
-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의해 제정된 자사주 매입(Stock Buyback)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1%에서 4%로 인상을 제안함
-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를 통해 미국 기업의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제안함
 - 적격사업자산투자(Qualified Business Asset Investment, QBAI)의 면제를 제외함
 - Section 250에 따른 GILTI 공제를 50%에서 25%로 인하함
- 미국의 국제조세제도 세제개편을 제안함



[과소사용에 대한 주택보유세(UHT) 면제 지침 발표]

■ 캐나다 국세청은 2023년 2월 7일, UHT(Under used Housing Tax)의 면제조항에 대한 지침을 발표함¹¹⁾

- 2022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비거주자가 보유한 주택이 공실(vacant)이거나 사용률이 낮은(underused) 경우 과소사용에 대한 주택보유세인 UHT를 부과하고 이는 캐나다 전역에 적용됨¹²⁾

■ UHT 면제조항 지침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연중 사용할 수 없는 주택에 대하여 면제함¹³⁾

9) 2023년 3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60만원임

10) 2023년 3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68만원임

11) Bloomberg Tax, "Canada Tax Agency Issues Guidance on Exemptions From Underused Housing Tax," 2023. 2. 13.,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DSFIVRK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vb21iZlXJnbGF3LmNvbS9wcm9kdWN0L3RheC9zZWZyY2gvcmlvZDx0cy8xOGY0YjE4ZjZmNWFiZTMwMzI2OTI3NDAA2ZDNmNmMzNSJdXQ--cab3d386049dda3f5d902f295bbe571e2b458f4d&criteria_id=18f4b18f6f5abe30326927406d3f6c35&search32=3MRQ9mf2hy5puoRkt-0MkQ%3D%3D0RVILFzBzX_aHnS9cjPEyOHfek4hoSi_HFFxj-IS4cVUcACfzhRKxaouxTKw9Ckghw8XeBkwvEb65brCqpdPW8l8NFJ0cGsg4cO5Dy6Z-xCymFoCtAroz5U3I1HK0MdKXByQyItGIO5l138OSGS3Y72w4zGFs4rYtnjRqAGmKZU2V4M33Bwp88ogn2isbF, 검색일자: 2023. 3. 14.

12) 주택가액(property value)의 1%를 부과함; OECD, *Tax Policy Reform 2022*, 2022. 9. 21, <https://www.oecd.org/ctp/tax-policy-reforms-26173433.html>, 검색일자: 2023. 3. 14., p. 115.

13) CRA, "Exemptions for Residential Properties That Cannot be Used Year-round," 2023. 2. 7.,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uhtn9/exemptions-residential-properties-cannot-used-year-round.html>, 검색일자: 2023. 3. 14.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재해, 계절, 개조 등의 이유로 물리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주택을 뜻함

●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면제함¹⁴⁾

- 지난 9년 동안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거주지가 2개 이상인 경우 기본거주지(primary places of residence)에 대하여 면제함¹⁵⁾

■ UHT 면제대상이라도 보고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보유주택에 대한 연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자료수집 및 정리: 권정교 세무사>



영국

[2023년 예산안 발표]

■ 영국 재무부(HM Treasury)는 2023년 3월 15일, 2023년 예산안(Spring Budget 2023)을 발표함^{16), 17)}

● 금번 예산안에는 법인세율 인상, 투자비용 즉시공제 제도 도입, 연금 면세기준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법인세율을 2023년 4월 1일부터 19%에서 25%로 상향 조정함¹⁸⁾

● 25%의 법인세율은 순이익(profits)이 25만파운드¹⁹⁾를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영국 정부는 실제 25%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약 10%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힘

- 순이익 5만파운드²⁰⁾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19% 법인세율을 적용함

- 순이익 5만파운드 초과 25만파운드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 조치를 두기로 함

● 영국 정부는 법인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여전히 G7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을 강조함

■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즉시공제(Full expensing)’ 제도를 도입하여, 적격 플랜트 및 기계설비(qualifying plant and machinery)에 신규 투자할 경우 당해 연도 투자비용을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14) CRA, “Exemption for New Owners,” 2023. 2. 7.,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uhtn11/exemption-new-owners.html>, 검색일자: 2023. 3. 14.

15) CRA, “Exemption for Primary Place of Residence,” 2023. 2. 7.,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uhtn6/exemption-primary-place-residence.html>, 검색일자: 2023. 3. 14.

16) GOV.UK., “Spring Budget 2023,” 2023. 3. 1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pring-budget-2023>, 검색일자: 2023. 3. 16.

17) IBFD, “United Kingdom – Confirmation of Corporate Profits Tax Hike, Abolition of Lifetime Allowance Headline 2023 Spring Budget,” 2023. 3. 1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3-15_uk_3.html, 검색일자: 2023. 3. 16.

18) GOV.UK., “Spring Budget 2023 speech,” 2023. 3. 15.,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spring-budget-2023-speech>, 검색일자: 2023. 3. 20.

19) 2023년 3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9,900만원임

20) 2023년 3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980만원임

록 함^{21), 22)}

- 이에 따라 기존 적용되던 ‘슈퍼공제(Super-deduction)’ 제도는 2023년 3월 31일자로 종료되며, 이를 2023년 4월 1일부터 ‘즉시공제(Full expensing)’ 제도로 대체함
 - 슈퍼공제(Super-deduction) 제도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기간 중 신규 플랜트 또는 기계설비 도입 시 해당 비용의 13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임
 - 즉시공제 제도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될 예정이나, 영국 정부는 향후 이를 영구적 제도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특례공제율군(Special rate pool)에 해당하는 신규 투자에 대해 적용되는 50% 초년도 공제(50% first-year allowance)는 3년 연장하여 2026년 3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임
- 2023년 4월 6일부터 개인의 연간 연금적립액 면세 기준(Pension contribution annual allowance)을 4만파운드²³⁾에서 6만파운드²⁴⁾로 상향 조정함

- 경제활동인구, 특히 전문직의 조기 은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동 조치에 따라 개인은 기존 4만 파운드에서 6만 파운드까지 개인의 연금 펀드에 면세로 불입할 수 있게 됨

- 유류세(Fuel duty)는 현재 수준에서 동결될 예정이며, 주세(Alcohol duty)의 경우 인플레이션에 연동되어 인상될 예정임

<자료수집 및 정리: 이희경 회계사>

벨기에

[세법개정안 발표]

- 벨기에 정부는 2023년 3월 8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확정되는 경우 2024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임²⁵⁾
 - 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소득세 면제금액을 확대하고, 일부 중간 소득 구간의 기준 상한액을 인상함
 - 개인소득세 기본 면제금액을 10,160유로²⁶⁾

21) GOV.UK., “Spring Budget 2023 – Full expensing,” 2023. 3. 1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full-expensing/spring-budget-2023-full-expensing>, 검색일자: 2023. 3. 20.

22) IBFD, “United Kingdom – United Kingdom Introduces Full Expensing Capital Allowances, Notes Other Business Tax Changes as Part of 2023 Spring Budget,” 2023. 3. 1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3-16_uk_1.html, 검색일자: 2023. 3. 20.

23) 2023년 3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387만원임

24) 2023년 3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581만원임

25) Vincent Van Peteghem, “Première phase de la vaste réforme fiscale,” <https://vanpeteghem.belgium.be/sites/default/files/articles/Eerste%20fase%20brederere%20fiscale%20hervorming%20FR.pdf>, 검색일자: 2023. 4. 3.; Bloomberg Tax, “Belgium MOF Announces Proposal for First Phase of Comprehensive Tax Reform,” 2023. 3. 8.,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international/XATOPVAS000000?bna_news_filter=daily-tax-report-international#jcite, 검색일자: 2023. 4. 3.

26) 2023년 3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25만원임

<표 1> 벨기에 개인소득세 세율 구간별 순소득 기준 변동
(단위: %, 유로)

| 세율 | 2023년도 기준 소득 | 세법 개정안 (2024. 1. 1. 시행 예정) |
|----|---------------------|-------------------------------|
| 25 | 15,200 이하 | 동일 |
| 40 | 15,200 초과~26,830 이하 | |
| 45 | 26,830 초과~46,440 이하 | 26,830 초과~60,000 미만 |
| 50 | 46,440 초과 | 60,000 초과 |

주: 2023년 4월 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유로는 약 1,422.73원임
출처: Vincent Van Peteghem, "Première phase de la vaste réforme fiscale," <https://vanpeteghem.belgium.be/sites/default/files/articles/Eerste%20fase%20brederere%20fiscale%20hervorming%20FR.pdf>, 검색일자: 2023. 4. 3.; IBFD, "Belgium Amends Personal Income Tax Brackets," 2023. 2. 2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2-28_be_1.html, 검색일자: 2023. 4. 3.

에서 13,500유로²⁷⁾로 확대함

- 소득세 구간 중 45%가 적용되는 구간의 상한 기준액을 46,440유로²⁸⁾에서 6만유로²⁹⁾로 인상함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적격기업이 이중 휴가수당, 연말 보험료 또는 미지급 보수를 원천징수 산정 기준이 되는 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법인세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 환경을 위하여 관련 소득공제 제도를 개정하고 최저한세를 도입하였으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경감 세율을 통합하고, 소비세는 특정 상품에 대한 적용을 개정할 예정임

- 법인세의 경우 투자 소득공제(déduction pour

investissement) 제도를 개정하고, 혁신 소득공제의 범위를 제한하였으며,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함

- 투자 소득공제 제도에 '지속가능한 투자 소득공제'³⁰⁾를 신규 도입하면서 공제 유인 정책으로 이중 가속상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 투자 소득공제'와 'R&D 투자 소득공제' 제도는 유지함
- 기존의 'R&D 세액공제(credit d'impôt pour R&D)' 또한 계속 운영되며 '지속가능한 투자'의 경우 R&D 세액공제를 선택 적용할 수 있음
- '혁신 소득공제(déduction pour innovation)'의 경우 적격 지적재산권은 신규성이 있는 특허로 그 범위를 제한함
- OECD BEPS 프로젝트의 필라 2에 따라 다국적기업 그룹에 대한 15%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함
-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세율을 조정하고, 전자화된 시스템을 도입함
 - 과일, 의약품, 기저귀 등 기타 위생용품 등과 같은 기본 상품에 영세율(0%)을 적용함
 - 6%와 12%의 경감 부가가치세율은 폐지되어 기존의 적용 품목들은 새롭게 도입되는 9%의 경감 부가가치세율이 통합 적용되고, 전기·천연가스·수돗물·가정 난방에 대해서만 6% 경감 부가가치세율이 계속 적

27) 2023년 3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93만원임
28) 2023년 3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514만원임
29) 2023년 3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416만원임
30) 재생 에너지 생산 등 친환경 관련 투자를 의미함

용됨

- 표준 부가가치세율을 기존의 21%로 유지하고, 석탄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12%에서 21%로 인상함
- 디지털화 및 자동화된 절차를 도입하여 부가가치세 행정을 간소화함
- 화석연료 및 담배에 대한 소비세 제도를 개정할 예정임
 - 화석연료에 대한 경감된 소비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며 화석연료에 대한 특정 사용에 대해 적용되던 다양한 면제제도 또한 개정될 것임
 - 담배 및 담배 대체품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할 예정임

<자료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로부터 발생한 초과이익의 90%에 대하여 초과이익세(부담금)를 부과하도록 함

- 수력발전의 경우 메가와트시(megawatt hour)당 100유로,³²⁾ 풍력, 태양열, 도시 및 산업 폐기물 분담금, 정수 처리장 가스의 경우 메가와트 시당 130유로,³³⁾ 바이오메스 또는 폐목재로부터의 연료 및 바이오 가스의 경우 메가와트 시당 180유로³⁴⁾를 넘는 에너지 기업에 대하여 적용함
- EU 회원국이 지난 2022년 10월 에너지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하여 일시적인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한 EU 지침(2022/1854)에 따라 도입함
- 2022년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임

<자료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룩셈부르크

[초과이익세 도입 법안 의회 제출]

- 룩셈부르크 정부는 2023년 3월 17일, 에너지 기업에 대한 초과이익세 도입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³¹⁾
 - 법안은 일정 기준을 넘는 에너지 기업의 매출



독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세대책 발표]

- 2023년 2월 27일 독일 재무부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조세대책(Steuerliche

31) 룩셈부르크 정부, "Projet de loi introduisant un plafond sur les recettes excédentaires issues du marché des producteurs d'électricité," <https://wdocs-pub.chd.lu/docs/exped/0137/195/275953.pdf>, 검색일자: 2023. 3. 20.; IBFD, "Proposal for 90% Windfall Profit Tax Submitted to Parliament," 2023. 3. 1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3-17_lu_1.html, 검색일자: 2023. 3. 20.

32) 2023년 3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만원임

33) 2023년 3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만원임

34) 2023년 3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5만원임

Maßnahmen)을 발표함^{35), 36)}

- 이번 지진피해자들을 위한 조세대책은 2023년 2월 6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조치에만 적용함
 - 국내 공공기관 및 법인 등의 모금된 기부금 증빙서류(비과세 증빙)를 간소화하고, 비영리단체 또한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음
 - (후원비용) 지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 기관 및 법인의 후원비용은 사업비 공제가 가능함
 - (소득세) 지진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제공 시 최대 600유로³⁷⁾까지 면세되고, 해당자의 소득 및 상황 등 경제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초과분도 예외적으로 면세할 수 있음
 - (부가세) 지진피해자를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원 제공의 경우 매입세액³⁸⁾을 공제함
 - (증여세) 지진피해자를 위해 공공기관, 종교단체 등 자선 목적으로 증여 시 해당하는 증여세를 면세함

<자료수집 및 정리: 유승혜 연구원>



이탈리아

[코로나19 관련 수입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침 고시]

- 이탈리아 세관당국은 2023년 2월 14일, 2021 예산법에 의해 도입되었던 코로나19 관련 수입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지침을 업데이트하였음³⁹⁾
 - 이탈리아는 2021년 1월 18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하는 코로나19 관련 백신 및 진단 장비에 대해 0%의 부가세율 적용을 도입한 바 있음⁴⁰⁾
 - 2023년 1월부터 수입되는 코로나19 관련 백신 및 진단 장비에 대하여 더 이상 0%의 부가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업데이트된 지침에 따르면 수입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됨
 - 업데이트된 지침에 따르면 수입된 코로나19 진단 장비에 대하여 5%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됨

<자료수집 및 정리: 이나현 변호사>

35) Bundesfinanzministerium(BMF), "Steuerliche Maßnahmen zur Unterstützung der Opfer des Erdbebens in der Türkei und in Syrien," 2023. 2. 2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MF_Schreiben/Weitere_Steuerthemen/Abgabenordnung/2023-02-27-steuerliche-massnahmen-zur-unterstuetzung-der-opfer-des-erdbebens-in-der-tuerkei-und-in-syrien.html, 검색일자: 2023. 3. 17.

36) IBFD, "Ministry of Finance Notes Tax Measures to Support Victims of Earthquake in Türkiye and Syria," 2023. 2. 2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2-28_de_1.html, 검색일자: 2023. 3. 17.

37) 2023년 3월 20일 기준 83만 7,852원임

38) 해당 매입세액은 독일 「부가가치세법(Umsatzsteuergesetz, UStG)」 § 15에 따라 적절하게 고려함

39) ADM, "RIDUZIONE ALIQUOTA IVA PER LE CESSIONI E LE IMPORTAZIONI DI BENI NECESSARI PER IL CONTENIMENTO E LA GESTIONE DELL'EMERGENZA EPIDEMIOLOGICA DA COVID-19," 2023. 2. 14., <https://www.adm.gov.it/portale/documents/20182/99339237/20230214-082541RUCircularre+5+firma+DC.pdf/72065518-e522-066f-004c-fa66504cd998?t=1676461763293>, 검색일자: 2023. 3. 17.

40) IBFD, "Budget Law for 2021: Italy Introduces Zero VAT Rate on Supplies of Vaccines and Diagnostic Equipment Related to COVID-19 Pandemic," 2021. 1. 18.,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01-18_it_4%23tns_2021-01-18_it_4, 검색일자: 2023. 3. 17.



그리스

[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소득 유형 명시]

- 그리스 재무부는 2023년 2월 23일, 톤세(Tonnage Tax)⁴¹⁾ 부과 대상이 되는 해운회사의 특정 유형 소득을 명시함⁴²⁾
 - 승객 또는 화물 운송으로 인한 소득
 - 선주에 의해 승객이나 화물 운송을 위한 인력 과 장비가 완전히 갖추어진 선박의 고용(hiring)에서 발생한 수익
 - 승객 또는 화물의 선박운송을 목적으로 회사가 합작투자에 참여하여 발생한 수익
 - 선박 판매로 인한 자본이득
 - 단, ① 선박이 취득당시 톤세 과세대상이었고, ② 선박 취득 후 선박을 해운회사에서 해상운송에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됨
 - 슬롯용선계약(slot charter party)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여 해운회사의 보조 활동에서 얻은 소득

<자료수집 및 정리: 이나현 변호사>



네덜란드

[은행세법 개정안 발표]

- 네덜란드 재무부 장관은 2023년 2월 22일, 2023년 은행세 면제금액과 저축 및 투자로부터 얻는 과세대상 소득의 2022년 간주 수익률을 확정하는 법령을 발표함⁴³⁾
- 은행세 면제금액을 기존 209억유로⁴⁴⁾에서 235억 유로⁴⁵⁾로 26억유로⁴⁶⁾ 인상함
 - 네덜란드 은행 및 네덜란드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은행의 지점은 직전 회계연도 말 대차대조표상 금액에 대하여 은행세가 부과되는데, 과세대상 금액 산정 시 공제되는 면제금액을 인상함
 - 과세대상 금액은 대차대조표상 총액에서 적격자본(BIS 자기자본), 예금보호제도를 적용받는 예금 및 보험업의 부채와 면제금액(Doelmatigheidsvrijstelling)을 공제하여 산출됨⁴⁷⁾

- 저축 및 투자로부터 얻는 3군 소득(Income

41) 톤세는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 운항의 순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개별 선박 표준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법인세를 산출하는 것을 말함
 42) IBFD, "Greece Clarifies What Income Earned by Shipping Companies is Subject to Tonnage Tax," 2023. 2. 2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2-24_gr_1.html," 검색일자: 2023. 3. 17.
 43) IBFD, "Netherlands Sets 2023 Tax Exempt Amount for Banks, 2022 Box 3 Deemed Returns," 2023. 3. 1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3-15_nl_1.html, 검색일자: 2023. 3. 17.
 44) 2023년 3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8조 9,074억원임
 45) 2023년 3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조 5,035억원임
 46) 2023년 3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조 5,961억원임
 47) 네덜란드 국세청, "Belastbare som bepalen," https://www.belastingdienst.nl/wps/wcm/connect/bldcontentnl/belastingdienst/zakelijk/overige_belastingen/bankenbelasting/bankenbelasting_berekenen/belastbare_som_bepalen, 검색일자: 2023. 3. 17.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from savings and investments(Income in box 3))의 과세대상 소득 산출을 위한 간주 수익률을 확정함

- 네덜란드 개인소득세는 과세대상 소득 그룹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이 중 저축 및 투자로부터 얻는 3군 소득의 과세대상 소득 산출을 위한 간주 수익률을 확정함
 - 3군 소득의 과세표준은 각 항목별 자산의 실질금액에 간주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되며, 저축소득의 경우 기존 0.01%에서 0.00%, 부채의 경우 기존 2.46%에서 2.28%의 간주 수익률을 적용하기로 결정함
 - 기타 자산에 대해서는 2022년 9월에 발표한 바와 같이 5.53%를 동일하게 적용함

<자료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3월 22일 '물가·임금·생활종합대책본부'(본부장·기시다 총리)에서 결정함⁴⁸⁾

- 해당 지원은 지자체의 판단으로 대책을 추진하는 '지방창생 임시교부금'에 총 1조 2,000억엔⁴⁹⁾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교부금의 '권장사업'에 LP가스나 공장용 특별고압전력 부담 경감, 사료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낙농가 지원 등을 명기함⁵⁰⁾
- 교부금의 5,000억엔⁵¹⁾은 특별범위로 하여 주민세 비과세 등 저소득 세대에 일률 3만엔⁵²⁾을 급부하며, 교부금과는 별도로 저소득 육아 가구에 어린이 1인당 5만엔⁵³⁾을 급부할 방침임
- 지자체 교부금의 경우 지자체의 판단으로 급부액을 3만엔보다 줄이는 대신 대상 세대를 넓히는 등의 변경도 할 수 있도록 함

<자료수집 및 정리: 권순오 세무사>



일본

[새로운 고물가 대책 추진]

- 일본 정부는 새로운 고물가 대책으로 LPG 가스에 대한 보조 및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2022년도 예산 예비비에서 필요한 재원의 지출을 2023년



인도네시아

[신수도 투자 관련 세제혜택 발표]

- 인도네시아의 미래 수도인 누산타라의 개발을 축

48) 読売新聞, 「物価高対策に2兆円決定、低所得子育て世帯への給付やLPガス負担軽減など」, 2023. 3. 22., <https://www.yomiuri.co.jp/economy/20230322-OYT1T50089/>, 검색일자: 2023. 3. 28.

49) 2023년 3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924,723,988,000원임

50) 内閣官房 - 物価・賃金・生活総合対策本部, 「物価・賃金・生活総合対策本部(第8回)議事次第」, 2023. 3. 22., <https://www.cas.go.jp/jp/seisaku/bukka/index.html>, 검색일자: 2023. 3. 28.

51) 2023년 3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969,436,500,000원임

52) 2023년 3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98,174원임

53) 2023년 3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96,957원임

진하기 위한 사업 면허 부여, 사업 용이성, 기업 투자 시설에 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2023년 정부 규정 12호(GR 12/2023)를 발표함⁵⁴⁾

- 해당 규정은 기업이 수도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더 큰 확실성, 기회 및 참여를 제공하여 개발이 고르게 분배되고 인도네시아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자본 투자액이 100억인도네시아루피아⁵⁵⁾ 이상인 국내 납세자에 대해 소득세 100%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사업 부문 및 투자 시기에 따라 감면 기간이 상이함

- 공공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의 경우 최대 30년, 경제 분야의 경우 최대 20년, 기타 사업 부문의 경우 최대 10년간 소득세 감면이 적용됨

■ 누산타라 지역과 관련하여 2023년부터 2035년까지 투자한 경우 최대 25년간, 2036년부터 2045년까지 투자한 경우 최대 20년간 금융 부문 활동에 대해 80~100%의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를 부여함

- 누산타라 및 파트너 지역의 건설, 개발 및 경제활동에 대한 투자에 사용되는 소득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법인세 금액에 대해 은행, 보험 및 샤리아 금융을 수행하는 국내 법인 납세자 및 영구 시설에 대한 소득세를 100% 감면함

- 금융 부문 자본시장, 파생금융 및 탄소 교환, 국제 상품 거래·교환에 대한 외국인 투자 소득, 기타 금융 서비스를 위해 누산타라에 위치한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85%를 감면함

- 금융기관에 처음 자금을 예치한 시점부터 10년 동안 비거주자가 받거나 벌어들인 누산타라 투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00% 감면함

■ 본사 또는 지역 사무소를 누산타라에 설립하거나 누산타라로 이전하는 비거주자 및 누산타라의 기업이나 지역사회로부터 얻은 소득을 통해 누산타라에 본사 또는 지역 사무소를 설립하는 국내 납세자의 경우 2045년까지 최대 10년간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의 100%를, 이후 다음 10년간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함

<자료수집 및 정리: 권순오 세무사>



싱가포르

[2023년 예산안 발표]

■ 싱가포르 재무부는 2025년 필라 2 시행 계획을 발표함⁵⁶⁾

- OECD/G20 BEPS(Base Erosion and Profit

54) IBFD, "Indonesia Announces Tax Incentives for Investments in New Capital City," 2023. 3. 1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3-13_id_1.html, 검색일자: 2023. 3. 20.

55) 2023년 3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60,738,542원임

56) IBFD, "Budget 2023: Singapore Proposes Implementation of Pillar Two from 2025 New Incentives for Innovation," 2023. 2.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2-14_sg_1.html, 검색일자: 2023. 3. 17.

Shifting) 2.0 프로젝트의 Pillar Two Global Anti-Base Erosion(GloBE) 규칙에 따라 영향을 받는 다국적 그룹(MNE, large multinational enterprises)에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15%를 적용할 예정임

- 연매출 7억 5,000만유로 초과하는 대규모 다국적그룹의 국제개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며 글로벌 최저한세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 추가세(Domestic Top-up Tax)를 시행할 계획임을 발표함

■ EIS(Enterprise Innovation Scheme) 도입으로

싱가포르 정부 2023 예산안에 R&D, 지적재산권(IP) 등록 지출 공제가 확대됨⁵⁷⁾

- 매출이 연 5억싱가포르달러⁵⁸⁾ 미만인 기업이 싱가포르에서 수행하는 R&D, 지적재산권(IP) 등록 및 라이선싱, 승인된 교육과정 이행 등은 각 활동에 대한 적격 지출의 400%로 강화할 예정임(기존 비율 250%, 활동당 연 40만싱가포르달러⁵⁹⁾ 한도)

-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각 해에 발생하는 적격 지적재산권(IP) 등록 비용 중 첫 발생

하는 인건비 및 소모품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 내용임

- 2024년 이전 공제는 기존 법령인 교육비의 100% 세액공제가 적용될 예정임⁶⁰⁾

- 특정 싱가포르 교육기관과 함께 수행하는 혁신 프로젝트 참여 기업은 5만싱가포르달러⁶¹⁾ 한도 내에서 적격 지출의 400% 공제 가능함
-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이익이 없는 기업의 경우 총 적격 지출의 20%를 최대 2만싱가포르달러⁶²⁾ 한도로 현금 지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도입하며 이는 비과세될 예정임

■ 국제화를 위한 이중과세 공제(the Double Tax Deduction for Internationalization)가 강화됨⁶³⁾

- 기업의 해외 진출 방식 중 하나인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DTDi(the Double Tax Deduction for Internationalization)제도 범위를 확장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캠페인 시작 비용 공제를 도입할 예정임

- 위 사항은 2023년 2월 15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전자상거래 캠페인 시작 비용에

57) A Singapore Government Agency Web site, "Tax Changes," 2023. 2. 14., <https://www.mof.gov.sg/singaporebudget/budget-2023/budget-statement>, 검색일자: 2023. 3. 17.

58) 2023년 3월 2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4,880억 6,000만원임

59) 2023년 3월 2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3억 9,096만원임

60)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Enterprise Innovation Scheme(EIS)," 2023. 2. 14., [https://www.iras.gov.sg/schemes/disbursement-schemes/enterprise-innovation-scheme-\(eis\)#5—innovation-projects-carried-out-with-polytechnics--the-ite-or-other-qualified-partners](https://www.iras.gov.sg/schemes/disbursement-schemes/enterprise-innovation-scheme-(eis)#5—innovation-projects-carried-out-with-polytechnics--the-ite-or-other-qualified-partners), 검색일자: 2023. 3. 28.

61) 2023년 3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48,860,500원임

62) 2023년 3월 2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9,543,400원임

63) IBFD, "Budget 2023: Singapore Proposes Implementation of Pillar Two from 2025, New Incentives for Innovation," 2023. 2.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2-14_sg_1.html, 검색일자: 2023. 3. 17.

적용될 예정이며 이러한 지원은 국가별로 최대 1년 동안만 승인될 예정입니다

- 담배소비세, 자동차 한계 추가등록비, 부동산 인 지세 등 간접세를 인상함
- 2023년 2월 14일부터 담배소비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⁶⁴⁾

- 세율 인상으로 매년 1억싱가포르달러⁶⁵⁾의 추가 재정수입을 기대 중이라 발표함
- 고급 자동차에 대한 한계 추가등록비(Additional Registration Fee)를 인상함⁶⁶⁾
- 새로운 추가등록비 구조는 2023년 2월부터 두 번째 자격증 입찰 행사(Certificates of Entitlement)에서 획득하여 등록된 모든 신

〈표 2〉 싱가포르 자동차 한계 추가등록비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

(단위: 싱가포르달러)

| 기존 | | 개정 | |
|-----------------------------|--|-----------------------------|--|
| 공개시장 가치 (Open Market Value) | 한계 추가등록비 (Additional Registration Fee) | 공개시장 가치 (Open Market Value) | 한계 추가등록비 (Additional Registration Fee) |
| 20,000 이하 | 공개시장 가치의 100% | 20,000 이하 | 공개시장 가치의 100% |
| 20,000 초과 50,000 이하 | 공개시장 가치의 140% | 20,000 초과 40,000 이하 | 공개시장 가치의 140% |
| 50,000 초과 80,000 이하 | 공개시장 가치의 180% | 40,000 초과 60,000 이하 | 공개시장 가치의 190% |
| 80,000 초과 | 공개시장 가치의 220% | 60,000 초과 80,000 이하 | 공개시장 가치의 250% |
| | | 80,000 초과 | 공개시장 가치의 320% |

주: 2023년 3월 28일 기준 1싱가포르달러는 977.14원임

출처: Singapore Government Agency Web site, "Tax Changes," 2023. 2. 14., <https://www.mof.gov.sg/singaporebudget/budget-2023/budget-statement>, 검색일자: 2023. 3. 17.

〈표 3〉 싱가포르 고가 주거 및 비거주부동산에 대한 구매자 인지 세율 최고구간 신설

(단위: 싱가포르달러)

| 구분 | 부동산 구매 가격 또는 시장 가치 중 높은 금액 | 구매자 인지 세율(Buyer's Stamp Duty) | |
|----|----------------------------|-------------------------------|----------|
| | | 주거용 부동산 | 비주거용 부동산 |
| 기존 | 180,000 이하 | 1% | 1% |
| | 180,000 초과 360,000 이하 | 2% | 2% |
| | 360,000 초과 1,000,000 이하 | 3% | 3% |
| | 1,000,000 초과 1,500,000 이하 | 4% | 4% |
| 신설 | 1,500,000 초과 3,000,000 이하 | 5% | 5% |
| | 3,000,000 초과 | 6% | |

주: 2023년 3월 28일 기준 1싱가포르달러는 977.14원임

출처: Singapore Government Agency Web site, "Tax Changes," 2023. 2. 14., <https://www.mof.gov.sg/singaporebudget/budget-2023/budget-statement>, 검색일자: 2023. 3. 17.

64) Singapore Ministry of Finance, "Budget Booklet," 2023. 2. 14., <https://www.mof.gov.sg/singaporebudget/resources/budget-booklet>, 검색일자: 2023. 3. 17.

65) 2023년 3월 2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977억 1,700만원임

66) A Singapore Government Agency Web site, "Tax Changes," 2023. 2. 14., <https://www.mof.gov.sg/singaporebudget/budget-2023/budget-statement>, 검색일자: 2023. 3. 17.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규 및 수입 증고차 및 화물 겸용 차량에 적용될 예정임

- COE(Certificates of Entitlement)에 입찰할 필요가 없는 택시, 클래식 자동차 등의 경우 2023년 2월 15일 이후에 등록된 차량부터 개정된 세율구간이 적용될 예정임

● 고가 주거 및 비거주부동산에 대한 구매자 인지세(Buyer's Stamp Duty)를 인상함⁶⁷⁾

- 개정된 세율은 2023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한 모든 부동산에 적용될 예정임

<자료수집 및 정리: 정효림 세무사>

들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어떠한 큰 변동도 없을 것이라는 선거공약을 거듭 강조한 바 있음

● 본 제안은 연금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변경하지 않으며, 연금 수급자의 99.5%가 이와 관련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밝힘

- 현재 호주의 퇴직연금 세금 감면액의 39%가 소득 상위 10%에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300만호주달러 이상의 연금잔액에 대한 세율을 15%에서 30%로 인상할 계획이며, 본 세율이 승인되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자료수집 및 조사: 박하얀 연구원>



호주

[거액 연금잔액 보유자에 대한 세금 인상 발표]

■ 호주 총리는 2023년 2월 28일 300만호주달러⁶⁸⁾ 이상의 연금잔액 보유자에 대해 세금 인상을 발표함⁶⁹⁾

● 최근 예산 부담으로 인해 정부가 퇴직금 계좌 보유자들의 세금 감면 혜택을 일부 축소할 것이라는 추측이 존재해 왔음

- 2023년 2월 22일 정부 관계자들이 연금 관련 중대한 개정이 진행 중임을 시사하였으나, 당시 총리는 퇴직연금에 대해 일반인



뉴질랜드

[2022-23 조세법안 변경사항 의회 제출]

■ 뉴질랜드 재정지출위원회는 2023년 3월 1일 변경사항이 다수 반영된 2022-23 조세법안을 의회에 제출함⁷⁰⁾

● 2022-23 조세법안은 2022년 8월 도입되었으며, 이번 변경 법안에 반영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67) A Singapore Government Agency Web site, "Tax Changes," 2023. 2. 14., <https://www.mof.gov.sg/singaporebudget/budget-2023/budget-statement>, 검색일자: 2023. 3. 17.

68) 2023년 3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6억 610만원임

69) William Hoke, "Australian PM Proposes Tax Hike On Large Superannuation Balances," *Tax Notes International*, vol. 109, no. 10, 2023.

70) IBFD, "New Zealand - Finance and Expenditure Committee Reports Back to Parliament on Tax Bill with Numerous Changes," 2023. 3. 6.,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3-03-06_nz_1, 검색일자: 2023. 3. 20.

■ 디지털 플랫폼 관련 OECD가 제안한 모델 규칙의 이행에 대한 일부 규칙의 구현을 연기하거나 세부 사항을 추가함

- OECD 모델 규칙 중 파트 2 디지털 플랫폼의 보고 규칙(국제 거래 이행체계 및 상품 판매에 대한 선택적 모듈)은 법안 제정 3년 후 의회 명령에 의해 발효될 예정임
 - 해당 규칙은 공유 경제 플랫폼 운영자의 판매자 관련 보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플랫폼 운영자에게 상당한 비용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됨
 - 법안 제정 후 발효 전까지 플랫폼 운영자와 협력하여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예정임
- 뉴질랜드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4분기 판매자 정보 보고기한을 1월 31일에서 2월 7일로 연장함
- 외화 금액 추정 및 변환과 관련한 준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OECD가 규정하는 대상 판매자 제외 한도액인 2,000유로를 뉴질랜드달러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플랫폼 운영자의 보고 요건 불충분 행위와 관련하여 지속성 여부와 관계없이 심각하거나 합당하지 않은 위반에 대해서만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국경 이동 근로자(cross-border employee)와 관련한 과세 규정이 일부 변경됨

- 복리후생 관련 세금과 고용주 연금 기여금에 대해 뉴질랜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주에게 일차적인 책임을 부여하나, 직원이 이러한 의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로 제공함
 - 이때 고용주는 고용세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세금 준수 의무에 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됨
- 국경 이동 근로자의 국외 연금 기여금의 과세에 대해 고용주가 복리후생 과세 방식이나 원천징수에 따른 과세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복리후생 혜택을 직원의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을 허용함
- 기존의 비거주 계약자 세금(Non-Resident Contractors Tax, NRCT)의 보고 요건 및 관련 개정안 조항을 제거하여 해당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협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이 밖에도 국경 이동 근로자의 고용주에게 납세의무 준수를 위해 주어지는 60일간의 유예기간이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됨

■ 디지털 플랫폼 관련 내용을 비롯하여, GST 과세 관련 변경 및 추가된 조항들이 존재함

- 온라인 마켓을 통해 12개월 동안 50만뉴질랜드달러⁷¹⁾ 이상의 서비스를 판매하는 공급업체는 마켓 운영자의 신고의무와 관계없이 GST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음
 - 숙박업체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 마켓에서 연간 각 2,000백 이상의

71) 2023년 3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억 454만원임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서비스 제공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숙박업체가 그룹으로 존재하는 경우 그룹 수준에서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GST 등록자가 과세 상품 판매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세후 1만뉴질랜드달러⁷²⁾ 이하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 전액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자료수집 및 조사: 박하얀 연구원>

는 것이 아니라 관할국의 실무에 기초한 다양한 접근법을 제안함⁷⁴⁾

- 다자간 상호합의 절차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다루는 기초, 다자간 절차에서 고려해야 할 절차적 측면, 다자간 절차의 예시, 전형적인 다자간 절차의 이상적 기한의 주제를 다룸

<자료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OECD

[다자간 상호합의 절차 및 APA 지침 발간]

■ OECD는 2023년 2월 1일, ‘다자간 상호합의 절차 (Multilateral Mutual Agreement Procedures)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Advance Pricing Arrangements: APA) 지침’을 발간함⁷³⁾

- OECD 조세행정포럼은 조세 확실성 작업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지침을 발간하였으며, BEPS 포괄적 이행체계(IF) 및 조세행정포럼의 모든 회원국이 승인함
- 지침은 법적·절차적 관점 모두를 다루며 과세 관청 및 납세자에게 절차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련의 구속력 있는 규칙을 제공하

72) 2023년 4월 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76만원임

73) OECD, “Manual on the Handling of Multilateral Mutual Agreement Procedures and Advance Pricing Arrangements,” <https://www.oecd.org/tax/dispute/manual-on-the-handling-of-multilateral-mutual-agreement-procedures-and-advance-pricing-arrangements-f0cad7f3-en.htm>, 검색일자: 2023. 3. 9.

74) EY, “OECD publishes Manual on Handling of Multilateral Mutual Agreement Procedures and Advance Pricing Arrangements,” 2023. 2. 23., https://www.ey.com/en_gl/tax-alerts/oecd-publishes-manual-on-handling-of-multilateral-mutual-agreement-procedures-and-advance-pricing-arrangements, 검색일자: 2023. 3. 9.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집행위원회, 러시아 10차 제재 패키지 발표 (2023. 2. 25.)^{1), 2)}

-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되는 지난 2월 24일에 러시아 10차 제재 패키지를 발표
- (주요 내용) 114억유로 규모의 추가 수출 금지와 무역 및 금융제재 등을 포함
 - 자산동결 대상자 명단에 87명의 개인과 34개의 단체를 추가하고, 금융 제재 대상에 3개의 러시아은행을 추가
 - 러시아의 군사 능력 및 기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 수출 금지
 - 그 외 동결자산에 대한 보고 의무, EU-러시아 간 개인항공편 사전 통보 의무, 러시아 영토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민·군 겸용 물품 및 총기 운송 금지 등

■ EU 통계청, 2022년 4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2023. 3. 8.)³⁾

- (전체) 2022년 4분기 유로지역 20개국과 EU 27개국의 전 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각각 0.0%, -0.1%로 집계되어 3분기 성장률(두 지역 모두 0.4%)보다 하락(<표 1> 참조)
 -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유로지역 1.9%, EU 1.7%를 기록해 두 지역 모두 3분기 성장률(각각 2.5%, 2.6%)보다 하락
 - 2022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유로지역과 EU 모두 3.5%를 기록해, 2021년 경제성장률(각각 5.3%, 5.4%)보다 하락
- (국가별) 전 분기 대비 그리스(1.4%), 몰타(1.2%), 사이프러스(1.1%) 순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폴란드(-2.4%), 에스토니아(-1.6%), 핀란드(-0.6%) 순으로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임
-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코로나19 발병 이전인 2019년 4분기와 비교해 유로지역과 EU 27개국의 GDP는 각각 2.4%와 2.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EU 집행위원회, 2024 재정정책 지침 발표(2023. 3. 8.)⁴⁾

- EU 회원국에 내년도 재정정책 수행 및 조정에 대한 예비적 재정정책 지침을 제시했으며, ‘중기 부채 지속가능성 및 포용적 성장 촉진’이

1) EU 집행위원회, “EU agrees 10th package of sanctions against Russia,” 2023. 2. 25.,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1185, 검색일자: 2023. 2. 28.

2) 지난 1~9차 제재 패키지를 통해 개인 1,386명 및 171개 단체에 대한 자산을 동결하고, 325억유로 규모의 수출을 금지.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2022를 참고

3) EU 통계청, “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e fourth quarter of 2022,” 2023. 3. 8.,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6249744/2-08032023-AP-EN.pdf/30b3811c-f085-b7aa-c533-4733b1457ab9>, 검색일자: 2023. 3. 13.

4) EU 집행위원회, “Fiscal policy guidance for 2024: Promoting debt sustainability and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2023. 3. 8.,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1410, 검색일자: 2023. 3. 13.; _____, “Communication on fiscal policy guidance for 2024,” 2023. 3. 8.,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system/files/2023-03/COM_2023_141_1_EN_ACT_part1_v4.pdf, 검색일자: 2023. 3. 16.

〈표 1〉 유로지역 및 EU 27개국의 2022년 4분기 경제성장률(계절조정)

(단위: %)

| 국가 | 전 분기 대비 | | | | 전년 동기 대비 | | | |
|-----------|---------|------|------|------|----------|------|------|------|
| | 2022 | | | | 2022 | | | |
| | Q1 | Q2 | Q3 | Q4 | Q1 | Q2 | Q3 | Q4 |
| 벨기에 | 0.6 | 0.5 | 0.2 | 0.1 | 5.3 | 4.1 | 1.9 | 1.4 |
| 독일 | 0.8 | 0.1 | 0.5 | -0.4 | 4.7 | 3.5 | 1.5 | 0.2 |
| 에스토니아 | -0.4 | -1.2 | -1.3 | -1.6 | 3.3 | -0.6 | -2.4 | -4.4 |
| 아일랜드 | 7.2 | 2.3 | 2.8 | 0.3 | 11.9 | 12.3 | 11.3 | 13.1 |
| 그리스 | 2.2 | 1.1 | 0.4 | 1.4 | 7.5 | 7.3 | 4.4 | 5.2 |
| 스페인 | 0.0 | 2.2 | 0.2 | 0.2 | 6.9 | 7.8 | 4.8 | 2.7 |
| 프랑스 | -0.2 | 0.5 | 0.2 | 0.1 | 4.8 | 4.2 | 1.0 | 0.5 |
| 크로아티아 | 2.4 | 1.3 | -0.5 | 0.9 | 7.5 | 8.4 | 5.4 | 4.2 |
| 이탈리아 | 0.1 | 1.0 | 0.4 | -0.1 | 6.5 | 5.1 | 2.5 | 1.4 |
| 사이프러스 | 1.9 | -0.2 | 1.6 | 1.1 | 6.7 | 6.1 | 5.3 | 4.5 |
| 라트비아 | 1.9 | -0.3 | -1.0 | 0.0 | 5.0 | 2.4 | 0.3 | 0.5 |
| 리투아니아 | 0.2 | -0.7 | 0.7 | -0.5 | 4.5 | 2.2 | 1.4 | -0.4 |
| 룩셈부르크 | 0.7 | -0.5 | 1.1 | N/A | 2.8 | 1.7 | 3.0 | N/A |
| 몰타 | 1.0 | 1.1 | 1.4 | 1.2 | 8.2 | 9.4 | 5.3 | 4.7 |
| 네덜란드 | 0.4 | 2.5 | -0.2 | 0.6 | 6.6 | 5.1 | 3.1 | 3.4 |
| 오스트리아 | 0.8 | 2.1 | 0.1 | 0.0 | 8.6 | 6.5 | 2.2 | 3.0 |
| 포르투갈 | 2.3 | 0.2 | 0.3 | 0.3 | 11.9 | 7.4 | 4.8 | 3.2 |
| 슬로베니아 | 1.0 | 0.8 | -1.3 | 0.8 | 9.6 | 8.3 | 3.9 | 1.3 |
| 슬로바키아 | 0.3 | 0.3 | 0.3 | 0.3 | 2.9 | 1.3 | 1.3 | 1.2 |
| 핀란드 | 0.2 | 0.6 | -0.1 | -0.6 | 3.7 | 2.8 | 1.6 | 0.0 |
| 유로지역 20개국 | 0.6 | 0.9 | 0.4 | 0.0 | 5.5 | 4.4 | 2.5 | 1.9 |
| 불가리아 | 0.4 | 0.7 | 0.6 | 0.6 | 5.1 | 4.6 | 3.2 | 2.3 |
| 체코 | 0.6 | 0.3 | -0.3 | -0.4 | 4.7 | 3.5 | 1.5 | 0.2 |
| 덴마크 | -0.7 | 1.3 | 0.0 | 0.9 | 5.1 | 4.4 | 3.7 | 1.5 |
| 헝가리 | 1.4 | 0.6 | -0.7 | -0.4 | 7.9 | 6.1 | 3.7 | 0.8 |
| 폴란드 | 4.3 | -2.3 | 1.0 | -2.4 | 10.5 | 5.6 | 4.5 | 0.4 |
| 루마니아 | 1.3 | 1.2 | 1.2 | 1.0 | 4.6 | 4.0 | 4.4 | 4.9 |
| 스웨덴 | -0.2 | 0.2 | 0.3 | -0.5 | 4.6 | 4.0 | 2.5 | -0.1 |
| EU 27개국 | 0.7 | 0.7 | 0.4 | -0.1 | 5.7 | 4.4 | 2.6 | 1.7 |

주: 1. 이 표의 경제성장률은 일반적으로 계절 조정 및 달력효과 조정된 자료에 기초

2. 네덜란드와 핀란드의 전년 동기 대비 퍼센트 변화는 달력효과 조정 자료로 계산

출처: EU 통계청, 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e fourth quarter of 2022, 2023. 3. 8.

주요 골자

- (경제 거버넌스 검토) 경제 거버넌스 체계⁵⁾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안정 성장협약 면책조항⁶⁾이 2023년 말에 종료되고 국가별 재정정책 권고가 재개될 예정
 - (에너지 위기 대응) 에너지 지원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에너지 공급을 다양화하기 위한 개혁 및 투자를 적시에 이행하기 위해 노력
 - (EDP 시행) 초과적자 시정조치(EDP)⁷⁾의 한시적 유보는 2024년 봄에 재검토 후 종료 예정
 - (향후 계획) 회원국들은 예비적 재정정책 지침을 반영하여 안정화 및 수렴 프로그램⁸⁾을 준비하고, 봄 패키지(5월)에서 국가별로 차별화된 재정권고안(CSR)이 발표될 예정
- EU 이사회, 경제 거버넌스 체계 개혁 방향 합의 (2023. 3. 14.)⁹⁾
- (배경) EU의 경제 거버넌스 체계는 국가 경제 약화 또는 국가 간 파급효과를 통한 경제적 불균형을 감지 및 모니터링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높은 부채 수준과 새로운 투자 과제에 직

면함에 따라 2020년 2월 경제 거버넌스 체계 개혁을 위한 공개 토론을 시작

- (주요내용) 국가 중기재정구조계획 도입, 단일 운용 재정지표, 국가 책임감(ownership) 강화 등 새로운 경제 거버넌스 체계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재정수지준칙(GDP 대비 3% 한도)과 채무준칙(GDP 대비 60% 한도)의 기준값을 유지
 - 모든 회원국은 재정정책, 개혁 및 투자에 대한 통합 목표를 반영한 국가별 4개년 중기재정구조계획(national medium-term fiscal-structural plans)을 제출해야 함
 - 현재의 안정성장프로그램과 국가개혁프로그램이 통합되어 국가별 중기재정구조계획으로 운용
 - 순기초지출(net primary expenditure)¹⁰⁾을 단일 운용지표로 활용하여 국가 재정 경로를 설정
 - 중기재정구조계획은 공통의 방법론(common methodology)에 기반하여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개혁 및 공공투자

5) EU의 경제 거버넌스 체계는 안정성장협약(SGP), European Semester, 국가재정체계 요건, 거시경제 불균형절차(MIP), 거시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경제 안정,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 증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 도움

6) 일반면책조항(general escape clause)은 특수한 상황에서 재정준칙 준수 의무로부터 예외적인 이탈을 용인하는 EU 규정임. 2020년 3월 23일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유로지역 혹은 EU 전체의 심각한 경제 침체 상황'이라고 보아 EU 재정프레임워크의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중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EU 재정준칙 준수 의무의 일시적인 중단에 합의

7) 초과적자 시정조치(Excessive Deficit Procedure)는 안정성장협약의 교정적 조치(corrective arm)로 재정수지 기준(GDP 대비 3%) 또는 채무 기준(GDP 대비 60%)을 위반한 국가에 적용함. 집행위에서 위반 사항 평가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사회는 이를 기초로 기준 위반 여부를 결정하며, 위반 시 권고와 함께 시정기한을 부과하는 순서로 진행됨. 부과한 기한 내에 초과적자를 시정해야 하며, 권고를 불이행했다고 판단될 경우 금전적 제재 등의 조치를 발동함

8) 매년 4월 EU 회원국은 향후 3년 동안의 재정 계획을 EU 집행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유로 국가들은 안정화 프로그램(Stability programme), 비유로 국가들은 수렴 프로그램(Convergence programme)에서 재정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함

9) EU 이사회, "Economic governance framework: Council agrees its orientations for a reform," 2023. 3. 14.,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3/03/14/economic-governance-framework-council-agrees-its-orientations-for-a-reform/>, 검색일자: 2023. 3. 16.

10) 순기초지출 = 총지출 - 이자지출 - 주기적 실업수당 - 일회성지출 - 팬데믹 관련 긴급조치

- 를 촉진하는 한편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향후 10년에 대한 재정경로를 설정
- 중기재정구조계획은 집행위의 투명한 평가를 기반으로 다자간 맥락에서 논의 후 이사회에서 승인되며, 중기재정구조계획의 기간은 회원국이 적격한 개혁 및 투자를 약속하는 경우 연장될 수 있음
- GDP 대비 3%의 재정적자 기준 위반에 따른 초과적자 시정조치(EDP)는 유지되며, 국가별 면책조항을 통하여 재정조정 경로에서 일시적 이탈을 허용
- 거시경제 불균형절차(MIP)¹¹⁾는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불균형을 조기에 감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예방적 역할이 강화될 필요

■ EU 재무장관회의, 2024년 EU 예산편성 지침 채택(2023. 3. 14.)¹²⁾

- 이사회는 2024년 예산이 EU가 합의한 장기 목표와 정치적 우선순위를 발전시키고 이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우크라이나와의 지속적인 연대를 보여주고 관련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지침 내용) 모든 EU 기관들은 예산편성과 집행 시 2021~2027년 다년도 재정 체계와 관련 재정 규정들의 예산 원칙¹³⁾을 준수해야 하며,

대체로 작년 예산편성지침 내용과 유사¹⁴⁾

- ① 실제 필요에 따라 현실적이고 건전한 예산편성을 보장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년도 재정 체계 한도 내에 충분한 여유를 두어야 함
- ② EU 프로그램의 이행을 보장하고 현재 및 지난 다년도 재정 체계에 따라 이뤄진 약속이 적시에 지불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을 제공해야 함
- ③ EU 모든 수준에서 예산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필요한 지출항목의 경우에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④ 모든 EU 기관이 직원 수를 안정화하고 행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포괄적이고 표적화된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함
- ⑤ 회원국의 EU 예산 기여분과 EU 예산의 회원국으로의 지급분에 관해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것을 강조
- ⑥ 경제회복기금의 자금 조달 비용에 대한 투명성과 채무 및 기타 모든 부채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
- ⑦ 회원국 국회와 이사회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기 위해 2024년 예산 초안을 늦어도 22주(5월 말)까지 제출할 것을 권장

11) 경고체계보고서(Alert Mechanism Report)를 통해 1차 검토를 수행 후 → 심층검토(in-depth review)가 필요한 대상 국가를 선별하며 → 불균형이 심한 국가를 대상으로 초과불균형절차(excessive imbalance procedure, EIP)를 시행할 수 있음. 초과불균형절차가 시행되면 대상 회원국은 수정된 재정구조계획을 제시해야 함

12) EU 이사회, “Budget 2024: Council agrees on its guidelines for the establishment of next year’s EU budget,” 2023. 3. 14.,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3/03/14/budget-2024-council-agrees-its-guidelines-for-the-establishment-of-next-year-s-eu-budget/>, 검색일자: 2023. 3. 16.

13) 예산단일의 원칙(unity), 단년도 예산주의(annuality), 건전 재정의 원칙(sound financial management), 투명성(transparency) 준수의 원칙 등

14) 2023년 EU 예산편성지침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22를 참고 바람

■ EU 집행위원회, 전력시장 개혁안 초안 발표 (2023. 3. 14.)¹⁵⁾

- (배경) 러시아 가스공급 중단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급등이 EU의 가계 및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으며, 재생 에너지 보급 촉진, 소비자 보호,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전력시장 개편을 추진
- (주요 내용) 고정가격, 장기계약을 확대하여 가격 변동성을 낮추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
 - 소비자가 가격 변동성을 피해 장기적인 고정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고, 계약 전 광범위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취약 가구 보호를 강화
 - 에너지 비용의 예측성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구매계약(PPA)¹⁶⁾ 같은 장기계약을 장려하고, 재생 에너지 및 비화석연료 발전에 대한 양방향 차액결제거래(CfD)¹⁷⁾를 확대하여 회원국이 차액(초과수익)을 소비자에게 보전하도록 함
 - 에너지 시장의 무결성과 투명성을 모니터링하는 에너지규제위원회(ACER)의 권한 강화

■ 유럽중앙은행(ECB), 정책금리 0.5%p 인상

(2023. 3. 16.)¹⁸⁾

- ECB 정책위원회는 3월에 개최된 통화정책회의에서 0.5%p 추가 금리 인상을 발표했으며, 이에 3월 22일부터 기준금리, 한계대출금리, 수신금리를 각각 3.5%, 3.75%, 3.0%로 인상
- 자산매입프로그램(Asset purchase programme)¹⁹⁾의 규모는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월평균 150억유로 규모씩 축소하고, 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pandemic emergency purchase programme)의 만기채권 원금은 2024년 말까지 재투자할 계획



IMF

■ IMF 집행위원회, 자금대출에 대한 연간 및 누적 한도 임시 확대(2023. 3. 6.)²⁰⁾

- IMF 집행위원회는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회원국 지원을 위해 일반재원계정(GRA, General Resources Account)의 연간 및 누적 한도를 한시적으로 늘리는 것에 동의
 - IMF 대출 프로그램은 GRA의 연간 및 누적

15) EU 집행위원회, "Commission proposes reform of the EU electricity market design to boost renewables, better protect consumers and enhance industrial competitiveness," 2023. 3. 14.,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1591, 검색일자: 2023. 3. 16.

16) PPA(Power Purchase Agreement)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전기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당사자 간 계약방식(출처: 산업통상자원부)

17) CfD(two-way Contracts for Difference)는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고 시장가격이 합의된 고정가격보다 높을 경우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

18) 유럽중앙은행, "Monetary policy decisions," 2023. 3. 16.,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3/html/ecb.mp230316~ad5249f30.en.html>, 검색일자: 2023. 3. 22.

19) 금융시장에서 자산을 매입하여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는 양적완화 정책

20) IMF, IMF Executive Board Makes Temporary Modifications to the Annual and Cumulative Access Limits for Fund Lending, 2023. 3. 6.,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03/07/imf-executive-board-modifications-to-the-annual-and-cumulative-access-limits-fund-lending>, 검색일자: 2023. 3. 15.

한도의 적용을 받으며 이번 승인으로 향후 12개월간 GRA의 연간한도는 쿼타의 145→200%, 누적한도는 쿼타의 435→600%로 증가

-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상황과 불확실성 아래 회원국들의 긴급한 자금 조달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도 인상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12개월 이후까지 임시승인이 연장될 수 있음

불보증)로 부채 탕감에 대한 사전보증을 허용하는 것이며,

- 두 번째는 공식 양자 채권자/기부자의 상환능력보증(capacity to repay assurances)을 기존 긴급자금 조달에서 UCT협정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회원국의 국제수지 문제를 해결하고 기금 대출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함

■ IMF 집행위원회, 기금재정보증정책에 대한 변경 승인(2023. 3. 17.)²¹⁾

-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난 충격 및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상위 크레딧 트란셰(Upper Credit Tranche, UCT)²²⁾ 협정의 승인이 가능하도록 기금재정보증정책을 변경
 - 기존에는 특별융자제도인 신속지원금융(Rapid Credit Facility, RCF) 및 신속금융제도(Rapid financing Instrument, RFI)를 통해 지원하였으나 기금재정보증정책의 변경 승인으로 일반융자제도인 UCT협정을 통한 지원이 가능해짐
 - 첫 번째 변경사항은 조건부 2단계 요소(초기보증과 불확실성 완화 시 제공하는 선

■ IMF, 우크라이나와 156억달러 규모의 확장신용제도에 대한 직원 수준 합의(2023. 3. 21.)²³⁾

- IMF는 우크라이나 당국과 새로운 48개월 확장신용제도(Extended Fund Facility, EFF) 약정과 이에 수반되는 거시경제 및 금융 정책에 대해 직원 수준의 합의에 도달²⁴⁾
 - 쿼타의 577%인 116억SDR(약 156억달러) 규모의 EFF 약정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재정, 가격 및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점진적인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1단계에서는 12~18개월 동안 PMB(Program Monitoring with Board Involvement)를 기반으로 ① 세입 강화, ② 통화

21)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Changes to the Fund's Financing Assurances Policy in the Context of Fund Upper Credit Tranche Financing Under Exceptionally High Uncertainty, 2023. 3. 17.,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03/17/pr2378-imf-executive-board-concludes-changes-to-the-funds-financing-assurances-policy>, 검색일자: 2023. 3. 22.

22) IMF 회원국은 단기적인 국제수지 문제 발생 시 회원국의 대출 자금을 단계적으로 풀어주는 시스템인 크레딧 트란셰(Credit Tranche)를 통해 신용을 인출할 수 있음. 쿼타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인출을 통상적으로 상위 크레딧 트란셰(Upper Credit Tranche, UCT)라고 지칭하며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 기간·일정 조건 아래 추가적인 협의 절차 없이 인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합의한 제도

23) IMF and Ukrainian Authorities Reach Staff Level Agreement on a US\$15.6 Billion Extended Fund Facility(EFF) Arrangement, 2023. 3. 21.,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03/21/pr2388-ukraine-imf-and-authorities-reach-staff-level-agreement-eff-arrangement>, 검색일자: 2023. 3. 24.

24) 회원국과 IMF 직원 수준의 합의(staff level agreement) 이후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함

자금 조달, ③ 은행 부문의 건전성 평가를 통해 장기 금융 안정성을 높이고 법률개정, 거버넌스 및 반부패 프레임워크 강화를 위해 개혁을 실시

- 2단계에서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목표를 포함해 거시경제 안정화, 공공재정 관리 강화 및 공공투자 관리개혁 도입, 회복 및 조기재건 지원으로 환율 및 물가 목표를 달성하고 전쟁 이전 정책 프레임워크로 회복 예상(2023년 실질 GDP 성장률은 -3~1% 사이로 예측)



OECD

■ OECD, 2023년 중간경제전망보고서²⁵⁾ 발표 (2023. 3. 17.)²⁶⁾

- (현황)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연초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3.2%로 나타남
- (전망) 2023년에는 기업 및 소비자 심리가 개선되기 시작하고, 식량 및 에너지 가격 하락, 중국의 완전한 재개방(reopening)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추세 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
 - 2023년과 2024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2.6%와 2.9%로 추세 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긴축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물가) 물가상승률은 하락하고 있지만, 서비스 가격 인상, 금융시장 부문 불안, 타이트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근원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물가상승률은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2024년 하반기까지 중앙은행의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 (위험) 세계경제는 여전히 취약(fragile)하며 상·하방 위험 간의 균형은 다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하방위험이 우세

-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식량안보 및 긴축적인 통화정책의 파급력을 가늠하기는 어려우며, 높은 부채와 가파른 금리 인상, 금융기관 불안, 급격한 주택가격 하락 등의 위험 요인이 큼

- 국제 가격 상승 압력도 다시 높아져 에너지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 (정책권고) 통화긴축, 취약계층을 선별한 재정정책, 구조적 개혁 노력,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을 권고

- (통화정책) 물가압력 완화 신호가 뚜렷해질 때까지 긴축 기조를 지속할 것을 권고하며, 미국과 유로 지역 등 대다수 국가에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

- (재정정책) 높은 에너지 및 식량 가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재정정책 권고

25) 중간경제전망은 매년 2회(3월, 9월) 발표하며, 대상국은 세계경제와 G20 국가

26) OECD, "Economic outlook: slightly more optimistic but fragile," March 2023, <https://www.oecd.org/economic-outlook/march-2023/>, 검색일자: 2023. 3. 20.

<표 2>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p)

| 구분 | 2022 | 2023 | | 2024 | |
|-------------------|------|------------|--------------|------------|--------------|
| | | 중간경제 전망 | 11월 전망 대비 | 중간경제 전망 | 11월 전망 대비 |
| 세계 | 3.2 | 2.6 | 0.4 | 2.9 | 0.2 |
| G20 ¹⁾ | 3.1 | 2.6 | 0.4 | 2.9 | 0.2 |
| 호주 | 3.6 | 1.8 | -0.1 | 1.5 | -0.1 |
| 캐나다 | 3.4 | 1.1 | 0.1 | 1.4 | 0.1 |
| 유로 지역 | 3.5 | 0.8 | 0.3 | 1.5 | 0.1 |
| 독일 | 1.9 | 0.3 | 0.6 | 1.7 | 0.2 |
| 프랑스 | 2.6 | 0.7 | 0.1 | 1.3 | 0.1 |
| 이탈리아 | 3.8 | 0.6 | 0.4 | 1.0 | 0 |
| 스페인 | 5.5 | 1.7 | 0.4 | 1.7 | 0 |
| 일본 | 1.0 | 1.4 | -0.4 | 1.1 | 0.2 |
| 한국 | 2.6 | 1.6 | -0.2 | 2.3 | 0.4 |
| 멕시코 | 3.0 | 1.8 | 0.2 | 2.1 | 0 |
| 튀르키예 | 5.6 | 2.8 | -0.2 | 3.8 | 0.4 |
| 영국 | 4.0 | -0.2 | 0.2 | 0.9 | 0.7 |
| 미국 | 2.1 | 1.5 | 1.0 | 0.9 | -0.1 |
| 아르헨티나 | 5.6 | 0.1 | -0.4 | 1.8 | 0 |
| 브라질 | 3.0 | 1.0 | -0.2 | 1.1 | -0.3 |
| 중국 | 3.0 | 5.3 | 0.7 | 4.9 | 0.8 |
| 인도 ²⁾ | 6.9 | 5.9 | 0.2 | 7.1 | 0.2 |
| 인도네시아 | 5.3 | 4.7 | 0 | 5.1 | 0 |
| 러시아 | -2.1 | -2.5 | 3.1 | -0.5 | -0.3 |
| 사우디 아라비아 | 8.7 | 2.6 | -2.4 | 3.7 | 0.2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2.0 | 0.6 | -0.5 | 0.9 | -0.7 |

주: 1) 유럽연합은 G20의 회원국이지만, G20 집계에는 자체적으로도 회원국인 국가만 포함됨

2) 회계연도는 4월부터 시작

출처: OECD, "OECD Economic Outlook A Fragile Recovery," MARCH 2023, p. 4, Table 1.

- 점진적으로 보편 지원을 축소하고 선별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며, 고물가 시기에 추가적인 부양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구조개혁) 생산성 향상과 공급계약 완화를 위해 기업 역동성 제고, 교역장벽 완화 및 인적교류 활성화, 유연하고 포용적인 노동시장 조성 등 구조적 개혁 노력 재개를 권고
- (국제협력) 에너지 및 식량위기 극복, 저소득 국가의 부채 상환 지원,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배출 제로 등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 필요



미국

[예산·결산 등]

- 미국 재무부 재정관리국(Bureau of the Fiscal Service), 2022회계연도²⁷⁾ 발생주의 결산보고서²⁸⁾ 발표(2023. 2. 16.)²⁹⁾
 - (연방 비용: 발생주의) 2022회계연도 연방정부 총비용(gross cost)은 7조 4,200억달러로, 전년 대비 13.4% 증가
 - 2022회계연도 순비용³⁰⁾(net cost)은 전년 대

27) 2021년 10월 ~ 2022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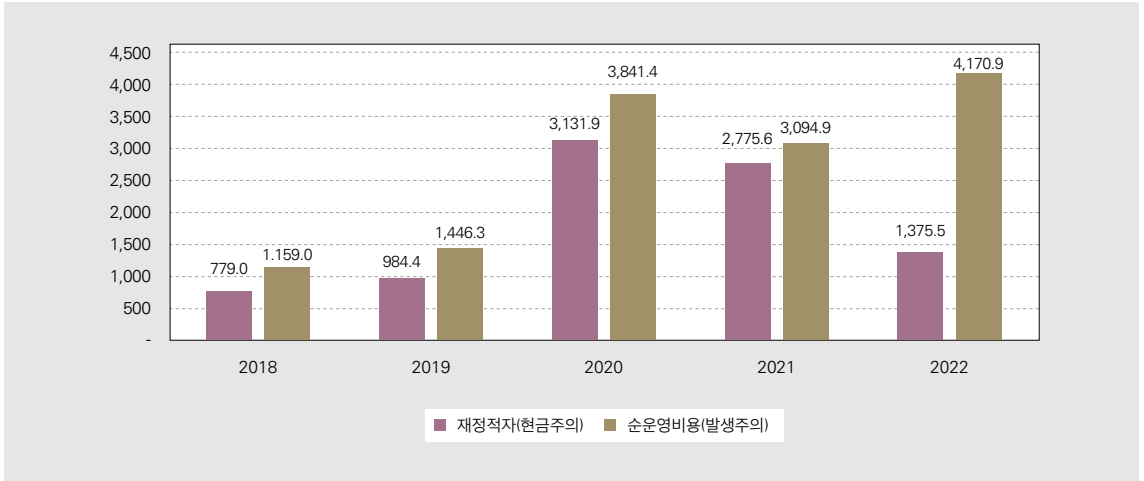
28) FY2022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29) 미 재무부, "FY2022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2023. 2. 16., <https://fiscal.treasury.gov/reports-statements/financial-report/current-report.html>, 검색일자: 2023. 3. 6.

30) 총비용(gross cost)에서 재화와 용역으로 인한 수입(earned revenues)(예: 메디케어 부담금(Medicare premiums), 국립공원 입장료(national park entry fees), 우정국 서비스 비용(postal service fees) 등으로 인한 수입을 차감하고, 손실 또는 이득(gains or losses)(예: 이자율, 물가인상 등)을 조정(adjust)한 결과값을 순비용(net cost)으로 정의함(출처: 미 재무부, FY2022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2023. 2. 16., p. 19, Table 3.)

[그림 1] 미국 재정적자(현금주의)와 순운영비용(발생주의) 추이

(단위: 십억달러)



출처: U.S. Treasury, FY2022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2023. 2. 16., p. 17, Chart 1.

- 비 23.8%(1.75조달러) 증가한 9조 968억달러
- (재정수지: 현금주의) 2022회계연도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50.4%(1.4조달러) 감소한 1조 3,755억달러
- (자산) 2022회계연도 연방정부 소유 자산(2022. 9. 30. 기준)은 전년 대비 1.4%(688억달러) 증가한 4조 9,624억달러
- (부채) 2022회계연도 부채는 전년 대비 12.2%(4조 2,446억달러) 증가한 39조 223억달러

■ OMB, 2024회계연도³¹⁾ 대통령 예산안 발표(2023. 3. 9.)^{32), 33), 34)}

- (예산목표 및 주요정책) 크게 6개의 파트로 구분한 주요 정책은 아래와 같음
 - (가계비용 절감) 자녀가 있는 가구의 세금 감면, 적정가격 및 양질의 보건 서비스 확대 등
 - 미국 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2021년 3월 11일 입법)에서 한시적으로 확대되었던 아동수당(Child Tax Credit, CTC) 재확대
 - 향후 10년간 1,500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메디케이드를 통한 자택 및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보건 서비스 개선
 - (메디케어 및 사회보장제도 보호 및 강화) 고소

31) 2023년 10월 ~ 2024년 9월

32) 백악관, "FACT SHEET: The President's Budget for Fiscal Year 2024," <https://www.whitehouse.gov/omb/briefing-room/2023/03/09/fact-sheet-the-presidents-budget-for-fiscal-year-2024/>, 검색일자: 2023. 3. 27.33) 백악관, "FACT SHEET: The President's Budget Cuts the Deficit by Nearly \$3 Trillion Over 10 Years," 2023. 3. 9.,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3/09/fact-sheet-the-presidents-budget-cuts-the-deficit-by-nearly-3-trillion-over-10-years/>, 검색일자: 2023. 3. 27.

3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재정지출분석센터), 「주요국 예산안 - 미국 FY2024 대통령 예산안」, 2023. 3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

- 특층을 대상으로 수입 개선방안 마련 계획 등
- 메디케어의 경우 고소득층의 기여도를 높이고 메디케어 제도(medicare drug) 개혁을 통해 창출되는 수입을 기금에 적립하는 등 기금 수입 강화
- 사회보장 수입 개선을 위한 고소득층의 기여도를 높이고, 사회보장국의 인력 및 정보기술에 대한 예산 투자를 바탕으로 고객 서비스 개선
- (저소득층은 끌어올리고, 중산층은 키우는 경제) 미국 제조업에 투자하고, 근로자의 유급 의료휴가 및 가족휴가 지원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s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에 3억 7,500만달러를 배정하여 제조 관련 연구를 지원함과 동시에 신규 연구기관 발족
- 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12주 기간의 가족 및 유급 병가 도입
-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인프라 일자리 창출 및 지구 온난화 감축 등
- 전국적인 청정에너지 분야 인력 개발 및 지속가능한 인프라 프로젝트 계획(저소득 가구 주거지의 단열재 보강 등)
-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2005년 기준) 50~52% 감축 목표를 제시³⁵⁾하였으며, 이를 위해 환경보호국(EPA)에 6,440만달러를 배정하여 온실 효과 기체에 대한 단계적 중단 작업을 지속 지원하고, 에너지부(DOE)에 12억달러를 배정하여 탈탄소화 작업 등 진행
- (국제위협 대응 및 미국 안전) 국내 범죄 예방, 중국 대응 및 인도·태평양 지역 억지 전략 등
- 총기 폭력 및 기타 강력 범죄 대응을 위한 연방 법 집행 대응력 강화 예산으로 178억 달러 배정
- 미국의 유일한 경제·외교·군사·기술적 경쟁자인 중국에 대한 도전 과제 대응
- 20억달러 규모의 예산으로 국제적인 물적 기반시설 자금을 확보하고, 20억달러의 추가적인 자금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위협 세력 대응 강화
- (재정건전화) 향후 10년 동안 대형 법인(제약 회사, 오일 컴퍼니 등)에 대한 불필요한 지출 감축 및 고소득층의 세금 기여분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약 3조달러 규모의 재정 절감 목표
- 대형 법인(제약·오일 컴퍼니 등)에 대한 보조금 폐지
- 상위 0.01%의 고소득층(billionaires)을 대상으로 25%의 최저한세 적용
- 법인세율 21 → 28%로 인상
- (재정전망) 2024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는 전

35) 미 백악관, "President Biden's Budget Lowers Energy Costs, Combats the Climate Crisis, and Advances Environmental Justice," 2023. 3. 9., <https://www.whitehouse.gov/omb/briefing-room/2023/03/09/fact-sheet-president-bidens-budget-lowers-energy-costs-combats-the-climate-crisis-and-advances-environmental-justice/>, 2023. 3. 28.

년 대비 17.7% 증가한 1조 8,460억달러(GDP 대비 6.8%)로 전망

- (수입) 2024회계연도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4.9%(2,340억달러) 증가한 5조 360억달러(GDP 대비 18.5%)로 전망

- (지출) 2024회계연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8.0%(5,110억달러) 증가한 6조 8,830억달러(GDP 대비 25.3%)로 계획

- 2024회계연도의 총재량지출 예산권한³⁶⁾ (Budget Authority)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1조 6,955억달러(GDP 대비 7.0%)로 계획
- 2024회계연도의 의무지출(순이자지출 7,890억달러 제외)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4조 1,940억달러(GDP 대비 15.4%)로 전망

- (국가채무) 2024회계연도 연방채무(debt held by the public)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27조 7,830억달러를 기록할 전망(GDP 대비 수치도 증가)

[기타]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베이지북 발표 (2023. 3. 8.)^{37), 38)}

- (경제활동) 2023년 초 경제활동은 약간(slightly)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설문 응답자는 향후 몇 달간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답변

- 12개 지역 중 6개 지역은 지난 발표 이후 경제활동에 거의 변화가 없으며, 나머지 6개 지역은 완만한(modest)³⁹⁾ 속도로 성장

- 소비 지출은 전반적으로 안정화되었지만, 몇몇 지역에서는 소매판매가 보통(moderate) 내지 강하게 성장

- 제조업 활동은 위축기간을 지나 안정화되었으며, 공급망 교란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주택시장은 예외적으로 낮은 재고량과 함께 침체 상태가 유지됨

- 대출 수요는 감소하였으며, 신용 기준이 엄격해졌고 연체율은 소폭 상승(edged up)

- (노동시장) 노동시장 상황은 견고하게(solid) 유지되었으며, 전반적으로 타이트한(tight) 상태라고 보고

- 고용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완만에서 보통의(modest to moderate) 속도로 증가

- 노동 가용성(labor availability)은 약간 증가하였으나, 요구되는 기술이나 경험을 갖춘 구직자를 찾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36) base funding 기준

37) 베이지북은 12개 지역연방준비은행이 지역별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보고서로 연 8회, 통상 연방공개시장조작위원회 회의 2주 전 발표. 금번 보고서는 2023. 1. 9. ~ 2023. 2. 26. 동안의 데이터 반영

38) 미 연방준비제도, "The Beige Book," 2023. 3. 8.,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BeigeBook_20230308.pdf, 검색일자: 2023. 3. 13.

39) '보통의(moderate)'가 '완만한(modest)'보다 더 강한 수준을 의미함(출처: WSJ,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moderate' and 'modest' growth in the Fed's beige book? Which is better?," January 19, 2016, <https://www.wsj.com/articles/whats-the-difference-between-moderate-and-modest-growth-in-the-feds-beige-book-which-is-better-1453217728>, 검색일자: 2023. 1. 19.)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몇몇 지역에서는 이용 가능한 아동돌봄(child-care)이 부족하여 경제활동참가율 증가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
 - 임금은 전반적으로 보통의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설문 응답자는 임금 상승이 내년에 더 완화될 것으로 예상
 - (물가) 물가상승 압력이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가운데 많은 지역에서 물가상승이 완화되었다고 보고되었으며, 설문 응답자는 물가상승이 향후 한 해 동안 완화될 것으로 예상
 - 대부분의 지역에서 판매가는 보통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몇몇 지역에서는 증가세가 주춤해졌다고(deceleration) 보고
- 미국 재무부 포함 기관 합동,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은행 파산에 대한 대책 공동 발표(2023. 3. 12)⁴⁰⁾
- 공동성명서에서 최근의 은행 파산사태에 대해 옐런 재무부 장관은 모든 예금자들의 예금을 전액 보호하는(fully protect) 방식으로^{41), 42)}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절차를 진행할 방침임을 밝힘
 - 은행의 주주들과 일부 무담보 채권자들은 보호의 대상이 아님을 표명
 - 은행 파산과 관련한 손실을 납세자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밝힘
 - SVB(3. 10. 파산)에 이어 파산한 시그니처은행(3. 12. 파산)도 동일한 방식으로 파산 절차 진행
 -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Bank Term Funding Program, BTFP)을 신설하여 은행을 포함한 예금기관을 대상으로 유동성 공급 지원^{43), 44)}
 - 은행 등 예금기관을 대상으로 국공채 등 일정 담보를⁴⁵⁾ 제공하는 경우 시장가가 아닌 액면가(par value)를 기준으로⁴⁶⁾ OIS 금리(+10bp)를 적용하여 최대 1년간 대출 실행
 - 해당 프로그램의 신설로 국채 등 우량 담보에 대한 유동성이 추가로 공급되어, 은행이 우량 담보를 비상시에 빠르게 매각해야 하는 상황 방지
 - 해당 긴급 대출프로그램은 향후 1년간(2024.

40) 미 재무부·연방준비제도·예금보험공사, “Joint Statement by Treasury, Federal Reserve, and FDIC,” 2023. 3. 12.,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30312b.htm>, 검색일자: 2023. 3. 25.

41) 원칙적으로 미국 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보호되는 예금자 보호한도는 25만달러(출처: The Economist, “Central Banks Face an Excruciating Trade-off,” 2023. 3. 22.,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23/03/22/central-banks-face-an-excruciating-trade-off>, 검색일자: 2023. 3. 25.)

42) 연방예금보험공사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에 따라 경제나 금융안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상상황 시에는 강화된 예금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음(출처: 한국은행, 「Yellen 재무장관 미 은행협회 컨퍼런스 주요 발언 내용」, 2023. 3. 21., <http://www.bok.or.kr/portal/sing/office/view.do?nttId=10076203&menuNo=200798&pageIndex=1>, 검색일자: 2023. 3. 26.)

43) 미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Board announces it will make available additional funding to eligible depository institutions to help assure banks have the ability to meet the needs of all their depositors.” 2023. 3. 12.,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30312a.html>, 검색일자: 2023. 3. 25.

44) 미 연방준비제도, “Bank Term Funding Program.” 2023. 3. 12.,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files/monetary20230312a1.pdf>, 검색일자: 2023. 3. 25.

45) 자격이 되는 담보조건은 공개시장조작에서 연준이 매입할 수 있는 모든 담보증권들이 대상이 되며, 국채(U.S. Treasury), 지방채(Municipal securities), 정부 보증 주택저당증권(MBS: agency guaranteed) 등이 포함됨

46) 전통적으로 연준이 은행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할 때 시행하는 할인창구대출(discount window lending)의 경우 담보 평가 시 헤어컷(haircut)이 적용되어 담보물이 액면가보다 낮은 가치를 평가받음

3. 11.까지) 시행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 0.25%p 인상 (2023. 3. 22.)^{47), 48)}
 - 3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federal funds rate)를 4.5~4.75%에서 4.75~5%로 0.25%p 인상
 - (경제 동향) 소비와 생산에서 완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실업률은 낮고 물가상승률은 높은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음
 - (정책 가이드) 2%의 물가상승률로 회귀

하기 위해 추가적인 안정적 이자율 인상 (firming)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⁴⁹⁾

- 함께 발표된 연준의 경제전망 요약(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SEP)에 따르면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은 0.4%, 물가상승률은 3.3%, 올해 말 적정 기준금리는 5.1%로 전망⁵⁰⁾



일본

- 일본 재무성, 2022회계연도 3분기⁵¹⁾ 예산사용현

<표 3> 일본의 2022회계연도 3분기 예산사용현황 개요

(단위: 억엔, %)

| 일반회계 | | | | 특별회계 | | | |
|------------------------|----------------|------------------------------------|----------------|---------------------------|----------------|------------------------------------|----------------|
| 세입 | | 세출 | | 세입 | | 세출 | |
| 세입예산액(A) | 1,392,195 | 이번 년도 사용가능 금액 ¹⁾ (D) | 1,616,468 | 세입예산액(A) | 4,525,290 | 이번 년도 사용가능 금액 ¹⁾ (D) | 4,542,878 |
| 3분기 국가 수납 금액(B) | 571,754 | 3분기 국가 지출 금액(E) | 269,329 | 3분기 국가 수납 금액(B) | 1,031,770 | 3분기 국가 지출 금액(E) | 981,109 |
|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B/A) | 41.0 (51.3) | 이번 년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지출 비율(E/D) | 16.6 (16.8) |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B/A) | 22.8 (22.6) | 이번 년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지출 비율(E/D) | 21.5 (19.1) |
| 3분기 누계(C) | 796,898 | 3분기 누계(F) | 875,793 | 3분기 누계(C) | 3,562,148 | 3분기 누계(F) | 3,572,248 |
|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C/A) | 57.2 (65.1) | 이번 년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비율(F/D) | 54.1 (52.7) |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C/A) | 78.7 (76.7) | 이번 년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비율(F/D) | 78.6 (77.7) |

주: 1. () 안의 수치는 전년 동기 비율

2. 단위 미만 절사

1) 이번 년도 사용가능금액은 세출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 등 증감 금액을 의미(우리나라 예산현액에 해당)

출처: 일본 재무성, 「令和4年度第3-四半期予算使用の状況の概要」, 2023. 3. 7.

47)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Press Release,” 2023. 3. 22.,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money20230322a1.pdf>, 검색일자: 2023. 3. 26.

48) 미국 연방준비제도, “Transcript of Chair Powell’s Press Conference,” 2023. 3. 22., <https://www.federalreserve.gov/mediacenter/files/FOMCpresconf20230322.pdf>, 검색일자: 2023. 3. 26.

49)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지속적인(ongoing) 이자율 인상이라는 표현 대신, 안정적 이자율 인상(policy firming)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현재의 은행 파산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힘

50) 미국 연방준비제도,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2023. 3. 22.,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fomcprojtbl20230322.pdf>, 검색일자: 2023. 3. 26.

51) 일본의 2022회계연도는 2022. 4. 1. ~ 2023. 3. 31.로, 2022회계연도 3분기는 2022. 9. 1. ~ 2022. 12. 31.을 의미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황⁵²⁾ 발표(2023. 3. 7.)⁵³⁾

- 2022회계연도 3분기 일반회계 국가 수납금액은 57조 1,754억엔, 국가 지출금액은 26조 9,329억엔으로 세입액이 세출액을 30조 2,425억엔 초과
- 2022회계연도 3분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은 22.8%로 전년 동기 대비 0.2%p 상승하였으며, 이번 연도 사용가능금액 대비 국가 지출 비율은 21.5%를 기록

■ 일본 재무성, 2023회계연도 예산안 성립 발표 (2023. 3. 28.)⁵⁴⁾

- 일본 재무성이 지난 1월 23일 국회에 제출한 114조 3,812억엔(일반회계, 전년 당초예산 대비 +6.3%)규모의 예산안⁵⁵⁾이 정부안대로 성립
 - (기본방침) 2023년 예산은 고물가를 극복하면서 경제 재생 실현을 위해 중요한 정책과 제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세출) 일반세출 72조 7,317억엔(전년 당초예

산 대비 +8.0%),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16조 3,992억엔(전년 당초예산 대비 +3.3%), 국채비 25조 2,503억엔(전년 당초예산 대비 +3.7%)

- (세입) 조세 및 인지수입 69조 4,400억엔(전년 당초예산 대비 +6.4%), 기타 수입 9조 3,182억엔(전년 당초예산 대비 +71.4%), 공채금 35조 6,230억엔(전년 당초예산 대비 -3.5%)

- 기시다 총리는 2023회계연도 예산은 새로운 자본주의⁵⁶⁾의 실현, 어린이·육아지원 강화,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 신속한 예산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언급⁵⁷⁾



독일

[예산·결산 등]

- 독일 연방재무부, '2024년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의 기본 수치' 발표를 연기⁵⁸⁾

52) 예산사용현황(予算使用の状況)은 「재정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국회 및 국민에 대한 보고로서, 각 부처 등이 매월 일반회계의 세목별 조세 등의 수납 상황과 소관·조작·항별 지출 상황 및 특별회계 등의 수치 상황에 대해 보고한 내용을 재무성에서 분기별로 집계한 것

53) 일본 재무성, 「令和4年度第3・四半期予算使用の状況の概要」, 2023. 3. 7., https://www.mof.go.jp/policy/budget/report/budget_use/fy2022/04_3gai.html, 검색일자: 2023. 3. 9.

54) 일본 재무성, 예산서·결산서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https://www.bb.mof.go.jp/hdocs/bxss010br5.html>, 검색일자: 2023. 3. 28.

55)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 예산안 - 일본」, 2023. 3.을 참고(<https://www.kipf.re.kr/kor/Publication/ALL/kiPublish/ALL/view.do?serialNo=526979>, 검색일자: 2023. 3. 28.)

56) ① 성장전략, ② 분배전략, ③ 포용적 사회 실현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달성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성장전략은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전원 도시 국가구상 등 지방활성화, 탄소중립 실현, 경제안보 정책이 있으며, 분배전략으로는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는 임금 인상, 인적 투자 강화, 차세대 중산층의 유지가 있고, 포용적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남녀 경제활동 참가 및 여성 참여 증대, 고독·고립 대책, 저출산 대책·어린이 정책, 소비자 보호로 구성되어 있음

57) 일본 수상관방, 「令和5年度予算成立等についての会見」, 2023. 3. 28., https://www.kantei.go.jp/jp/101_kishida/statement/2023/0328kaiken.html, 검색일자: 2023. 3. 29.

58) Reuters, "German minister delays 2024 budget plans as coalition squabbles," 2023. 3. 10., <https://www.reuters.com/markets/europe/german-minister-delays-2024-budget-plans-coalition-squabbles-media-2023-03-09/>, 검색일자: 2023. 3. 27.; ZDF, "Lindner verschiebt Haushalts-Vorlage," 2023. 3. 10., <https://www.zdf.de/nachrichten/politik/finanzminister-lindner-haushalt-2024-100.html>, 검색일자: 2023. 3. 27.

- 독일은 통상 매년 3월 중순까지 연방 내각에서 예산안 편성의 기초가 되는 기본 수치(Eckwerte)⁵⁹⁾를 확정함
-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현재(2023. 3. 29. 기준) 연정 내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독일 내각의 기본 수치 확정이 지연되고 있음
 - 추후 발표 일정은 미정

[기타]

- 독일 연방하원,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부담금 부과 법안 승인(2023. 3. 2.)⁶⁰⁾
 - (주요 경과) EU가 규정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기금법’ 제정을 추진 중
 - 2023년 3월 2일, 독일 연방하원에서 동 법안이 승인됨(추후 연방상원의 승인 필요)
 - 2023년 3월 7일, 환경부가 부담금 세율과 자금 지급기준을 규정한 시행령(안)을 제시
 - (주요 내용)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조업체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기금의 자금을 공공 폐기물 처리 당국에 지급
 - (부담금 부과) 휴대용 플라스틱 용기, 플라스

틱 필터가 포함된 담배, 물티슈, 풍선, 기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부담금을 부과

- 부담금 금액은 기준 법령⁶¹⁾에 근거해 제품의 유형과 수량에 따라 결정
- (자금 지급) 기금에서 관련 공공 부문에 자금을 지급하여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
 - 기준 법령에서 자금 지급을 위한 기준 점수 체계(청소, 수거, 폐기, 인식 제고 조치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점수 부여)를 규정
- (운영 시기) 2024년 1월부터 부담금을 부과하고 2025년부터 자금을 지급
- (기금 관리) 연방 환경청이 ‘일회용 플라스틱 기금’의 조성과 관리 권한을 위임받음
 - 기금의 연간 수입은 최대 4억 5,000만유로로 추산

- 독일 연방통계청, 2022년 일반정부 재정적자 통계(잠정치) 발표(2023. 2. 24.)⁶²⁾
 - (재정수지) 독일의 2022년 일반정부 재정적자(순차입)는 전년 대비 329억유로 감소한 1,013억 유로를 기록(잠정치 기준)

59) 세출, 세입, 차입액 규모 등 포함

60) 독일 연방정부, “Gegen die Vermüllung mit Plastik,” 2023. 3. 3.,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einwegkunststoff-fonds-gesetz-2139250>, 검색일자: 2023. 3. 27.; 독일 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소비자보호부, “Bundesumweltministerium legt Vorschlag für Abgaben auf Produkte aus Einwegplastik vor,” 2023. 3. 7., <https://www.bmu.de/pressemitteilung/bundesumweltministerium-legt-vorschlag-fuer-abgaben-auf-produkte-aus-einwegplastik-vor>, 검색일자: 2023. 3. 27.; 독일 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소비자보호부, “Referentenentwurf einer Verordnung über die Abgabesaetze und das Punktesystem des Einwegkunststofffonds,” 2023. 3. 7., <https://www.bmu.de/gesetz/referentenentwurf-einer-verordnung-ueber-die-abgabesaetze-und-das-punktesystem-des-einwegkunststofffonds>, 검색일자: 2023. 3. 27.

61) 예: 1kg당 물티슈는 0.06유로, 담배 필터는 8.945유로, 음료 컵은 1.231유로 등

62) 독일 연방통계청, “Government finance: deficit of 101.3 billion euros in 2022,” press release, 2023. 2. 24., https://www.destatis.de/EN/Press/2023/02/PE23_071_813.html, 검색일자: 2023. 3. 27.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출이 감소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결과로 인한 새로운 부담이 발생해 재정적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
- 2022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 비율은 2.6%로 유럽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의 기준(3%)을 충족
-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167억유로 감소한 1,292억유로를 기록하였고 주정부, 기초자치단체, 사회보장 부문은 각각 124억유로, 88억유로, 67억유로의 재정흑자를 기록
- (수입) 2022년 일반정부 수입은 1조 8,208억유로로 전년 대비 6.4% 증가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과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2022년 조세수입은 8.0% 증가
 - 법인세는 11.1%, 소득세는 6.4%, 부가가치세는 10.8% 전년 대비 증가
- (지출) 2022년 일반정부 지출은 1조 9,221억유로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화의 영향을 받음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종료로 인해 보조금 지출은 34.8% 감소
 - 반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한 정부 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경상이전 지출은 25.4% 증가했고, 에너지 공급 보장을 위한 조치(LNG

<표 4> 독일의 일반정부 재정수지(잠정치)

(단위: 십억유로)

|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
| 일반정부 순용자(+)/순차입(-) | 53.2 | -147.6 | -134.3 | -101.3 |
| 일반정부 수입 | 1,615.8 | 1,569.1 | 1,711.7 | 1,820.8 |
| 일반정부 지출 | 1,562.6 | 1,716.6 | 1,846.0 | 1,922.1 |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National accounts - Revenue, expenditure, net lending/net borrowing of general government: Germany, years," <https://www-genesis.destatis.de/>, 검색일자: 2023. 3. 27.

터미널 건설, 에너지 회사 지원 등)의 영향으로 자본이전도 34.2% 증가

- 국제협력 관련 서비스 지출은 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37.2% 증가했고 이자지출 역시 25.8%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남



프랑스

[예산·결산 등]

- 프랑스 의회, 연금개혁안 최종 채택(2023. 3. 20.)⁶³⁾
 - 2023년 1월 23일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가 제출한 사회보장 부문 수정예산법안(Projet de loi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PLFRSS 2023)이 3월 20일 의회에서 최종 채택
 - 사회보장 부문 수정예산법안은 퇴직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포함

63) 프랑스 공공정보서비스 사이트(vie publique),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2023. 2. 20., <https://www.vie-publique.fr/loi/287916-reforme-des-retraites-2023-projet-de-loi-plfss-rectificatif>, 검색일자: 2023. 3. 21.

- 한 연금개혁안을 골자로 함⁶⁴⁾
- 또한 연금 100% 수령을 위한 보험료 납입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연장하고 최저 연금 수령액을 최저 임금의 75%에서 85% 수준인 월 1,200유로로 인상하는 내용 등을 포함
 - 3월 15일, 양원합동위원회(Commission Mixte Paritaire)가 최종적으로 연금개혁법안 최종안에 합의⁶⁵⁾
 - 3월 16일, 상원에서 해당 법안 통과⁶⁶⁾
 - 3월 16일 하원 표결 전, 하원 논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조항 발동⁶⁷⁾
 - 정부 불신임안이 부결됨에 따라 연금개혁안을 담은 사회보장 부문 수정예산법안은 「헌법」 제49조3항에 따라 3월 20일 의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간주⁶⁸⁾
 - 3월 21일부터 헌법위원회에서 동 법안의 최

중 검토 진행⁶⁹⁾

- 한편,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노조 및 시민의 불만이 증폭되어 3월 15일까지 8번에 걸친 반대시위가 진행⁷⁰⁾
- 하원 표결 없이 입법 진행을 결정한 이후 국민 반감이 더욱 커져 3월 23일 9차 반대시위는 프랑스 전역 250여개 지역에서 내무부 추산 108만명, 노조 추산 350만명이 참여했고, 이후에도 반대시위 및 총파업이 지속될 전망⁷¹⁾



영국

[예산·결산 등]

- 영국 재무부, 2022-23회계연도 중앙정부 추가경정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s)⁷²⁾ 의회 제

64) 연금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재정동향」, 2023. 1., pp. 35~36 참고(<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5871>)

65) 프랑스 의회,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2023. 3. 15.,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6/dossiers/plfrss_pour_2023, 검색일자: 2023. 3. 21.

66) 프랑스 상원, “Réforme des retraites(PLFRSS pour 2023),” 2023. 3. 16., http://www.senat.fr/espace_presse/actualites/202301/reforme_des_retraites_plfrss_pour_2023.html, 검색일자: 2023. 3. 21.

67) 프랑스 의회, “Texte sur lequel le Gouvernement a engagé sa responsabilité, en application de l’article 49, alinéa 3, de la Constitution,” 2023. 3. 16., <https://www2.assemblee-nationale.fr/static/16/pdf/950-texte-49-3.pdf>, 검색일자: 2023. 3. 21.

68) 프랑스 의회, “Réforme des retraites(PLFRSS pour 2023): rejet de deux motions de censure et adoption du texte(lecture CMP),” 2023. 3. 20.,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actualites-accueil-hub/reforme-des-retraites-plfrss-pour-2023-rejet-de-deux-motions-de-censure-et-adoption-du-texte-lecture-cmp>, 검색일자: 2023. 3. 21.

69) 프랑스 헌법위원회, 2023-849DC, 2023. 3. 21., <https://www.conseil-constitutionnel.fr/decisions/affaires-instances?id=32246>, 검색일자: 2023. 3. 27.

70) Le monde, “Grève du 15 mars: 480 000 manifestants en France selon le ministère de l’intérieur, 1,7 million selon la CGT,” 2023. 3. 15., https://www.lemonde.fr/politique/live/2023/03/15/greve-du-15-mars-en-direct-accord-sur-le-projet-de-reforme-des-retraites-en-commission-mixte-paritaire-macron-recoit-borne-et-les-ministres-concernes-ce-soir_6165525_823448.html, 검색일자: 2023. 3. 21.

71) Le monde, “Manifestations du 23 mars: retour au calme après une soirée émaillée d’incendies et de heurts à Paris,” 2023. 3. 24., https://www.lemonde.fr/politique/live/2023/03/24/manifestations-du-23-mars-en-direct-retour-au-calme-apres-une-soiree-emailliee-d-incendies-et-de-heurts-a-paris_6166641_823448.html, 검색일자: 2023. 3. 27.

72) 본 세출예산안에서 확정된 지출권한을 수정하기 위해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통상 매년 2월에 제출되고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이 발표되기 전인 3월에 승인. 촉박하고 긴급한 추가 지출이 요구되어 통상적인 세출예산 과정을 기다릴 수 없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허용되는 “특별 추가경정예산(Out-of-Turn Supplementary Estimates)”과 구분

<표 5> 영국의 2022-23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백만파운드)

| 구분 | 2022-23 현재 계획 ¹⁾ (a) | 2022-23 조정 규모 (b) | 2022-23 수정 계획 (a)+(b) |
|--|------------------------------------|----------------------|--------------------------|
| 부처별지출한도(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 | 451,446 | 19,744 | 471,190 |
| 연간관리지출(Annually Managed Expenditure) | 431,836 | -25,919 | 405,917 |
| 총 순예산(Total Net Budget) | 883,282 | -6,175 | 877,107 |
| 총 비예산 지출(Total Non-Budget Expenditure) | 85,124 | 4,188 | 89,311 |
| 총지출(Total Resource and Capital in Estimates) | 968,406 | -1,987 | 966,419 |
| 현금주의 조정(Resource to cash adjustments) | -179,306 | -22,510 | -201,816 |
| 총 순현금 소요액(Total Net Cash Requirement) | 789,100 | -24,497 | 764,603 |

주: 1) 특별 추가경정예산(2022. 10.) 기준

출처: HM Treasury, *Central Government Supply Estimates 2022-23 Supplementary Estimates*, 2023. 2. 21., Table 1.

출(2023. 2. 21.)⁷³⁾

- 2022-23회계연도 중앙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지출은 현재 계획(특별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 20억파운드 감소한 9,664억파운드로 수정
 - 부처별 지출한도(DEL)⁷⁴⁾는 4,712억파운드, 연간관리지출(AME)⁷⁵⁾은 4,059억파운드로 현재 계획 대비 각각 197억파운드, -259억파운드 조정
 - 보건·사회복지부에 대한 추가 자금,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 생활비 압력 완화를 위

한 자금 지원 등에 따른 변동을 반영

- 총 비예산 지출⁷⁶⁾은 893억파운드로 현재 계획 대비 42억파운드 증액
- 총 순현금 소요액⁷⁷⁾은 7,646억파운드로 현재 계획 대비 245억파운드 감액

■ 영국 재무부, 2023 봄 예산안(Spring Budget 2023) 발표(2023. 3. 15.)^{78), 79)}

- 경제전망
 - (경제성장률) 실질 GDP 성장률은 2023년 -0.2%, 2024년 1.8%, 2025년 2.5%로 전망

73) HM Treasury, "Supplementary Estimates 2022-23," 2023. 2. 2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upplementary-estimates-2022-23>, 검색일자: 2023. 2. 22.; UK Parliament, "Revised Government spending plans for 2022/23," 2023. 3. 1.,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cbp-9730/>, 검색일자: 2023. 3. 14.

74) Spending Review에서 확정된 3~4년 기간에 대한 부처별 지출 상한으로 관리되는 통제 가능한 지출

75) 사회보장지출, 세액공제 등 주요 주도적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로, 예측이나 통제가 비교적 어려운 지출

76) 비부처공공기구(NDPBs)에 대한 보조금(grant-in aid)과 같이 세출예산을 통해 승인하지만 부처별 지출한도와 연간관리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

77) 예산의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처에서 필요한 현금 규모의 합계

78) HM Treasury, "Spring Budget 2023," 2023. 3. 1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pring-budget-2023>, 검색일자: 2023. 3. 16.; _____, "Chancellor unveils a Budget for growth," 2023. 3. 15.,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unveils-a-budget-for-growth>, 검색일자: 2023. 3. 16.;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March 2023," 2023. 3. 15., <https://obr.uk/efo/economic-and-fiscal-outlook-march-2023/>, 검색일자: 2023. 3. 16.

79) 2022년 9월 감세조치를 포함한 '2022년 성장계획' 발표 후 금융시장 혼란이 심화되자 정부는 주요 정책들을 철저히하고 통상 가을에 예정된 예산안 발표를 2023년 봄으로 연기한 바 있음

<표 6> 영국의 주요 경제전망

(단위: %)

| 구분 | 실적 | | 전망 | | | | |
|-----------------|------|------|------|------|------|------|------|
|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 실질 GDP 성장률 | 7.6 | 4.0 | -0.2 | 1.8 | 2.5 | 2.1 | 1.9 |
| 소비자물가 (CPI) 상승률 | 2.6 | 9.1 | 6.1 | 0.9 | 0.1 | 0.5 | 1.6 |
| 실업률(LFS) | 4.5 | 3.7 | 4.1 | 4.4 | 4.3 | 4.2 | 4.1 |
| 고용률 (4분기 기준) | 60.6 | 60.8 | 60.2 | 60.1 | 60.2 | 60.3 | 60.4 |

출처: HM Treasury, "Spring Budget 2023," 2023. 3, Table 1.4. 발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May 2023*, 2023. 3., Chart 2.15의 데이터

- (물가) 2022년 10월 11.1%로 정점을 찍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23년 6.1%에서 2024년

0.9%로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노동시장) 경제성장률이 약해짐에 따라 실업률은 2023년 4.1%에서 2024년 4.4%로 상승하지만,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돼 2027년에는 4.1%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재정전망

- (수입) 공공 부문 경상수입은 2022-23회계연도에 1조 200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11.1% 증가하고, 2023-24회계연도에 1조 580억 파운드로 전년 대비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출) 공공 부문 총관리지출은 2022-23회

<표 7> 영국의 주요 재정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GDP 대비 %)

| 구분 | 실적 | | 전망 | | | | |
|----------------------------------|---------|---------|---------|---------|---------|---------|---------|
| | 2021-22 | 2022-23 | 2023-24 | 2024-25 | 2025-26 | 2026-27 | 2027-28 |
| 수입·지출 | | | | | | | |
| 공공 부문 경상수입 | 917.7 | 1,020 | 1,058 | 1,104 | 1,137 | 1,184 | 1,230 |
| (GDP 대비 %)(a) | (39.3) | (40.7) | (41.1) | (41.4) | (41.2) | (41.5) | (41.7) |
| 총관리지출(TME) | 1,040 | 1,172 | 1,189 | 1,189 | 1,214 | 1,247 | 1,280 |
| (GDP 대비 %)(b) | (44.5) | (46.8) | (46.2) | (44.6) | (44.0) | (43.8) | (43.4) |
| 공공 부문 경상지출(c) | 40.0 | 42.2 | 41.0 | 39.6 | 39.1 | 39.2 | 38.9 |
| 공공 부문 순투자(d) | 2.1 | 2.3 | 2.9 | 2.7 | 2.5 | 2.3 | 2.1 |
| 감가상각(e) | 2.4 | 2.3 | 2.3 | 2.3 | 2.3 | 2.4 | 2.4 |
| 재정적자 | | | | | | | |
| 공공 부문 순차입(b-a) | 5.2 | 6.1 | 5.1 | 3.2 | 2.8 | 2.2 | 1.7 |
| 경기조정 순차입 | 6.1 | 6.8 | 4.5 | 2.4 | 2.4 | 2.1 | 1.7 |
| 경상예산 적자(c+e-a) | 3.1 | 3.7 | 2.3 | 0.5 | 0.3 | 0.0 | -0.4 |
| 채무 | | | | | | | |
| 공공 부문 순채무(중앙은행 제외) ¹⁾ | 83.9 | 88.9 | 92.4 | 93.7 | 94.6 | 94.8 | 94.6 |
| 공공 부문 순채무 ¹⁾ | 96.9 | 100.6 | 103.1 | 102.4 | 99.1 | 97.6 | 96.9 |

주: 1) 3월말 기준, GDP는 3월 말에 중심화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May 2023*, 2023.3, Table A.5, Table A.9 발췌

계연도에 1조 1,720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12.7% 증가하고, 2023-24회계연도에 1조 1890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공공 부문 순차입) 에너지 관련 지원정책이 종료되고 물가상승률이 0%에 근접함에 따라 GDP 대비 공공 부문 순차입은 2023-24 회계연도에 5.1%, 2024-25회계연도에 3.2%로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공공 부문 순채무(중앙은행 제외)) 중앙은행을 제외한 GDP 대비 공공 부문 순채무는 2026-27회계연도에 94.8%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재정 기초) 단기적으로 가계 및 기업을 지원하고 중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적자 감소에 집중하면서 중앙은행의 물가상승률 목표(2%)를 지원하는 등 균형적 기초를 보임

● (정책 방향) 세 가지 핵심 우선순위, 즉 물가상승률 반감(halving inflation), 경제성장(growing the economy), 국가채무 감축 이행(getting debt falling)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

- (물가상승률 반감) 에너지 요금 보증제(Energy Price Guarantee) 연장 등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가격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시스템에 투자

- (경제성장) 고용, 교육, 기업, 지역 균형발전의 4가지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계획

- (국가채무 감축) 설정한 재정 목표가 순조롭게 달성되고 있음에 따라, 계속해서 책임감 있게 지출하고 효율적인 절감을 통해 물가상승 압력을 관리하고 주요 공공 서비스 및 정부 우선순위에 지출을 집중

• (채무준칙) GDP 대비 공공 부문 순채무(중앙은행 제외) 비율을 전망기간의 다섯 번째 연도(2027-28회계연도)까지 감축(fiscal mandate)

• (재정수지준칙) GDP 대비 공공 부문 순차입 비율이 전망기간의 다섯 번째 연도에 3% 초과 금지(supplementary target)

• (복지지출 상한) 재무부가 사전에 설정한 복지지출 한도와 마진 이내로 관리⁸⁰⁾

• (재정 목표 성과 분석) 채무준칙과 재정수지준칙은 각각 65억파운드, 392억파운드의 마진으로 충족될 것으로 분석되나, 복지지출 상한은 41억파운드가 초과되면서 미충족될 것으로 전망

[기타]

■ 영국 재무부, '2022 재정위험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2022 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 Re-

80) 복지지출 상한은 2021 가을 예산안 및 지출검토(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2021)에서 재설정되었고, 이는 2022년 1월 10일 하원에서 승인. 이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재정 중립적인 분류 변경(fiscally neutral classification changes)"에 맞게 조정(<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sn06852/>, 검색일자: 2023. 3. 27.)

port)⁸¹⁾에 대한 정부 대응 발표(2023. 3. 15.)⁸²⁾

- (개요) 2022년 예산책임청(OBR)이 발표했던 공공재정에 대한 주요 위험요인 분석과 관련해 지속가능하고 미래 충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 조치에 대해 설명
- (지속가능한 재정전략) 정부는 공공재정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준칙에 따라 정책을 결정
 - (우선순위) 정부는 경제성장과 물가상승률 반감, 채무 감축을 우선순위로 설정
 - (재정준칙) 전망기간 5년 차까지 공공 부문 순채무(중앙은행 제외)의 GDP 대비 비율 감소, 순차입의 GDP 대비 비율 3% 미만 달성
- (재정위험 관리) 정부는 국제적인 모범 사례⁸³⁾를 모델로, 식별(identify), 공개(disclose), 완화(mitigate), 대비(provision), 수용(accommodate)의 5단계에 따라 재정위험을 관리
 - (식별) 위험의 원인, 재정 노출 규모, 구체화 가능성을 식별
 - (공개) 위험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의회와 대중에게 재정 위험을 공개
 - (완화) 다른 정책 목표를 저해하지 않고 비용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위험을 완화
 - (대비) 완화를 수는 없지만 규모와 시기가 비교적 확실한 위험에 대비
 - (수용) 사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기에는 규모나 시기가 너무 불확실한 위험을 수용
- (주요 재정위험 대응) 예산책임청은 2022년 보고서에서 공공재정의 세 가지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지정학적 긴장 고조, 에너지 가격 상승, 장기 재정 압력을 제시하였고, 정부는 이에 대응
 - (지정학적 긴장 고조) 중국의 영향력 증가와 국제적 공세가 2020년대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요인이 될 수 있고, 러시아는 영국 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
 -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지정학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인식한 정부는 영국의 재래식 전력과 핵 전력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2년간 49억파운드의 국방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
 - 장기적으로는 재정 및 경제 상황이 허용하는 한 GDP 대비 2.5%를 국방에 투자하며, 이 추가적인 국방지출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달되어 전망기간 내 채무가 여전히 감소하도록 보장
 - (에너지 가격 상승) 높은 에너지 가격이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이러한 부담이 물가상승 압력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노력
 - 에너지 가격 충격 완화를 위해 에너지 가

81) 2022년 7월에 예산책임청(OBR)은 '재정 위험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공공재정의 세 가지 잠재적 위험요인(지정학적 긴장 고조, 에너지 가격 상승, 장기 재정 압력)에 초점을 두고 분석(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2. 7. 참고)

82) HM Treasury, "Government response to the 2022 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 Report," 2023. 3. 1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overnment-response-to-the-2022-fiscal-risks-and-sustainability-report>, 검색일자: 2023. 3. 16.

83) IMF, *Analyzing and managing fiscal risks – best practices*, 2016

격 보증제(Energy Price Guarantee)를 통해 가구당 연간 평균 2,500파운드 한도에서 에너지 요금을 지불(2023년 7월까지 연장 시행)

- 에너지 지원 계획의 재정비용 중 일부는 원유 및 가스 생산자와 에너지업체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쇄

- (장기 재정 압력) 인구고령화,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구조적 변화는 공공지출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과세기반에 위협을 초래함에 따라 이에 대비

- 사람들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고 건강상 문제나 육아 관련 장벽을 제거하여 노동시장의 비경제활동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공급을 늘려 인구고령화로 인한 재정 압박을 관리

-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이는 연료세 수입의 감소를 의미함에 따라 정부는 2025년 4월부터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동차 소비세 부담의 책임이 있다고 발표하였고, 관련 정책을 계속 검토 중

■ 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MPC),⁸⁴⁾ 기준금

리 인상(4 → 4.25%) 결정(2023. 3. 23.)⁸⁵⁾

● 경제현황 논의

- (국제경제) 세계 GDP는 2022년 4분기 0.3% 증가하였고, 2023년 1분기 0.4% 성장 예상

- 유로지역의 수요 상승을 반영해 2월 통화정책보고서 전망⁸⁶⁾ 대비 상황 조정된 수치

- (통화·금융) 실리콘밸리은행 파산과 UBS의 크레디트 스위스은행 인수 결정으로 세계 금융시장은 불안정한 모습

- 금융정책위원회(FPC)⁸⁷⁾는 영국은행 시스템에 대해 강력한 자본과 강력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고, 여러 경제 시나리오에서 경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평가

- (수요·생산량) 영국의 실질 GDP는 2022년 4분기에 변동이 없고, 2월 통화정책보고서 전망 대비 다소 약세

- (공급·물가)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22년 12월 10.5%에서 2023년 1월 10.1%로 하락하였으나 2월 다시 10.4%로 상승

- 예상 대비 강했던 물가상승은 대부분 의류 및 신발 가격 상승으로 설명되나, 이는 변동이 심한 경향이 있어 지속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

● (금리 인상 결정) 영국 통화정책위원회는 2023년

84) Monetary Policy Committee

85) Bank of England, "Bank Rate increased to 4.25% - March 2023," 2023. 2. 23., <https://www.bankofengland.co.uk/monetary-policy-summary-and-minutes/2023/march-2023>, 검색일자: 2023. 3. 24.

86) 2022년 3분기 0.3%, 4분기 0.1% 전망

87) Financial Policy Committee: 영국은행 내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담당

3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에서 4.25%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

- 기준금리는 2021년 12월 0.1%에서 0.25%로 인상된 이후 2022년 8차례에 걸쳐 총 3.25%p 인상되었고, 지난 2월에 0.5%p, 이번 3월 회의에서 다시 0.25%p 인상되어 11회 연속 인상

재정포럼

2023년 4월호 통권 제322호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행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편집위원장 원중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편집위원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창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편집간사 장정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편집·제작 이현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월간 재정포럼

2023년 4월 14일 발행 / 통권 제322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2 / **E-mail:** pub@kipf.re.kr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디자인·인쇄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2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로 만나는
내 손안의 재정포럼